

# 역대 선거결과에 나타난 지역성과 정치문화

온만금

## 1. 머리말

한국은 어느 사회보다 인종이나 언어 또는 문화적 차원에서 매우 동질적인 사회이다.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해 왔고 공통의 문화적 유산을 축적시켜 온 단일민족이다. 이렇듯 여러 차원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지역주의가 표출됨으로써 지역주의는 전사회적 관심사이자 정치적, 사회적 문제의 중요한 한 원천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지역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주요 쟁점이나 정책에 대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태도를 나타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의 자주성을 추구하는 집단 의식을 말한다. 과거 한국사회에는 이러한 집단 의식으로서 지역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지역편견이나 차별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십조(訓要十條) 8조에는 “차령 이남과 공주강 밖의 산형과 지세가 배역하고 인심 역시 그러하니 … 이 지역 주민들은 비록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벼슬에 올라 공무를 하지 못하게 하라”(車嶺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並趨背逆 人心亦然 … 雖其良民 不宜使在位用事)고 명하여 후백제 지역을 차별하였다(민족문화추진회, 1968).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도선의 풍수지리설에 따라 통일과

---

온만금 육사 교수(사회학). 최근 논문으로 「소수정당의 출현과 존속에 관한 이론」(1999), 저서로는 『북한학』(2000)이 있음.

정에서 끈질겼던 후백제의 긴 저항에 대한 왕건의 원한과 경계심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조만큼 심하지는 않았으나 지역차별은 지속되었다. 태조 이성계는 함경도 출신들의 기질이 드세다하여 요직에 등용하는 것을 억제하였으며, 이후 그 대상이 이북 전역으로 확대되었다(고흥화, 1989). 한편,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이 전라도의 인심에 대해 하문하자 맹현이 “전라도 인심이 박악하여 도적이 군기하며 하극상의 풍조가 있어서 풍속의 교화는 백년이 아니면 고칠 수 없으니 위정자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하였으며(송정현, 1971: 27; 고흥화, 1989: 56), 특히 정여립의 난 이후 호남출신의 관직등용을 제한하였다. 이렇듯 과거 지역주의적 성향은 중앙의 핵심 지배층 내에서 행해진 지역편견이나 지역차별이 전부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역편견이나 차별의 수준을 넘어서 각 지역의 집단 의식이 형성되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연구들이 지역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사회적 행위를 파악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지역주의가 과연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본래 지역주의는 고정된 것이라기보다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이와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런 시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장기간에 걸쳐 지역주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둘째로, 그런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역주의에 대한 시대적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나타난 지역주의의 추이와 양상 그리고 그 결과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선거결과는 각 후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 표출되는 장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적절히 분석하면 지역주의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이 논문에서는 먼저, 역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별 지지율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지역주의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를 세분하여 각 지역과 후보나 당, 그리고 각 선거에 작용한 지역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를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기존의 연구 고찰

전통적인 근대화론에 따르면, 전통사회가 근대화됨에 따라 자연이나 혈연과 같은 전근대적 요소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사회 성원들이 새로운 규범과 조직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여 안정되고 통합된 정치공동체를 유지하게 된다(Inkeles and Smith, 1974). 이런 예측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지역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어 바람직하건 안하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주의가 강한 힘을 발휘해 왔다.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어떤 연구에서는 지역갈등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주의 현상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 분야에 실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불균형 개발과 엘리트 층원에서 편중된 인사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김만흠, 1987: 22~23; 김문조, 1992: 153~158). 기존의 연구들은 노동시장에서 구조화된 차별이나 불균형적 발전 또는 편중된 인사정책이 지역주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여, 지역주의는 주로 차별받는 지역의 집단적 반응으로 파악하고 있다(Hechter, 1974; 1975; Jordan, 1994). 한편, 다른 논문에서는 불확실한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시적 동기에서 자연이나 학연을 바탕으로 인력을 충원한 결과, 엘리트 층원에서 지역격차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김용학, 1992: 293).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편견의 불식, 지역적 통합과 결속(문석남, 1984: 204~205), 지방자치의 실시(백완기, 1992: 404), 정당정치의 정

착(안병만, 1992: 409), 균형적인 지역 종합개발, 인사정책을 포함한 각종 차별 철폐(김익기, 1992: 402)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지역주의가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투표행위 및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투표행위에 대한 지역의 영향이 너무 강하여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히고(차종천, 1989: 157), 다른 연구 역시 후보나 정당의 선택에서 투표자의 지연이 다른 어느 요소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신광영, 1990: 349). 또한 선거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에서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은 연고지역에 가까울수록 대체로 높아진다는 견해도 있다(김형국, 1991: 347). 앞서 밝혔듯이 이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역대 선거에 나타난 지역주의의 추이와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 3. 역대 선거결과에 대한 검토

#### 1)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는 모두 열 여섯 차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홉 번은 직접선거였고 일곱 번은 국회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선거 가운데 자유당 정권의 조직적인 부정으로 무효화된 1960년의 선거를 제외하고, 1공화국에서 2회, 3공화국 3회, 6공화국 2회를 포함, 총 8회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기존의 선거결과는 각 시도별로 정리되었는데 광역시가 인접 도로부터 분리된 경우 그에 따라 선거결과도 세분화시켰다. 그러나 광역시는 인접 도와 지지성향이나 투표율이 유사하므로 지역주의의 추이를 검토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서울 및 도별 여당후보와 주요 야당후보의 지역별 지지율과 전국 지지율을 정리함으로써 선거결과를 재정리하였다.

<표 1> 역대 주요 대통령 후보의 지역별 및 전국 지지율과 편차

입후보자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편차	전국
52이승만	82.3	88.0	92.4	86.7	82.4	65.9	73.6	75.0	55.4	75.7	11.2	74.6
52조봉암	10.3	6.0	2.7	5.8	7.3	15.4	8.9	10.6	23.0	6.4	5.8	11.4
56이승만	63.3	77.1	90.8	86.1	77.1	60.2	72.1	55.3	62.3	81.9	12.0	70.0
56조봉암	36.7	22.9	9.2	13.9	22.9	39.8	27.9	44.7	37.7	12.1	11.6	27.6
63박정희	30.2	33.1	39.6	39.8	40.9	49.4	57.2	55.6	57.6	69.9	12.4	46.4
63윤보선	65.1	56.9	49.1	48.2	49.4	41.5	35.9	36.1	35.3	22.3	13.2	45.1
67박정희	45.2	41.0	51.3	46.6	45.4	42.3	44.6	64.0	67.3	56.5	9.8	48.8
67윤보선	51.3	52.6	41.7	43.6	46.8	48.9	46.6	26.4	25.5	32.1	10.3	40.9
71박정희	40.0	48.9	59.8	57.3	53.5	35.5	34.4	75.6	66.9	56.9	13.5	51.1
71김대중	59.4	49.5	38.8	40.7	44.4	61.5	62.8	23.3	32.1	41.4	13.1	45.3
87노태우	29.9	41.0	59.3	46.9	26.2	14.1	7.3	68.1	36.6	49.8	20.3	36.6
87김영삼	29.1	28.1	26.1	28.2	16.1	1.5	1.0	26.5	53.7	26.8	16.4	28.0
87김대중	32.6	22.1	8.8	11.0	12.4	83.5	91.3	2.5	6.9	18.6	33.5	27.0
87김종필	8.2	8.7	5.4	13.5	45.0	0.6	0.3	2.4	2.6	4.5	3.9	8.1
92김영삼	36.4	36.6	41.5	38.3	36.3	5.7	3.5	62.5	72.8	40.0	22.5	42.0
92김대중	37.7	31.9	15.5	26.0	28.6	89.1	93.4	8.8	10.9	32.9	30.4	33.8
92정주영	18.0	22.7	34.1	23.9	24.5	3.2	1.8	17.3	8.9	16.2	9.6	16.3
97김대중	44.9	38.6	23.8	37.4	46.7	92.3	96.0	13.1	13.6	39.8	28.7	40.3
97이회창	40.9	35.2	43.2	30.8	26.3	4.5	2.5	67.3	53.9	35.9	19.9	38.7
97이인제	12.8	23.2	30.9	29.4	25.1	2.1	1.1	17.5	30.0	20.1	10.9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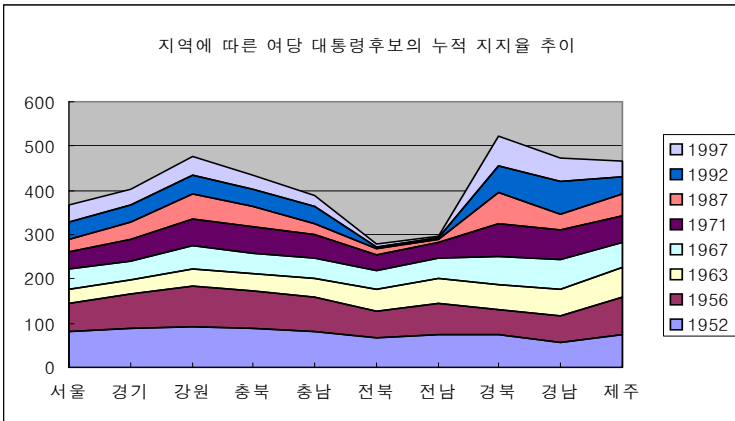
1공화국 하에서 실시한 1952년 선거에서는 국가적 지도자로 부상한 이승만 후보가 모든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었고 지역별 편차도 크지 않았다. 1956년의 선거에서도 이승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 평균 70%이고 경북지역의 지지율이 이전보다 20%정도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았다. 3공화국 하에서는 집권 여당에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와 두 번, 김대중 후보와 한 번 겨루었다. 선거 결과, 1963년의 선거에서 박 후보는 제주·경남북·전남북 등 남쪽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높았고, 윤 후보는 서울과 경기·강원·충남북을 포함하여 북쪽으로 갈수록 우세하여 남북의 지지성향이 구분되었다. 그 후 196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수 지역에서 박정희 후

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특히 경남북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지 추세와는 달리, 과거 박후보에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호남지역은 지지율이 10% 이상 내려갔다.

특히,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경쟁한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서울과 경기, 전남북에서 우세하였고 박정희 후보는 강원·충북·충남 및 특히 경북·경남지역에서 우세하여 동서를 축으로 한 지역별 지지성향이 구분되었으나, 당시의 지지를 격차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지역별 지지율 격차는 엄청난 것이다. 1987년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후보가 격돌한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별 지지율 패턴이 크게 갈리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태우 후보는 특히 경북·강원·제주지역에서, 김영삼 후보는 경남지역에서, 김대중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각각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지역별 편차가 훨씬 심해졌다. 1992년 선거에서 여권의 3당 합당 이후 대표주자였던 김영삼 후보는 호남지역에서는 지지율이 한 자리 수였으나 다른 지역, 특히 경남북의 지지율이 높았으며, 김대중 후보는 호남지역에서만 9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1997년 선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공천으로 김대중 후보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충남북·제주, 특히 전남북에서 우세하고 이회창 후보는 강원과 특히 경남북에서 우세하여 지역에 따른 지지율 편차가 역시 큰 것을 알 수 있다.

각 후보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만으로 장기간의 지역별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을 <그림 1>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그림의 맨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최근의 여당 후보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을 표시하였는데, 1970년대까지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는 강원과 경북을 축으로 여당 후보에 대한 누적 지지율이 약간 높아졌고, 1971년의 경우 서울 및 전남북의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선거에서는 강원과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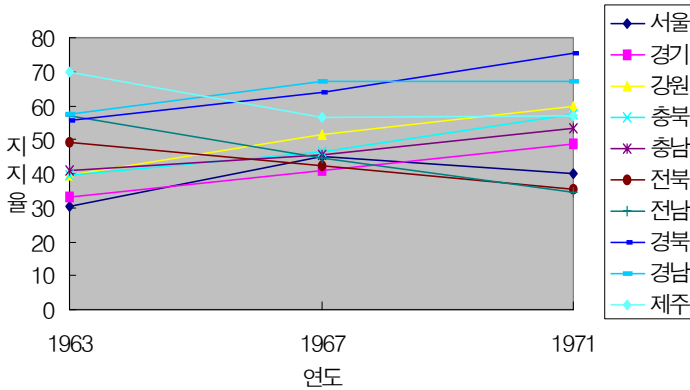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에 따른 여당 대통령후보의 누적 지지율 추이

북 지역의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히 높아진 반면, 충청북과 특히 전남북의 지지율은 극히 낮아져 지역간 격차가 심해졌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주의적 성향은 1960년대 선거의 경우 남북을 축으로 나타났는데, 1971년과 특히 1987년 이후 선거에서는 동서를 축으로 한 호남지역과 특히 경남북 및 강원지역의 지지성향이 큰 격차를 보임으로써 지역주의의 기본 축이 남북으로부터 동서로 바뀌었다. 1980년대 이후 선거에서 지역주의적 성향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세 번 이상 입후보한 경우는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 둘 뿐이다. 두 후보 모두 강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한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배척을 받고 있어서 두 후보의 지역별 지지율 추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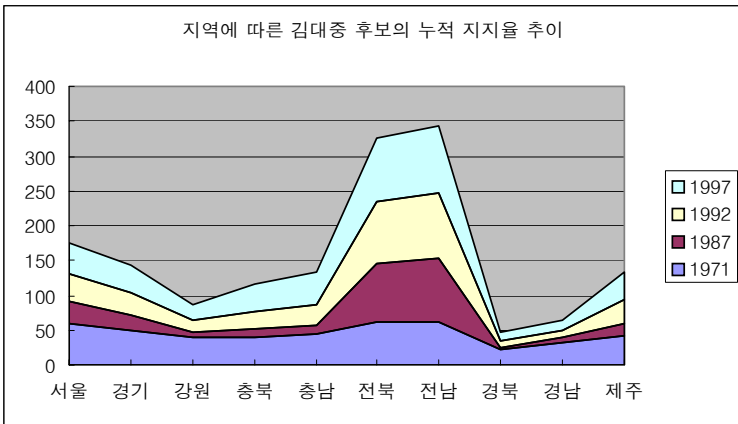
<그림 2> 지역에 따른 박정희 후보의 연도별 지지율 추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번의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 추이는 1963년 선거에서 지지율이 매우 높았던 제주·경남북·전남북 가운데, 과거 50%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전남북(제주 포함)의 지지율이 1967년 선거에서는 10%이상 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경기지역 다음으로 지역별 지지율이 낮아졌고, 1971년에는 더욱 하락하여 전남북이 전국 최하위의 지역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경남북의 지지율은 이와 대조적으로 급상승하여 지역간 지지율 편차가 심화되었다. 이는 공화당 정부의 4년간 통치에 대해 영남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호남지역 주민들은 다수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박 후보에 대한 호남지역의 지지 하락은 그 동안 여러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의 소외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김대중 후보는 1971년 이후 네 번의 선거에 출마한 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림 3>에는 1971년 이래 1997년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지역별 누적지지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 지역에 따른 김대중 후보의 누적 지지율 추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1년의 선거에서 김 후보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아 지역별 지지율 편차가 10%대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 이후 선거에서는 호남지역의 지지율이 전국 평균의 거의 3배 내외로 높아진 반면, 다른 지역, 특히 영남지역의 지지율은 한 자리수로 낮아져 지역간 편차가 매우 심해졌다. 1992년의 선거 역시 지역별 지지율 편차가 커져 전남북에서는 90% 내외의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경남북에서는 10% 내외의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호남지역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경남북 및 강원도는 물론 김대중 후보의 주요 지지기반이었던 서울의 지지율도 낮아졌다. 1997년 선거에서는 자민련과 국민회의의 공조를 계기로 여러 지역의 지지율이 높아졌으나, 영호남 지역의 지지율 패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 나타난 누적 지지율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호남지역과 다른 지역의 지지율은 대체로 반비례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호남지역의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았던 1971년에는 타 지역의 김 후보 지지율 역시 고른 반면, 그 이후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런 지역별 지지율 격차는 지역 후보간의 대결구도나 지역차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1987년 이후 김 후보에 대한 호남지역의 높은 지지율은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5·18과 같은 역사적 사건 이후 8년만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지역 주민들의 한풀 이식 몰표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며, 다른 지역의 지지율 하락은 호남지역의 강한 지역성에 대한 견제심리나 거부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 점은 어느 지역이 과반수를 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 후보가 특정지역의 절대적 지지를 받거나 특정지역을 대표하고 있다고 인식될 때, 다른 지역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전체 지지율은 도리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다.

## 2)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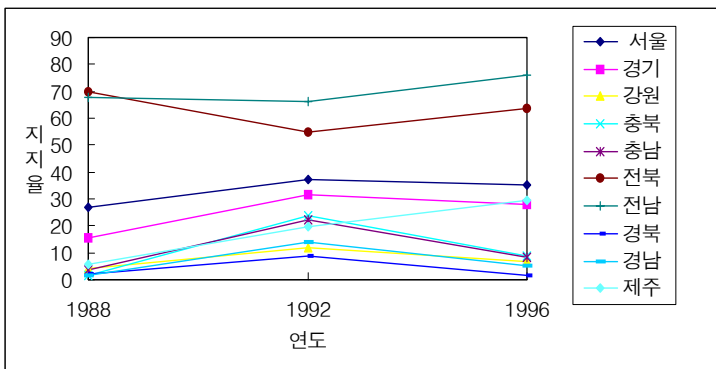
역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헌의회 선거이래 모두 열 다섯 차례 있었으며, 1공화국이래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유신 이후에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가 6공화국 이후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다. 주요 정당으로는 1공화국에서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3공화국에서는 공화당과 신민당이, 그리고 5공화국에서는 민정당과 민한당·신민당·통일당·평민당 등이, 그 이후에는 민자당(신한국당으로 개명)과 민주당·국민당·국민회의·자민련 등이 출현하는 등, 새로운 정부의 출현과 함께 주요 정당 체제 자체가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표 2>에는 여당이 후보를 내기 시작한 3대 국회의원 선거이래 여당과 주요 야당의 전국 및 지역별 지지율과 편차 그리고 의석비율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전까지 각 지역별 지지율에서 뚜렷한 격차를 발견하기 어렵다. 표의 마지막 셋째 열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0년 선거의 지역별 편차가 11.7로 지역별 지지율에 약간 편차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강원, 충북, 전북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간 편차는 심하지 않았

<표 2> 주요 당의 지역별 및 전국 지지율과 의석율 및 편차

년도	당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편차	지지%	의석%
1954	여당	26.3	43.7	78.8	39.8	43.8	28.1	29.6	36.2	36.8	30.4	9.2	36.8	56.2
	야당	12.6	5.2	0.0	4.3	2.6	11.7	16.0	8.7	5.8	0.0	4.7	7.9	7.4
1958	여당	21.4	43.7	44.6	49.3	47.2	41.0	46.2	41.5	41.6	30.5	5.5	42.1	54.1
	야당	58.5	35.0	17.9	31.2	38.2	36.0	32.5	30.1	32.6	16.7	7.5	34.0	33.9
1960	여당	57.3	39.6	73.8	75.8	35.4	69.1	47.5	40.3	54.1	52.1	11.7	51.4	53.4
	야당	0.0	13.8	0.0	24.2	10.9	0.0	15.7	0.0	0.0	0.0	7.7	6.1	6.9
1963	여당	21.8	26.3	30.7	30.3	32.0	31.9	31.0	38.2	40.4	40.3	4.9	33.5	62.9
	야당	28.2	21.1	13.0	19.1	21.8	21.1	19.6	13.8	20.3	2.9	4.4	20.1	23.4
1967	여당	33.3	52.9	47.5	59.4	54.6	53.4	48.4	48.7	50.6	56.0	4.8	50.6	77.9
	야당	52.4	30.9	26.1	26.8	26.0	28.7	27.3	26.7	36.6	22.0	7.1	32.7	21.4
1971	여당	39.1	49.5	52.2	49.9	52.2	45.0	51.6	49.4	47.1	58.7	4.1	47.8	56.2
	야당	58.0	39.8	34.8	36.8	37.9	48.5	40.7	37.8	46.9	33.2	7.0	44.4	42.5
1973	여당	34.2	43.4	42.5	45.2	35.4	29.4	47.3	34.7	40.5	35.8	4.9	38.7	50.0
	야당	44.3	36.2	32.6	20.6	31.8	27.8	22.8	28.0	38.1	9.1	7.6	32.5	35.6
1978	여당	26.6	35.7	39.1	36.5	40.1	29.4	34.3	27.8	30.5	23.9	4.8	31.7	44.2
	야당	51.3	33.0	23.8	33.4	23.2	31.0	24.1	23.6	32.7	8.8	8.2	32.8	39.6
1981	여당	34.6	38.7	45.9	34.1	35.5	37.9	31.0	38.4	32.5	23.5	4.1	35.6	48.9
	야당	23.9	23.1	22.3	16.9	21.0	22.2	22.1	19.3	20.0	19.3	1.7	21.6	31.0
1985	여당	27.4	34.9	46.3	56.7	39.5	36.8	35.7	38.7	34.1	31.9	5.5	35.3	47.3
	야당	43.2	30.1	11.3	18.3	21.9	26.4	25.4	20.8	30.1	6.0	9.1	29.3	27.2
1988	여당	26.2	36.4	43.6	43.7	30.2	22.8	23.3	49.9	36.1	35.6	7.5	34.0	38.8
	야당	27.0	15.5	4.0	1.4	3.8	70.0	67.9	1.9	1.5	5.9	20.8	19.3	20.5
1992	여당	34.8	36.5	38.8	44.6	37.9	31.8	20.1	48.2	44.9	34.1	5.8	38.5	48.9
	야당	37.2	31.6	11.7	23.8	22.0	55.0	66.2	8.7	13.9	19.9	14.8	29.2	31.6
1996	여당	36.5	34.3	37.3	31.5	26.1	23.4	14.2	30.4	51.0	37.2	7.1	34.5	47.8
	야당	35.2	27.9	6.7	8.9	8.1	63.7	76.2	1.5	5.3	29.4	20.2	25.3	26.1

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선거에서는 지역간 지지율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별 편차는 역대 선거에서 찾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그림 4> 평민당, 민주당, 국민회의의 지역별 지지율 추이

<그림 4>는 1988년 이후 선거에서 지역별 편차가 큰 야당의 각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정리한 것인데, 전남북 지역의 지지율이 1988년 이후 높게 나타난 반면 타 지역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도별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호남지역의 지지율이 높을수록 타 지역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88년 평민당은 호남지역에서 70% 내외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많은 지역에서 10% 미만의 지지율을 나타냈으며, 1992년 민주당의 경우 호남지역의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한 반면, 많은 지역의 지지율이 20-30%대로 향상되었다.

물론 이 결과는 당시 여당과의 합당에 반발한 민주당 세력과 평민당이 합당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1996년 선거에서는 다시 국민회의에 대한 호남지역 지지율이 70-80%대로 증가한 반면, 서울·경기·제주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의 지지율이 1988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결국 이들 3당에 대한 호남지역 지지율과 타 지역의 지지율 역시 반비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각 지역 지지율의 상승과 하락현상은 지역을 바탕으로 한 당에 대한 각 지역의 상반된 반응이라고 판단된다. 즉, 어느 당의 지역색이 강할수록 그 지역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다른 지역의 지지율은 도리어 하락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된다.

#### 4. 지역주의 지표: 후보(당) 편파성, 지역 편파성 및 지역주의

앞에서 각 후보나 당의 지역별 지지율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작용한 지역성향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후보나 당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수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지지율의 검토만으로 지역주의의 정확한 추이와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거에 나타나는 지역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 언제, 어느 정도 지역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느 후보(당)가 어느 지역으로부터 지지나 배척을 받으며, 그

리고 어느 선거에서 지역주의적 색채가 높고 그 시대적 추이는 어떤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후보나 당 또는 그들의 수에 무관하게 선거결과에 나타난 지역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구상하여 보았다.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는 후보 또는 당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인데, 각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배척의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지유형 역시 다르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개념적으로나 분석적으로 후보별, 지역별, 그리고 선거 전반에 작용한 총체적 지역주의로 구분하여 각 후보(대통령 선거의 경우) 혹은 당(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대한 지역에 따른 편파적인 지지와 배척의 정도를 ‘후보(당) 편파성’, 각 지역이 띄고 있는 지역성의 정도를 ‘지역 편파성’, 마지막으로 매 선거에 작용한 지역주의의 총화를 ‘총체적 지역주의’라고 명명하였다(온만금, 1997: 737~757).

‘후보 편파성’은 한 후보가 지역적인 배경이 전혀 없을 때 지역별 지지율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전국 지지율과 지역별 지지율간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각 지역마다 투표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한 후보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과 전국 지지율간의 차의 절대값을 전국 투표자 가운데 지역별 투표자의 비(ratio)로 가중치<sup>1)</sup>를 준 값의 총화로 측정하였다.

$$\text{후보(당) 편파성} = \sum \text{지역별 투표자비율} \times |\text{후보(당) 지역지지율} - \text{전국지지율}|$$

각 지역이 선거에서 어느 정도 편파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지역 편파성’은 각 지역이 특정 후보를 특별히 선호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면 그 후보의 지역별 지지율은 그의 전국 지지율과 같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였다. 지역 편파성은 한 지역에서 후보나 당이 받

1) 각 지역과 전국 지지율 차의 절대값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기 위하여, 총유권자에 대한 각 지역의 유권자의 비나 총투표자에 대한 지역별 투표자의 비, 두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후자이기 때문에 지역별 투표자 비를 선택하였다.

은 지지율과 그들의 전국 지지율간의 차의 절대치를 합한 값을 후보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측정하였다.

지역 편파성 =  $(\sum | \text{각 후보(당) 지역별지지율} - \text{전국지지율} |) / \text{후보(당)의수}$

마지막으로, 각 선거에 작용한 ‘총체적 지역주의’는 지역 편파성의 총화라고 보아 각 지역의 편파성 수치에다 전국 투표자에 대한 지역별 투표자의 비를 가중치한 값을 모두 더하여 구하였다.

지역주의 지표 =  $\sum (\text{지역 편파성 지표} \times \text{지역별 투표자 비})$

이 공식에 의해 얻어진 수치는 지역주의가 전혀 작용하지 않을 때 최저치가 0이고, 지역주의가 극에 달할 때 최대치가 50을 넘지 않는다. 이 수치는 마치 백분율과 흡사하여 지역주의의 다차원적 측면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각 지표는 나름대로 지역주의를 확인하는 데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먼저 ‘후보 편파성’ 지표로는 후보 또는 당이 지역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와 배척을 받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역 편파성’ 지표는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지역주의가 강하고 그 시대적 추이가 어떤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지역주의’ 지표는 선거에 작용한 지역주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지표들을 활용하면, 출마한 후보나 당의 수에 관계없이 선거에서 후보와 지역의 편파성은 물론 총체적인 지역주의의 양상과 추이에 대한 정확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 1) 역대 대통령 선거의 지역 편파성, 지역주의 및 후보 편파성

<표 3>은 위의 공식에 따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 편파성과 총체적인 지역주의의 수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각 지역 편파성과 총체적인 지역주의 중 10 이상 높은 수치는 굵게 표시하였는데 특히 1980년대 이후 여러 지역의 지역 편파성이 높아졌고 그 정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 역대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지역 편파성과 지역주의 수치

지역구분	1952	1956	1963	1967	1971	1987	1992	1997
서 울	4.4	6.7	13.2	6.4	12.6	3.6	3.7	4.4
경 기	9.4	7.1	12.4	9.8	3.2	2.5	4.6	3.1
강 원	8.3	20.8	5.5	1.9	7.6	11.4	12.2	10.9
충 북	8.9	16.1	5.0	2.5	5.4	4.4	6.4	7.0
충 남	6.0	7.1	5.1	4.7	1.7	18.4	6.2	8.2
전 북	6.4	9.8	3.2	7.2	10.9	28.3	34.9	34.4
전 남	1.8	2.1	9.9	5.0	17.1	29.9	37.5	36.7
경 북	0.6	14.7	9.0	14.9	23.3	15.8	15.5	19.2
경 남	15.4	8.5	10.4	16.5	14.4	15.3	20.4	17.6
계 주	3.4	14.9	23.1	8.3	5.4	6.6	0.9	1.4
평 균	6.5	10.8	9.7	7.7	10.2	13.6	14.2	14.3
지역주의 수치	6.7	9.2	9.1	7.3	12.5	11.9	12.9	12.4

1963년의 선거에서는 윤보선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대결하였는데, 추풍령을 경계로 충청 이북에서는 윤 후보, 충청 이남지역에서는 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1967년에 윤보선 후보와 박정희 후보간에 재대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남북으로 갈라진 과거의 지지패턴이 사라지고 박정희 후보에 대한 여러 지역의 지지율이 향상됨에 따라 지역 편파성과 지역주의 수치가 현격히 떨어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960년대 선거의 지역주의는 일부지역 유권자들의 같은 지역출신 후보에 대한 친근감에 바탕을 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후보자의 통치능력이나 업적평가에 따라서 차후 지지패턴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사실은 1967년 선거 당시 나타나기 시작한 영호남 지역의 지역 편파성이다. 1963년 선거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박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전남북은 1967년 선거이래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 1971년에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반면, 경남북 지역은 가장 높은 지지율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1971년 선거에서도 지속되었다. <표 3>에 의하면 1967년 선거와 1971년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경쟁했던 선거에서 영남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높

은 지역 편파성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주의는 흔히 차별을 받는 지역주민의 집단적 대응의 결과라고 알려졌으나, 60~70년대 선거에서는 호남지역보다 오히려 여당후보 출신지역인 영남 지역의 지역 편파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여러 차원에서 유리한 지역이 더 지역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역 편파성은 전남북의 수치가 3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호남지역의 강한 지역 편파성은 역대 선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1980년대 초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좌절된 데다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 지역정서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1960년대 본격화된 지역주의는 영남지역에서 불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에 호남지역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렇듯 지역 편파성이 강화됨에 따라 1980년 이래 전체적인 지역주의도 심화되었는데, 역대 대통령선거를 지역주의가 높게 작용한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1992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971년, 1997년, 1987년 순이다. 위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주의는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심화되었고 지역별로는 1960년대 후반 영남지역에서 거세지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 호남지역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역대 대통령 후보의 편파성 수치

선거 년도	주요 후보별 편파성 수치 (단순평균치)
1952	이승만 : 8.34 (7.92) 조봉암 : 4.97 (4.94)
1956	이승만 : 9.28 (10.34) 조봉암 : 9.28 (11.00)
1963	박정희 :10.05 (10.62) 윤보선 : 9.84 (9.80)
1967	박정희 : 8.27 (7.00) 윤보선 : 9.38 (8.30)
1971	박정희 :12.76 (9.90) 김대중 :12.99 (10.40)
1987	노태우 :12.19 (15.10) 김영삼 :11.21 (10.70) 김대중 :19.36 (23.20) 김종필 : 5.68 (7.60)
1992	김영삼 :12.03 (14.90) 김대중 :16.90 (19.00) 정주영 :6.25 (7.80)
1997	김대중 :16.89 (19.43) 이회창 :12.76 (14.75) 이인제 :7.7 (8.7)



<표 4>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가 받은 편파적인 지지나 배척의 정도를 보여주는 후보 편파성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후보 편파성의 전반적인 추세는 1963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1971년 이후 선거에서 더욱 높아졌다. 1963년에는 추풍령을 경계로 두 후보의 지지기반이 남북으로 갈렸으나, 1971년에는 박 후보는 영남에서, 김 후보는 호남에서 각각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지지기반이 동서로 갈렸다. 특히 1987년 이후 선거에서는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되어 대부분의 후보가 일정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편파성 수치 순으로 역대 후보를 열거하면 김대중 후보(1987년, 1992년, 1997년, 1971년 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박정희 후보(1971년), 이회창 후보(1997년), 노태우 후보(1987년), 김영삼 후보(1992년) 순으로 높았으며, 시대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정책이나 통치능력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판단에 기초한 후보선택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60년대의 지역주의는 지역적 친근감에 기초하여 후보를 선택했다가 도 능력이나 업적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바뀔 수도 있는 가변적인 요소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업이나 학력, 수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들이나 기타 합리적 판단이 후보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되고 지연만이 부각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정치인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거나 후보간 정책 대결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특정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추어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유리한 선거전략으로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2)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편파성, 지역주의 및 당 편파성

<표 5>에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나타난 지역 편파성과 지역주의 수치가 정리되어 있다.

&lt;표 5&gt;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지역별 편파성과 지역주의 수치

선거년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지역주의
1954	5.43	4.07	17.63	3.07	4.13	4.43	5.43	1.03	1.03	5.63	5.19	4.07
1958	15.13	1.06	6.40	3.53	3.23	1.07	2.63	1.63	.70	9.83	4.52	3.20
1960	4.20	6.96	9.97	14.60	11.30	8.40	4.97	6.20	3.40	2.73	7.27	6.54
1963	7.20	3.45	3.70	3.15	2.30	.83	3.63	4.03	3.14	7.50	3.89	3.62
1967	9.93	1.65	4.48	3.30	3.03	1.78	2.70	2.03	1.65	4.85	3.54	3.22
1971	6.65	2.15	4.40	3.40	3.00	2.63	2.30	3.15	.98	6.03	3.74	3.19
1973	8.05	4.20	2.28	5.93	1.98	7.25	7.08	4.57	3.40	10.77	5.55	5.23
1978	8.43	2.20	7.00	3.60	6.33	1.67	5.60	5.83	.56	11.76	5.30	4.79
1981	1.35	1.90	3.98	4.80	1.33	1.55	1.90	1.68	1.98	7.73	2.83	2.00
1985	7.23	1.13	7.33	9.23	3.53	1.95	1.73	4.35	1.35	9.63	4.75	3.98
1988	4.13	2.10	7.93	13.28	14.72	24.60	24.15	9.05	12.20	7.55	11.97	10.00
1992	3.63	1.75	8.20	4.10	2.23	11.58	17.35	8.75	6.03	8.23	7.79	5.87
1996	4.78	1.55	8.03	11.23	19.10	17.65	21.58	11.08	11.78	7.75	11.45	9.34

각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각 지역 출신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와 같은 정도의 지역주의가 발동하기 어렵다고 본다. 예상한 바와 같이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몇 지역을 제외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 지역 편파성이나 지역주의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크게 작용한 시점은 지역 성향이 뚜렷한 보스 중심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대결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의 선거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년 민정당·민주당·평민당·공화당 등 각 지역의 보스를 중심으로 지역기반이 뚜렷한 당이 대결하면서 지역주의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북은 공화당을, 전남북은 평민당을, 대구·경북은 민정당을, 부산·경남은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지지하였고 지역 편파성과 총체적인 지역주의 수치도 높게 나타났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높은 편파성 수치는 24.6으로 전국 최고일 뿐만 아니라 역대 국회의원 선거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1992년 선거에서는 3당 합당으로 인해 호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편파성 수치가 낮아졌으나 1996년 선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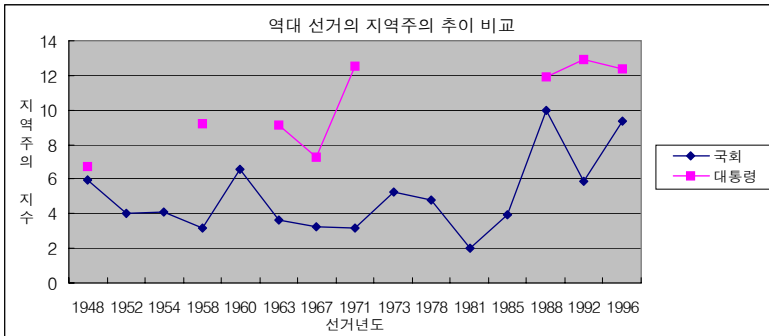
서 다시 서울·경기·강원·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지역주의 역시 높게 나타났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나타난 지역별 편파성은, 1988년 이후 호남·대구경북·부산경남·충청·강원지역이 특히 높았으며, 총체적인 지역주의는 1988년 선거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1996년 선거였다.

이렇듯 지역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지역기반이 없는 당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의석 배분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1992년 선거에서 29.2%의 지지율을 기록한 민주당은 1996년 선거에서는 11.2%로 지지율이 하락하였고 의석율은 지지율의 1/3에도 못 미치는 3.6%에 불과하였다. 반면, 지역기반이 너무 견고하여 어느 당이 일정 지역의 지지를 독점할수록 그 당에 대한 여타 지역의 지지율이 하락하여 전국 지지율은 도리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지역주의가 활거할 때, 지역기반이 없는 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불리하지만 동시에 한 지역의 배타적 지지만으로는 다수당이 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표 6>은 역대 선거에 나타난 주요 정당별 편파성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각 당의 편파성은 대통령 후보의 편파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높아진 시기도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1988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거의 모든 당의 편파성 수치가 높아졌는데, 특히 1988년 평민당의 당 편파성은 1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당 편파성이 높아진 배경에는 지역주의가 강해진 데서 그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지역주의가 강해진 상황에서 지역기반을 가진 정당들이 출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역감정을 더욱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1992년 3당 합당으로 이런 편파성 수치가 낮아지는 듯했지만, 민주당의 편파성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1996년 선거에서는 지역기반이 확실한 여러 당이 경쟁함에 따라 지역 편파성이 다시 높아졌다.

<표 6> 주요 정당별 편파성 수치

선거년도	주요 정당별 편파성 수치 (단순평균)
1954	자유당: 6.79(9.23) 민주국민당: 4.01(4.69) 국민회: 1.42(1.65)
1958	자유당: 3.84(5.50) 민주당: 6.90(7.47) 통일당: .50(.60)
1960	민주당: 10.99(11.66) 자유당: 7.58(8.06) 대중당: 2.60(2.58)
1963	공화당: 4.72(4.89) 민정당: 3.05(4.40) 민주당: 3.93(5.89) 자유민주당: 2.25(2.17)
1967	공화당: 4.14(4.78) 신민당: 6.59(7.07) 자유당: 1.63(2.16) 대중당: .77(.64)
1971	공화당: 3.51(4.11) 신민당: 6.51(7.00) 국민당: 2.17(2.27) 민중당: .58(.50)
1973	공화당: 4.85(4.94) 신민당: 6.48(7.61) 민주통일당: 3.14(3.13)
1978	공화당: 4.20(4.34) 신민당: 7.75(8.17) 민주통일당: 2.57(3.44)
1981	민정당: 2.89(4.09) 민한당: 1.70(1.71) 국민당: 2.18(4.11) 사회당: 1.06(1.36)
1985	민정당: 4.34(5.48) 신민당: 7.20(9.05) 민한당: 1.38(1.71) 국민당: 3.45(3.70)
1988	민정당: 7.57(7.48) 민주당: 9.17(9.24) 평민당: 18.54(20.81) 공화당: 7.56(10.35)
1992	민자당: 5.63(5.83) 민주당: 13.07(14.84) 국민당: 4.24(7.24) 신정당: .69(.82)
1996	신한국당: 6.67(7.11) 국민회의: 17.21(20.19) 자민련: 11.25(15.42) 민주당: 4.01(4.69)



<그림 5> 역대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지역주의 추이 비교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결과를 비교하면 각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는 그 수준뿐만 아니라 작용한 시기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작용한 총체적 지역주의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지역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였고, 그 시기 또한 보

스 중심의 지역기반이 확실한 정당이 나타나 경쟁한 1988년 선거 이후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1960년대부터 나타난 지역주의가 1971년 선거부터 10 이상의 수치를 보인 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80년대 이후부터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역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거에 작용한 지역주의를 분석하였다. 먼저 각 지역에 따른 후보나 당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통해 개략적인 지역주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어서 지역주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후보 편파성’, ‘지역 편파성’, 그리고 선거에 작용한 ‘총체적인 지역주의’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한 검토에서 1960년대 초 지역주의는 지역적 친근감이 일부 작용한 결과 지역에 따른 지지율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이는 유권자의 정부업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차후 지지패턴이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1963년 남북으로 갈라진 지지패턴은 4년 통치 후 호남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집권자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1971년 이후 선거에서는 동서를 축으로 지지패턴이 갈리게 되었고 1987년 이후 지역적 친근감의 수준을 능가한 지역중심의 배타적 집단 의식이 작용하여, 자기 지역출신에 대한 맹목적 지지와 타 지역출신에 대한 배척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1980년 후반 지역기반이 있는 정당들이 출현하면서 집단 의식으로서 지역주의가 강하게 발동하였다.

이에 따라, 후보 편파성뿐만 아니라 지역 편파성 그리고 총체적 지역주의가 모두 높아졌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963년 박정희 후보의 편파성 수치가 선거사상 처음으로 1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1971년에는

두 후보가, 1987년 이후에는 대부분 후보의 편파성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 편파성은 1967년과 1971년 영남지역의 수치가 가장 높아서 강한 지역성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고, 1987년 이후 선거에서는 호남지역의 지역성이 특히 높아졌고 다른 지역도 높아져 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주의는 1988년 선거부터 강하게 작용하였는데, 당의 편파성은 평민당이 가장 높았고 지역 편파성은 영호남뿐만 아니라 충청·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 강하게 작용하여 지역주의가 강해졌다. 역대 선거결과에 작용한 지역주의 추이 분석 결과,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극단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노력이 있어 왔지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나 발언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선거에서 궁극적 목적이 승리에 있으니 후보자들로서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감정을 활용하는 것이 손쉬운 선거전략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주의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이며 그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표를 선출하는 유권자들 스스로가 지역주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 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능력있는 대표를 선출하려는 마음자세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언론을 비롯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과 다수 유권자의 올바른 식견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첫째로 선거에 나타난 지역주의의 시대적 추이와 양상을 정확히 추적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로는, 일정한 척도를 활용하여 선거결과에 나타난 지역주의 정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에서 지역주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접근한 데서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 고흥화(1989), 『韓國人の 地域感情』, 서울: 성원사, 49~65면.
- 김만흠(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 연구: 영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 김문조(1992), 「한국 지역주의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153~165면.
- 김익기(1992), 「지역감정의 해소책: 사회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사회학회편, 같은 책. 385~402면.
- 김용학(1992), 「엘리트 층원에 있어서 지역격차: 미시적 동기와 거시적 결과」, 한국사회학회편, 같은 책. 265~300면.
- 김형국(1991), 「제13대 대통령선거 투표행태 연구」,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334~359면.
- 문석남(1984), 「지역격차와 갈등에 관한 한 연구」, 『한국사회학』, 18집, 109~133면.
- 민족문화추진회(1968), 『국역 고려사 절요』, I.
- 백완기(1992), 「지역갈등의 해소책: 지방자치」, 한국사회학회편, 위의 책. 403~406면.
- 송정현(1971), 「호남지방의 지역적 낙후원인」,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편, 『지역개발연구』, 23~40면.
- 신광영(1990), 「춘천지역에서의 지역주의와 투표행위: 두가지 투표행위 논리의 경험적 검증」, 『한국사회학』, 26집, 35~58면.
- 안병만(1992), 「지역갈등의 해소책: 정당정치」, 한국사회학회편, 같은 책. 407~410면.
- 온만금(1997),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에 나타난 지역주의 추이와 양상」, 『한국사회학』, 31집, 737~757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 국회의원 선거상황: 제 1대~11대.  
 -----(1985),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1988),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1993),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1971), 역대 대통령 선거상황.

------(1988), 제13대 대통령 선거총람.

------(1993), 제14대 대통령 선거총람.

중앙일보 1996년 4월 13일자,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조선일보 1997년 12월 20일자, 대통령 선거결과

차종천(1988), 「지역주의적 선거와 유권자: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  
지에 대한 로짓분석」, 『한국사회학』, 22집, 143~160면.

Hechter, Michael(1975), *Internal Coloni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The Political Economy of Ethnic 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pp. 1151~78.

Inkeles, Alex and David Smith. 1974. *Becoming Modern: Individual  
Changes in Six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Jordan, David. 1994. *New World Regionalism*,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지역간 거리감을 통해서 본 지역주의의 실상과 문제점

최준영 · 김순홍

## 1. 머리말

지난 4·13 총선은 한국정치가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영남은 전체 65석 중 무소속 1표를 제외한 64석을 한나라당이 휩쓸어 과거보다 훨씬 강한 특정 정당 지지 양상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그간 영남의 선거결과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15대 총선을 보더라도 신한국당이 전체 70석 가운데 80%인 56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남 싹쓸이가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과거 지역주의가 가장 강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자 중 4명이 낙선함으로써 특정당에 대한 몰표 성향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경향이 있다. 물론 무소속으로 당선된 인사들도 당선 후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공언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 지지가 외견상으로나마 약화된 측면을 무시할

---

**최준영** 광주대 교수(사회학). 최근 논문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난 5·18 민주화운동과 지역감정」(1999)이 있음

**김순홍** 광주대 교수(사회학). 최근 저서로 『사회복지 통계분석-SPSS』공저(1999)와 『통계학 비전공자를 위한 통계강의 및 자료분석-SAS』공저(1999) 등이 있음.

**최준영**과 **김순홍**은 광주사회조사연구소를 통해 『전라도 타화상 연구』(1997)를 비롯한 수십 건의 사회조사에 공동작업을 하고 있음.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충청권은 전통적 강세를 보였던 자민권이 24석 중에서 11석만을 차지함으로써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이를 충청도와 강원도의 지역주의가 약화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강희경·민경희(1998)가 청주지역의 권력자원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이 두 지역의 지역주의는 ‘집권당 우선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지역적 연고를 가진 인사가 여권의 공천을 받으면 밀어주는 형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적 편파성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선거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재확인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선거 전에 총선시민연대를 위시한 각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및 입후보자의 자질 시비가 일면서 이번에는 당이나 출신지역 편향을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못했다. 결과만 보면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는 예전 그대로, 혹은 더욱 심화된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한나라당에게 압승을 가져다 준 영남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호남지역에 내려졌던 것과 비슷한 비판이 일각에서 일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과거의 야당이 호남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달았듯이 이번의 야당은 영남당이라는 명칭을 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선거결과라는 것이 당선 아니면 낙선이라는 양자택일이기 때문에 당선자 수만을 가지고 지역주의가 심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남권에서도 과거에는 거의 힘을 못쓰던 민주당이나 진보성향의 후보가 상당한 선전을 한 지역들이 있다. 호남에서 민주당 몰표가 상당 부분 사그러든 것이나 충청/강원권에서 표가 분산된 것 등은 오히려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약화되어 가고 있

다는 징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20년 간 우리 사회에 지역주의 혹은 지역감정처럼 많은 논란을 가져온 용어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사회를 되흔들었던 많은 정치·사회적 사건의 배경을 보면 지역감정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안배에 의한 경제의 불균형 발전이나 인사차별 외에도 각종 국가정책의 결정도 특정 세력이나 지역의 이익을 배려해 내려진 경우가 많다. 일반 국민들도 선거에서 나타나듯이 평소에는 조용한 듯 하다가도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가 되면 다분히 지역주의적 성향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적 성향은 우리 문화의 지역공동체적 성향과 연고주의가 근대화과 더불어 사회·경제·정치적 분야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경사회가 무너지면서 친족 중심의 관계망에서 점차로 친구나 우정과 같은 개인적 관계가 부각되면서 이것이 지역적 연계망으로 확대된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할 때 사회의 연계망은 연고주의적 경향이 약해지고 합리성에 의거한 규범적 관계가 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연줄망은 아직도 혈연이나 지연에 근거한 연고주의적 경향이 다분히 강하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될수록 연고주의적 색채는 강해진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의 인사 충원유형이나 혼인관계를 보면 여전히 연고주의적 관계형성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용학, 1990). 이는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대도시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 김선업(1992, 1996)은 우리 사회의 연줄망(network of networks) 형성의 가장 큰 근거가 학교동창임을 발견하였다. 전체적 연줄망에서는 학교동창이 다른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핵심적 연줄과 도구적 연줄망으로 가게 되면 친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될수록 친족이나 동창과 같은 강도와 통합성이 높은 연고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연줄망이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개인적 연고를 중시하는 연

고주의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서구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될 때 집단형성에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는 것은 혈연과 지연이다. 전통적 유대관계에서는 혈연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지연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면 제한적인 범위의 혈연보다는 관계망이 넓은 지연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산업화와 더불어 1960년대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확산되면서 지연의 역할이 점차 중시되었을 것이다. 김선업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지연의 특수형태로 고등학교 동창이 연줄망의 중요한 기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같이 익명성이 높은 대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반은 지역적 연고, 특히 유대감이 높은 고교동창이었던 것이다. 타지 생활에서 자신들의 지위상승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지역기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지역적 연고를 중시하는 유대관계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어떤 사회든지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친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역적 연고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기반이다. 문제는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강화되어서 타 지역에 대한 배타성을 띄게 될 때이다. 연고주의가 강해지면 사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끼리 뭉치게 된다. 결과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부재와 타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 정책의 건전성이나 인물의 능력보다는 개인적 친분이 중시되는 편파적 결정은 그 집단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적 폐단이 수시로 지적되어 왔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다시 지역적 편향으로 회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의 16대 총선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 2.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

지역간의 갈등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역감정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다. 개념 자체만 보면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과 그 지역민들에게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의미 모두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호감, 사랑, 존경, 적대감, 증오, 천시, 중립적인 감정 등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감정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이다. 즉 타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배타적 감정 및 시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타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대부분 편견이며 고정관념화 되는 것이 보통이다. 편견이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식은 쉽게 고정관념이 되어 사람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감정은 이러한 편견이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다른 편견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지역감정도 한 집단의 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일방적(one-way)인 경우가 많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백인우월주의, 남성우월주의, 민족중심주의 등을 보더라도 한 집단이 타 집단을 일방적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갈등(regional conflict)은 둘 이상의 지역간에 정치,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서로가 상대를 경원시하고 적대적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지역감정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 어느 곳이든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감정이 있다고 해서 지역갈등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갈등은 실질적 이해관계로 인해 상대방을 서로가 적대시하기 때문에 다분히 쌍방향적이다. 대부분 지역간의 관계가 사회문제시 되는 경우는 지역감정이 발전하여 지역갈등의 형태를 취하게 될 때이다. 어떤 이해관계로 인하여 양쪽에서 동시에 지역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간 타 지역으로부터 일방적 배척을 받았던 집단이 어떤

계기로 인하여 상대방을 배척함으로써 양자간에 갈등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을 차별하고 관계(官界)에 등용하는 것을 억제한 지역차별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지역차별은 엄연히 존재해 왔다는 주장이 많은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김문조, 1993; 남영신, 1992; 이병휴, 1991). 그러나 여기서의 차별은 특정 지역들간의 항구적인 갈등관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배층이 변함에 따라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 출신들이 세도를 잡으면서 타 지역 출신들을 배척함으로써 나타난 한시적 현상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이병휴, 1991).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통일신라 이후 특정 지역 출신들이 계속해서 세도를 잡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중앙집권체제로 인한 서울과 지방, 즉 경향간의 세력갈등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지배층간의 갈등관계가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주의는 위의 두 개념보다는 약한 개념이다. 약하다는 것은 갈등이나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무시같은 직설적인 대립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다. 지역주의는 지역중심주의, 지역이기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자기 지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강화되면 지역이기주의가 되고, 극단적으로 가면 지역패권주의(남영신, 1992)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타 지역을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다.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 지역주의가 존재했었는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그것이 사회의 표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바로 1960년대부터이다. 지역주의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정치분야다. 정치분야 중에서도 지역주의의 영향을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분야는 전국적 표의 분포를 봄으로써 특정 후보에 대한 지역적 선호를 알 수 있는 대통령 선거

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선거의 관건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온만금(1997)의 연구를 보면 박정희, 윤보선 두 후보가 격돌한 1963년의 대선 때 지역주의가 발생했다고 한다. 북쪽으로 갈수록 윤보선 후보가, 남쪽으로 갈수록 박정희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1971년의 대선에서는 김대중, 박정희 두 후보에 대한 지역주의적 성향이 더욱 심해지는데 특히 영호남 두 지역에서 두 후보에 대한 지지기반이 동서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온만금, 1997: 744~745). 온만금의 분석에 의하면 호남지역에서의 지역적 편파성향은 1971년의 대선부터 나타났으며 1987년과 1992년 대선으로 가면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영남지역은 1967년부터 이미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영남은 이미 박정희 정권이 탄생한 1960년대부터 지역주의가 등장하였지만, 호남은 김대중 후보가 나선 1971년에 지역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1980년대에 이르러 급격히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1980년대 이전까지는 지역주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 5·18 이후이다(남영신, 1991; 김종철, 1991). 그리고 이것이 대중적 행동으로 표출된 것은 1987년 대선과 이듬해의 총선이다. 그 전에는 막연한 한(恨)이나 심리적 박탈감의 형태로 존재하던 것이 시민들의 투표행위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특정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5·18의 상처를 받은 광주 및 호남지역에서는 김대중과 평민당,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지역 물표의 형태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후 이러한 지역적 편향은 영호남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선거에서 후보의 지역성은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역주의가 이처럼 팽배하면서 지역적 편견은 이제 지역갈등의 양상을 띄게 된다. 과거의 지역감정은 기득권을 가진 한 집단이 그렇지 못

한 타 집단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방적 측면이 강했던 반면, 1980년대 이후의 지역감정은 쌍방향적 또는 다방향적 성격을 지닌다. 한 지역(혹은 지배집단)이 타 지역(들)을 차별하는 일방적 관계를 떠나 둘 또는 그 이상의 지역들이 서로를 경원하는 쌍방향적 지역감정, 다시 말해서 막연한 지역감정의 단계를 떠나 구체적인 지역갈등의 양상을 띄기 시작했던 것이다.

1980년대 이후의 지역감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5·18 이후 광주를 위시한 호남인들의 지역적 정체감이 강화된 것을 무시할 수 없다. 5·18에 대한 피해의식과 소외감은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특정 당이나 인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의 강화는 광주의 이미지를 배타적이고 과격함 것으로 만들었다. 지역이미지는 하나의 상징물이다. 지역의 실상과는 또 다르게 사람들에게 의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의미가 구성되면서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 되는 것이다. 1995년의 한 조사(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에서 보면 전남인(광주·전남)을 제외한 일반국민의 91%가 전남인은 단결이 잘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배타성에 대해서도 7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전남인은 각각의 질문에 59%, 4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김순홍 등이 행한 최근의 연구(1999)에서도 일반국민의 34%가 전라도인을 배타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지역적 단결력이 높다는 응답을 보면 전라도(86.0%), 경상도(42.7%), 충청도(28.9%)로 나타나고 있어 전라도 사람의 단결력이 높다는 응답이 타 지역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일반국민들에게 광주와 전라도는 좋게 표현하면 개성과 지방색이 강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단결력과 배타성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그간 5·18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사회단체의 시위와 지역 정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호남인들의 단결력과 배타성



을 강하게 인식시켰다. 그것이 5·18과 지역차별의 영향이라는 데는 이의가 별로 없다. 한 예로, 광주시민이 다른 지역보다 시위를 더 많이 했던 이유로 호남과 영남을 제외한 일반국민의 37%가 5·18의 영향을, 그리고 26%가 정치·경제적 차별과 소외를 지적하고 있다(김동원, 1998). 이러한 응답은 광주시민의 행동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데 많은 일반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정작 호남의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강한 단결력과 배타성이 호남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 그 결과 호남은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곳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광주와 전라도를 실제로 방문했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외지인들이 받는 인상은 것처럼 부정적이지 않은 데도 전체적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최상진·한규석, 1998).

### 3. 지역간 사회적 거리감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의 양상을 사회적 거리감을 이용해 조사한 것이다. 지역감정에 대한 조사는 그간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 등에서 부단히 해왔으나 대부분이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일회성 조사인 경우가 많아서 결과가 축적적이지 못하다. 또한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거나 일반적이어서(예를 들면, “○○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지역감정의 정확한 강도나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단간 배타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감이란 상이한 계층이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말한다. 원래 이것은 보가더스(Bogardus, 1971)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인종, 종교,

계층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대상으로 각각 하위집단간의 친근감 혹은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를 우리 사회 각 지역민들간에 존재하는 심리적 거리감으로 표현하면 지역적 거리감이다. 지역적 거리감의 의미는 상대 지역민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한국사회의 지역간 거리감을 조사한 연구는 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초기의 연구들(김진국, 1987; 김만홍, 1987; 조경근, 1987; 김혜숙, 1988)은 제한된 표본(주로 대학생)을 사용하였거나 문항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어 일반화의 정도가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의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호남인보다도 영남인들이 타지역에 대한 거리감이 높게 나타나며, 둘째는 영호남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호남인에 대한 거리감이 영남인에 대한 거리감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리감의 근저에는 항상 고정관념화된 지역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나간채(1991)의 연구는 위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반화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전국 10개 지역 20세 이상 성인남녀 2,020명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관계(가족의 배우자), 친구관계(가까운 친구), 근린관계(가까운 이웃), 사업/직업관계(사업의 동업자)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타 지역민에 대한 거부감을 조사하였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라면 타 지역민을 가족의 배우자로 맞이하려는 데 찬성하겠는가 반대하겠는가를 물어 보는 것이다. 위의 네 가지 문항 중 한가지 이상의 관계에 대해 타 지역민과 관계를 맺는 데 반대하는 사람의 수를 측정하여 이를 사회적 거리감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결과는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1) 호남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높고, 충청도 사람에게 대한 거부감이 가장 낮았으며, 2)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은 호남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은 호남지역에서만 높게 나타났다. 수치를 보면 전남과 전북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38%와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

면 경상도에 대해서는 15%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은 약 30% 정도인데 반해, 영남인의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은 50% 이상일 정도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 그는 1)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수준, 2) 다른 도지역에로의 높은 인구이동율, 3) 집권세력의 적대시, 4) 사회화기관(대중매체)의 영향을 들고 있다. 이 외에도 역사적 배경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응답자의 22% 정도가 지역감정이 조선시대 이전부터 뿌리내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감정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로는 응답자의 92%가 1960년 이후를 지적하고 있어, 지역감정이 우리 사회의 표면에 등장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온만금(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전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들은 각 거리감 항목에 대해 주로 응답자의 호/불호를 이분법적으로 물어보았다. 예를 들면, '○○ 지역 사람과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까?'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을 하도록 물어본 것이다. 나간채의 연구도 네 가지 항목 중 한가지 이상의 항목에 부정적 응답을 한 사람의 빈도를 계산하여 이를 부정적 거리감의 척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각 지역간 거부감의 수치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항목에 대한 응답을 둘 중의 하나로 제한함으로써 응답자들의 태도를 어느 한쪽으로 강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감정처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항목을 늘려서 응답자들의 태도를 좀더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 사람과 자녀의 결혼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 '상관없다', '찬성은 안한다', '반대는 안한다', '반대한다' 등의 항목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거리감 척도를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측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도 지역간 거리감 척도로 네 항목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친구관계는 여타 연구와 비슷하고 나머지는 약간 다른 항목을 사용하였다. 근린관계에서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개념이 약간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특정 지역사람에게 집을 세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도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자녀가 특정 지역 사람과 결혼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도가 높은 질문으로 본인의 결혼을 포함시켰다. 즉, 특정 지역사람과 결혼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하면 척도간 강도가 확연히 차별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태도를 좀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본 조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가 있다. 『전남이미지 실태연구』(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전라도 타화상 조사』(김순홍·최준영·양철호, 1997), 『무등일보 신년 특집 여론조사』(김순홍·최준영·양철호, 1998) 등이다. 본 조사와 관련 있는 항목에서 각각의 연구 결과들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 1) 조사설계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남녀 1371명(광주지역 400명, 여타지역 97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쿼터를 할당한 다음 지역별로 전화국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각 해당전화국 내에서 RDD(random digit dialing)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선정하였다. 표집설계에 의해 추출된 가구를 조사하되, 각 지역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구성비율에 따라 쿼터를 배정하였다(<표 1>). 광주는 인구비율에 맞추어 원래 29명으로 쿼터를 배정하였으나 광주가 호남 정서의 중심지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타지역과 비교하기 위하여 400명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전국 분석에서는 전국인구분포에 따라 29명으로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사례수는 1,000명이 된다. 조사기간은 1998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다. 표본 오차의 최대허용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2\%$ 이다.

<표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수	%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501	50.1
여자	499	49.9
나이		
20대	317	31.7
30대	314	31.4
40대	218	21.8
50대	151	15.1
교육수준		
초졸이하	84	8.4
중졸이하	97	9.7
고졸이하	395	39.7
대학이상	419	42.2
출신연고1 1)		
호남	296	29.7
비호남	700	70.3
출신연고2 2)		
영남	370	37.1
비영남	626	62.9
시도별 지역 3)		
서울	224	22.4
부산	83	8.3
인천	53	5.3
대구	54	5.4
대전	29	2.9
울산	22	2.2
경기	183	18.3
강원	33	3.3
충북	32	3.2
충남	41	4.1
경북	61	6.1
경남	66	6.6
전북	43	4.3
전남	47	4.7
광주 4)	29	2.9

- 1) 출신연고1은 부모 중 어느 한 쪽 이라도 호남(광주, 전남, 전북)출신인 경우 호남으로 나머지 경우는 비호남으로 구분하였다.
- 2) 출신연고2는 부모 중 어느 한 쪽 이라도 영남(부산, 대구, 경남, 경북)출신인 경우 영남으로 나머지 경우는 비영남으로 구분하였다.
- 3) 시도별 지역 사례수를 권역별로 보면 경인지역 460명(46.0%), 경남 171명(17.1%), 경북 115명(11.5%), 충청/강원 135명(13.5%), 호남 119명(11.9%) 등이다.
- 4) 광주지역은 400명을 조사하였으나 전국 인구분포에 맞추어 29명으로 가중치를 주어 조정하였다.

## 2) 조사결과

### 가. 친구삼기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경상도인과 전라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보기로 하자. 친구삼기를 보면 친구로 삼겠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경상인 92%, 전라인 89%). 거주지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었으나 전 지역에서 90% 내외의 호감도를 보이고 있었다. 충청지역(충북 78%, 충남 81%, 대전 79%)에서만 전라도 사람을 친구삼겠다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10% 정도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친구삼지 않겠다는 부정적 응답도 경상도를 포함한 타 지역은 모두 10% 미만인데 이 세 지역에서는 10%를 상회하고 있었다(충북 12%, 충남 17%, 대전 10%).

### 나. 집 세주기

집 세주기를 보면 경상도사람에게 세를 주겠다는 응답은 77%, 전라도사람에 대해서는 69%로 나타나 8%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친구삼기 보다는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찬성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상도와 전라도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도사람에게 세를 주지 않겠다는 응답은 전국적으로 7.7%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의 13%이며 그 다음 인천(7.5%), 충남(7.3%), 대전(6.9%), 강원(6.1%)의 순이다. 반면에 전라도사람에게 세를 주지 않겠다는 응답은 전국 평균 11.4%이며, 강원도(21.2%), 충남(19.5%), 충북(18.8%), 대전(17.2%) 등지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참고로 이 네 지역의 부정적 응답의 평균은 경상도사람에 대해 10%, 전라도사람에 대해 19%로 전라도사람에 대한 반대율이 두배 정도 높은 셈이다. 질문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부정적 응답이 높아진 동시에 친구삼기와 마찬가지로 충청/강원 지역에서 부정적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두 지표로만 볼 때, 대전/충청/강원이 두 지역에 대한 거리감이 가장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 다. 자녀의 결혼

자녀결혼에 대한 찬반 여부를 보면 찬성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차이도 51%와 41%로 10% 정도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반대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경상도 7.7%, 전라도 13.7%). 많은 응답자들이 자녀 배우자(사위나 며느리)의 지역성에 대해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경상도 30%, 전라도 32%). 경상도에 대한 찬성 응답을 권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지역이 39%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충청/강원(56%), 호남(60%)의 순이다. 그러나 서울/경기지역은 '상관없다'는 응답도 37%로 가장 높다. 반대한다는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20.7%), 전남(14.9%), 인천(13.2%), 강원(12.1%), 전북(11.6%), 서울(11.2%)의 순이다. 여기에 약간 소극적인 반대이사('찬성은 안한다')를 합해 보면 충남(22%), 인천과 대전(각각 21%), 전남(19%), 강원(1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들에서는 5명 중 1명 꼴로 자녀가 경상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자녀가 전라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율을 보면 대전/충청/강원 지역이 21%로 가장 높고, 부산/경남 15%, 서울/경기 15%, 대구/경북 1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에 '찬성은 안한다'를 더했을 때도 순서는 그대로였다(각각 28%, 19%, 18%, 12%). 이렇게 볼 때, 충청/강원 지역은 10명 중 3명 꼴로 반대하는 셈이다. 이 지역을 세분해 보면 충남 34.1%, 강원 27.3%, 충북 25.1%, 대전 24.1%의 순이다. 경남(부산 제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20% 미만의 반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특히 충청/강원 지역에서 전라도인에 대한 거리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조사의 결과만을 두고 볼 때 경북지역이 전라도에 대해 가장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으리라는 세간의 추측은 상당히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라도 타화상 조사(김순홍·최준영·양철호, 1997)]-경인지역과 충청/강원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경상도 사람과 자녀의 결혼에 대해 찬성 90%, 반대 7%로 나타나 본 조사의 결과보다 호감도

가 높게 나오고 있다. 반대하는 비율은 인천/경기가 9.5%로 가장 높고, 다음이 충청/강원(8.4%)의 순이다. 전라도에 대해서는 찬성 82%, 반대 17%로 나타나 역시 본 조사보다 약간 높은 반대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비율은 충청/강원(2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인천/경기(17%)이다. 본 조사의 결과와는 달리 경상도에 대한 배타성은 인천/경기가 가장 높고, 전라도에 대한 배타성은 충청/강원 지역이 가장 높은 셈이다. 전라도 사람과 결혼시키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82%, 반대 17%로 나와 본 조사의 결과와 비슷하다. 역시 충청/강원(24%)이 가장 반대하는 비율이 높고, 그 다음은 인천/경기(17%), 서울(11%)의 순이다.

[무등일보 신년특집(김순홍·최준영·양철호, 1998)] - 무등일보 신년특집 조사는 대통령 선거 수일 후인 1997년 12월 말에 있었다. 호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자녀를 경상도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 91%, 반대 8%로 나타났다(모르겠다 1.2%).

남자(2.9%) 보다는 여자(12.7%)가 반대의견이 높다. 40대와 50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자녀와 전라도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 영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찬성 87%, 반대 11%로 나타났다(모르겠다 2.2%). 여기서도 남자(7.9%) 보다는 여자(14.7%)가 반대 의견이 높았으나 호남지역 보다는 격차가 적다. 연령별로는 역시 40대(18.7%), 50대(21.6%)가 특히 높았다(20대 6.6%, 30대 5.8%).

경상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지역(기타 지역) 주민 590명에게 경상도 사람과 자녀의 결혼을 물어 본 결과, 찬성 94%, 반대 5%로 나왔다(모르겠다 1.1%). 남자(3.4%) 보다 여자(6.4%)에게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전라도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찬성 90%, 반대 9%이다(모르겠다 0.6%). 여자(12.8%)가 남자(5.9%) 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 연령별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라. 본인의 결혼

마지막으로 본인의 결혼에 대해서는 경상도사람과의 결혼에 찬성하



는 비율이 47.4%, 반대하는 비율이 24.6%이다(<표 2>). 반대율을 출신 연고별로 보면 영남 출신은 12.4%, 비영남 출신은 31.7%로 나타나고 있다. 비영남 출신 10명 중 3명 정도가 경상도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도에 대해서는 찬성 39.4%, 반대 29.1%로 경상도보다 반대율이 5%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 출신연고별 분포를 보면 경상도의 경우와 비슷하다. 호남출신은 13% 정도가 반대하는데 반해, 비호남 출신은 36%가 반대하고 있다.

경상도에 대한 반대를 권역별로 보면 역시 대전/충청/강원이 36.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서울/경기(30.9%), 호남(29.1%)의 순이다. 세부적으로는 충남이 46.3%이며 강원(36.4%)과 대전(34.5%)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강도가 약한 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경상도인에 대한 거리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응답율도 35%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도사람과의 결혼 반대율을 보면 역시 대전/충청/강원(43.0%)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서울/인천/경기(32.6%), 부산/경남(28.7%), 대구/경북(2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강원을 세분해 보면, 충북(46.9%), 충남(43.9%), 강원(42.4%), 대전(37.9%)의 순이다. 그 다음으로 반대가 높은 곳은 경기도(37.2%)와 인천(35.8%)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경상도의 경우와는 달리 전라도 사람에 대해 남녀간 견해차가 크다는 것이다. 남성은 전라도사람과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19.5%인데 반해, 여성은 그 두 배인 38.8%나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하면 남성은 자신의 인생을 나름대로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출신이 별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여성의 경우 전라도라는 타지로 시집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라도 타화상 조사(김순홍·최준영·양철호, 1997)] - 전라도와 경상도 거주자를 제외한 590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결혼관을 질문한 결과, 경상도 사람과 본인의 결혼에 대해서는 찬성이 75.7%, 반대가 21.3%로

나왔다. 반대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23.5%), 충청/강원(20.6%), 서울(19.6%)의 순이다. 본 조사에서 경상도 주민들을 제외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본 조사 보다 10% 정도 낮게 나오고 있다. 전라도 사람에 대해서는 찬성 69.4%, 반대 27.4%로 역시 본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대하는 의견을 지역별로 보면 충청/강원(38.3%), 인천/경기(30.2%), 서울(18.5%)의 순으로 본 조사의 결과와 비슷하다.

[무등일보 신년특집(김순홍·최준영·양철호, 1998)] - 본 조사와 비슷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경상도에 비해 전라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본 조사와의 차이도 있다. 영남과 호남을 제외한 전국 주민들의 응답을 보면, 전반적으로 두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의 비율이 본 조사에 비해 낮게 나오고 있다. 한 예로 본 조사에서는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경상도 사람 25%, 전라도 사람 29%로 나왔는데, 무등일보 조사에서는 각각 10%, 1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전라도 지역에 대한 거리감이 경상도에서 여타 지역보다 약간씩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본 조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라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충청도, 강원도, 경기/인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셈이다. 이는 김순홍 등이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서 수행한 이전 조사들에서도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본 조사에서 충청도는 거의 45% 정도가 전라도 사람과의 결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호오도(好惡度)가 거의 반반에 이르고 있다. 2명에 1명 꼴로 반대하는 셈이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표 2> 경상도사람과의 결혼의사 - 전국

	합계		있다	없다	상관없다	모르겠다
	%	응답자수				
전체	100.0	1000	47.4	24.6	23.5	4.6
성별						
남자	100.0	500	48.4	21.8	25.9	3.9
여자	100.0	499	46.3	27.3	21.0	5.4
출신연고1						
호남	100.0	296	42.3	30.5	23.8	3.4
비호남	100.0	700	49.3	22.0	23.5	5.2
출신연고2						
영남	100.0	370	60.7	12.4	22.5	4.3
비영남	100.0	626	39.3	31.7	24.2	4.8
권역별 지역						
서울/인천/경기	100.0	460	36.7	30.9	28.3	4.1
부산/울산/경남	100.0	171	67.3	6.4	24.0	2.3
대구/경북	100.0	115	68.7	7.8	13.9	9.6
대전/충청/강원	100.0	135	40.0	36.3	17.0	6.7
호남	100.0	119	47.6	29.1	20.6	2.7
시도별 지역						
서울	100.0	224	34.4	29.0	33.0	3.6
부산	100.0	83	65.1	6.0	28.9	.0
인천	100.0	53	37.7	32.1	20.8	9.4
대구	100.0	54	53.7	14.8	14.8	16.7
대전	100.0	29	44.8	34.5	17.2	3.4
울산	100.0	22	77.3	9.1	4.5	9.1
경기	100.0	183	39.3	32.8	24.6	3.3
강원	100.0	33	33.3	36.4	15.2	15.2
충북	100.0	32	53.1	25.0	15.6	6.3
충남	100.0	41	31.7	46.3	19.5	2.4
경북	100.0	61	82.0	1.6	13.1	3.3
경남	100.0	66	66.7	6.1	24.2	3.0
전북	100.0	43	46.5	30.2	23.3	.0
전남	100.0	47	53.2	27.7	14.9	4.3
광주	100.0	29	40.0	29.8	26.0	4.3

&lt;표 3&gt; 전라도사람과의 결혼의사 - 전국

	합계		있다	없다	상관없다	모르겠다
	%	응답자수				
전체	100.0	1000	39.4	29.1	25.4	6.1
성별						
남자	100.0	500	47.2	19.5	28.2	5.0
여자	100.0	499	31.5	38.8	22.6	7.1
출신연고 1						
호남	100.0	296	59.2	12.9	24.4	3.5
비호남	100.0	700	31.1	35.9	26.0	7.0
출신연고 2						
영남	100.0	370	34.7	30.6	27.1	7.6
비영남	100.0	626	42.2	28.1	24.6	5.0
권역별 지역						
서울/인천/경기	100.0	460	33.7	32.6	28.5	5.2
부산/울산/경남	100.0	171	36.3	28.7	28.7	6.4
대구/경북	100.0	115	36.5	26.1	24.3	13.0
대전/충청/강원	100.0	135	33.3	43.0	18.5	5.2
호남	100.0	119	75.4	3.7	18.0	2.9
시도별 지역						
서울	100.0	224	31.7	28.1	34.8	5.4
부산	100.0	83	36.1	27.7	31.3	4.8
인천	100.0	53	35.8	35.8	17.0	11.3
대구	100.0	54	24.1	18.5	37.0	20.4
대전	100.0	29	44.8	37.9	17.2	.0
울산	100.0	22	45.5	36.4	4.5	13.6
경기	100.0	183	35.5	37.2	24.0	3.3
강원	100.0	33	27.3	42.4	15.2	15.2
충북	100.0	32	34.4	46.9	15.6	3.1
충남	100.0	41	29.3	43.9	24.4	2.4
경북	100.0	61	47.5	32.8	13.1	6.6
경남	100.0	66	33.3	27.3	33.3	6.1
전북	100.0	43	69.8	4.7	23.3	2.3
전남	100.0	47	83.0	2.1	10.6	4.3
광주	100.0	29	71.5	4.8	22.0	1.8

위의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것은 분명하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대한 거리감이 가장 먼 곳은 충청과 강원, 그리고 인천/경기 지역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영·호남으로부터의 유입인구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을지도 모르나,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영남의 중심도시에서도 전라도 사람에 대한 반발감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도시로 갈수록 사회적 거리감으로 본 지역감정의 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로 갈수록 익명성이 높아지면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 지역민들을 쉽게 대할 수 있게 되면서 출신 지역에 근거를 둔 막연한 고정관념이 희박해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흔히 생각해오던 것과 달리 영·호남간의 지역대립은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충청/강원처럼 예상치 않았던 지역에서 전라도 뿐만 아니라 경상도에 대해서조차 지역감정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조사에서 나타난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첫째로 그간 정치무대에서의 소외감이 표현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이전에는 호남지역이 소외당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19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자신들만 소외당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선동도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충청도 핫바지론’이나 ‘충청도 임금’과 같은 정치적 구호들이 이들의 소외감과 반발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해석은 지역감정의 근원이 서울과 지방의 구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방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울이 지방을 차별하고, 인접지역인 충청도나 강원도는 서울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전라도나 경상도와 자신들을 구분하려 했고, 그에 따라 서울 인접지역의 타 지역(지방)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강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인과의 결혼에 대한 전국 응답자의 찬성/반대율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관계의 강도 혹은 심각성이 높아질수록 찬성은 낮아지고 반대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본인의 결혼에서는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과 결혼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적 편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경상도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전라도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크지는 않다. 찬성은 10% 미만, 반대는 7%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전라도에 대한 일방적인 배척감은 많이 약화된 셈이다.

<표 4> 경상도/전라도인에 대한 각 관계의 찬성/반대 비율(%) - 전국1)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친구삼기2)	92.3	4.1	89.3	6.4
집 세주기	94.0	4.0	85.9	11.4
자녀의 결혼3)	87.5	10.9	79.4	17.3
본인의 결혼4)	70.9	24.6	64.8	29.1

- 1) 모든 항목에서 '모르겠다'는 응답 제외
- 2)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 제외
- 3) 찬성 = 찬성한다/반대는 안한다/상관없다  
반대 = 반대한다/찬성은 안한다
- 4) 찬성 = 찬성한다/상관없다

### 3) 경상도와 전라도간의 지역감정

우리 사회에는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언론을 위시한 각종 매체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정치권, 시민단체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이번 16대 총선에서 영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것은 '반 DJ정서'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DJ라는 상징은 결국 호남을 대표하

는 것이므로 호남에 정권을 빼앗긴 상실감이 영남인들을 몽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남과 호남의 지역감정이 부각되는 이유는 우리 정치의 양대 세력을 두 지역이 대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그간 한국 정치의 지배층이었던 영남세력에 맞설만한 대표적 지역집단은 호남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영·호남 사람들 간에는 어느 정도의 배타적 감정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이미 앞의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양 지역간의 지역감정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이나 영남에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역은 충청/강원이며, 그 다음이 경기지역이다. 이와는 달리 나간채(1991)의 연구에서는 두 지역간의 거리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김혜숙(1988)의 연구를 보면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거리감에서 영남인과 비호남인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볼 수는 없다. 1997년의 광주사회조사연구소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김순홍·최준영·양철호, 1998). 본 연구를 포함해서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연구결과들은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 예상보다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결론이 민경환(1991)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영남과 호남의 지역감정은 개인적 수준에서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호남에 대한 배타적 감정은 영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영남인들에 대한 호남인의 태도도 비영남인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간의 연구를 보면 호남인이 유독 영남인을 싫어한다는 근거는 별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수준에서는 영호남간의 갈등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는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집단적 배타성이 표면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마치 선거에서 후보의 인물보다는 출신지역이나 당을 문제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민경환의 논의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호남인에 대한 타지역의 편견이 만연되어 있으며, 영남인에 대한 태도가

호남과 비호남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 실상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호남인에 대한 편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영남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상당 수준 만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충청/강원 지역에서 영남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은 점은 특기할 만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을 볼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영호남 양자가 모두 지역적 편견의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4. 맺는 말

본 조사의 항목 중 지역간 거리감을 가장 명료하게 나타내는 것은 지표의 강도가 가장 강한 본인의 결혼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비율이다. 일반 국민중 경상도 사람과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비율은 충청/강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경인지역, 호남의 순이다. 이에 비해 전라도 사람과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비율은 충청/강원, 경인지역, 부산/경남, 대구/경북의 순이다. 다른 항목들(친구 삼기, 집 세주기 등)을 보더라도 결과는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도와 전라도에 대해 가장 사회적 거리감이 먼 지역은 충청/강원이고 그 다음은 경인지역이다. 본 조사의 결과를 볼 때, 영남과 호남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 지역민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만큼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호남이 서로 지역감정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되어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전라도 및 경상도 모두에 대해 가장 큰 사회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충청



/강원 지역이라는 것이 본 조사의 결과이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지역감정의 근원은 서울과 지방의 구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방을 차별하는 관습이 내려왔을 것이다. 서울 및 인접 지역(경인, 충청, 강원)에서 전라도와 경상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크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이 지방을 차별하고, 인접 지역인 충청도나 강원도는 서울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타 지역과 자신들을 구분하려 한다. 이에 따라 타 지역(지방)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강했을 수도 있다.

물론 경상도에 비해 상대적 낙후지역인 전라도가 부정적인 취급을 더 많이 받기는 했지만 경상도라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 두 지역 모두 피해자인 것이다. 그래도 경상도 지역은 그간 집권 세력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이를 어느 정도 무마해 온 반면, 전라도 지역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 취급을 더 많이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나 강원도 지역은 서울과 동일시하려는 경향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집권당 우선주의 경향(강희경·민경희, 1998)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16대 총선에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의 핵심에 한 번도 이르지 못하면서 이를 동경하는 태도가 확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지역주의의 한 형태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사회의 특성상 지연이나 학연으로부터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출신지역을 등에 업지 않고 성장하기 어려운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벌, 족벌주의의 폐단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공동체적 지향이 강한 우리 문화의 정실주의적 특성이 근본 요인이다. 소위 오랫동안 한 지역에 정착한 민족적 특성의 반영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실 생활에서 지역주의를 단시일 내에 없애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것은 지역주의(혹은 지역이기

주의)지 지역갈등은 아니라고 본다. 갈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각 지역민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갈등이라고 부르는 힘들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것은 자기 지역의 이권을 향한 관심이지 타 지역에 대한 적대감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감정에서 ‘지역’의 대상은 ‘다른’ 지역이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에서 ‘지역’은 ‘내’ 지역이다. 지역감정이 다른 지역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라 한다면 지역주의는 내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지나친 지역주의의 강화는 지역이기주의나 지역패권주의로 발전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지역적 편향은 지역이기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타 지역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해에 집착하다보니 이기적 행동이 표출되는 것이다. 물론 서로 다른 지역의 지역이기주의가 불가피하게 대립하면서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의 형태로 발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로 심각한 지역간 배타성과 적대감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배계급이나 지역의 영주들간의 권력과 영토를 둘러싼 분쟁의 형태로 지역갈등이 존재해 왔지만 이것이 일반 평민들에게까지 전이되었던 것은 아니다. 즉, 지배층의 권력다툼일 뿐 주민들간의 지역갈등은 아니었던 것이다(이병휴, 1991). 우리 사회에 지역간 대립이 팽배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것은 선거철일 뿐이다. 평소에는 오히려 지역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동으로 서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만남의 장에서 특정 지역간의 지역감정이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선거 때만 되면 다시 지역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남영신(1992)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는 ‘지역패권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 자기 지역의 공동이익, 나아가서는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적 행동이 필요할 때는 의식적으로 그에 걸맞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럴 때는 합리적 사고가 지역이기주의에 밀리게 된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내 지역의 이익

을 위해 내 한 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역주의적 투표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지역갈등도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지배세력간의 분쟁의 와중에서 지역주의가 형성되고 이것이 지배세력간의 갈등을 거치면서 강화되고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주의를 개탄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왜 지역주의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가. 이는 이미 지역주의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데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태도가 고정관념화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한 개인의 태도와 실제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태도연구들이 개인들의 '진실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태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추후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지역감정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한 태도를 표현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를 위장해서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가 실제 태도는 반지역주의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확고하지 않다면 선거 당일의 투표행위는 지역주의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만 독특한 현상이 아니다. 1933년부터 1963년까지 30년 간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분석한 Rossi(1966)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결론을 내렸다. 비록 우리와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충분히 음미할 만한 내용이다.

- (1) 선거의 이슈는 투표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자신이 평소 지지하던 당이나 후보의 입장에 따라 이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 (2)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지지후보를 바꾸는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선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 (3)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중매체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4) 개인적인 변수들(인성, 태도 등)은 지지하는 정당의 선택에 별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변 환경과 전통적 성향이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 (5) 정당의 선택은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사회적 범주(예를 들면, 종교나 인종)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 (6) 한 개인의 전통적 투표성향을 결정하는 것은 일차적 집단(가정, 직장 등)이지 개인의 인성구조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위의 결론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투표행위를 너무 결정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성향이 후보자의 입장이나 행태,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작스럽게, 혹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Sears, 1977).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서는 Rossi의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인다. 이번 16대 총선을 보더라도 후보가 어떤 이슈를 들고 나오더라도 지역성이 강한 지역의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국의 집단이나 범주를 한국의 지역으로 바꾸면 우리 국민들의 투표성향이 바로 지역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성향이나 태도, 혹은 정치적 입장은 이차적 요인일 뿐이다. 또한 한번 형성된 투표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 연구의 조사시점이 1998년 후반기이고 16대 총선은 2000년 4월에 치뤄졌다. 이전의 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적 경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다시 지역주의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두 시점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의 논의를 상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간 거리감은 개인 수준에서 각 지역민들 간에 느끼는 태도를 측정한 것이다. 대외적인 입장에서 지역감정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조사결과는 일반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남과 호남과의 갈등도 일반적인

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개인적인 만남에서 상이한 지역민들간에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지역화합을 위한 각종 교류활동을 보면 참가자들의 열성도 높고 보람도 크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이다(민경환, 1991). 투표행위는 비록 그것이 개인적인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기 소속 집단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태도(혹은 표현된 태도)와는 다르다. 공동의 이해일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결과가 중시되는 행동 표현에서는 결국 지역주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한 지역주의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 강희경·민경희(1998), 「지역사회 권력자의 권력 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2집, 한국사회학회, 757~786면.
- 김동원·김순홍·양철호·최준영·최석만·민형배(1998), 『국민이 보는 5·18』, 광주사회조사연구소.
- 김만흠(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 김문조(1993), 「지역주의의 형성과정과 특성」, 임희섭·박길성(편), 『오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51~168면.
- 김선업(1992), 「한국사회 연줄망의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학』, 26집, 1~33면.
- 김선업(1996), 「한국사회의 변동과 사회적 결속양식」, 최경구(편), 『한국사회의 이해』, 일신사, 35~58면.
- 김순홍·최준영·김상욱·양철호·허건홍·이후석·김병인(1999), 『시민의식 종합조사 및 정책연구』, 광주사회조사연구소·광주광역시.

- 김순홍·최준영·양철호(1997), 『전라도 타화상 연구』, 광주사회조사연구  
구소.
- 김순홍·최준영·양철호(1998), 『무등일보 '98 신년특집 전국여론조  
사』, 광주사회조사연구소.
- 김용학(1990), 「엘리트 층원에 있어서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 김종철(1991), 「지역감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역감정연구』, 학민  
사, 13~29면.
- 김진국(1987), 「영호남 대학생의 상호간 차이지각 연구」, 『사회심리학  
연구』, 3권 2호, 113~147면.
- 김혜숙(1989),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한국심리학회(편), 『심  
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37~62면.
- 나간채(1991), 「지역간의 사회적 거리감」, 『지역감정연구』, 학민사, 19  
1~211면.
- 남영신(1992), 『지역패권주의 연구』, 학민사, 1991.
- 민경환(1991), 「사회심리학적으로 본 지역감정」, 『지역감정연구』, 학민  
사, 171~190면.
- 온만금(1997),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에 나타난 지역주의 추이와 양  
상」, 『한국사회학』, 31집, 한국사회학회, 737~757면.
- 이병휴(1991), 「지역갈등의 역사」, 김학민·이두엽(편), 『지역감정연  
구』, 학민사, 83~121면.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5), 『전남이미지 실태연구』.
- 최상진·한규석(1998), 「지역정체감의 상징적 구성」, 『지역사회의 심리  
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창설 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8~16면.
- Bogardus, E.(1971[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 in K. Thomas(eds),  
*Attitudes and Behavior*, London: Penguin Books, pp. 87~97.
- Rossi, P. H.(1966), "Trends in Voting Behavior Research: 1933-1963," in E.

C. Dreyer and W. A. Rosenbaum(eds), *Political Opinion and Electoral Behavior*, Belmont, CA: Wadsworth, pp. 67~78.

Sears, D. O.(1977), "Political Behavior," in G. Lindzey and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5, Reading, Mass: Addison-Wesley, pp. 315~458.





# 근대 상해 노동자 사회의 지역적 분할의 구조

김태승

## 1. 문제의 소재

중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현상의 하나는 시장의 확산과 그에 따른 지역의식의 고착화이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경쟁을 보장하는 무대로서 선전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를 정글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당성은 보통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도구적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게 된다. 말하자면 정당성은 시장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논리 체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성은 그것이 이용되는 층위에 따라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전체로서의 시장을 말할 때와 개별 영역에서 시장에 접근할 때에 사용되는 정당성의 논리에는 차이가 있었다. 상해를 예로 들면, 전체로서 상해 시장은 제국주의 자본과 민족자본의 경쟁 무대였으므로 중국계 자본이 자기의 증식을 위하여 가장 이용하기 쉬운 논리는 “국산품애용”과 같은 애국적 논리였다. 하지만 결국 상해시장에서 경쟁도 개별 자본간의 경쟁이었으므로 독점을 지향할 때 민족자본 내부에서도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러한 경쟁에서 내부를 결속시킬 수 있는 정당성은 보통 지역의식에 근거를 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

김태승 아주대 교수(동양사). 최근 논문으로 「중국 상해의 도시구조」(1997), 저서로 『20세기의 중국』 공저(1999)가 있음.

지역의식은 흔히 경쟁과 생존을 위한 논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일종의 허위의식이고 그러한 정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이데올로기였지만 정작 자본에 이용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식되지 않았다.

지역의식이 자본의 확대 재생산과정에서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는 중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지만, 중국의 그것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었던 데는 중국 특유의 상황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본고에서 다루는 1920년대라는 상황을 전제로 하면 그러한 중국적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지역적 정체성의 핵심인 지역 단위가 중세왕조였던 당대(唐代) 이후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신해혁명 이후 중국 자본주의의 본격적 발전 과정에서 국가는 거의 무력했고, 따라서 자본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율적 사회통합기제로는 지역정서가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상해 자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본축적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용하는 체제를 발전시켰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1920년대 상해 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노동운동에서 지역의식은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고착화시키고, 노동운동의 발전을 제약하는 핵심적 요소였다. 그러나 계급적 관점이 노동자 연구를 지배하면서 그 점이 크게 주목되지는 못했다. 본고에서는 상해노동계급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지역의식이 노동계급의 발전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노동자 운동에서 하나의 참고 사례를 삼고자 한다.

## 2. 근대 상해의 지배체제와 지역의식

### 1) 지역방과 상해 사회체제

상해 지배체제의 저변에는 지역방이라는 독특한 요소가 놓여 있어서

사회적 권력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의사전달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사회 전체보다는 지역방이라는 부분의 이해관계에 우선을 두는 체제였다. 그 지역방 사이에는 사실상 서열이 존재했으며 그것은 한 개인이 상해 사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의 높이에도 영향을 끼쳤다.<sup>1)</sup>

전란을 피해서, 투자할 곳을 찾아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 자리를 찾아서 상해에 온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기존의 상해 사회질서에 편입되어 갔다. 이 때 편입의 매개물은 일차적으로 동향조직이었다. 따라서 상해 중국인 사회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지역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적어도 1920년대에 들어오면 사회적 계서제와 지역성의 결합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고착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Honig, 1989).

상해에서 활동하던 주요 객방(客幫: 특정지역 상해이주자의 동향조직, 일종의 향우회)에는 광동방, 복건방, 영파방, 산서방 등이 있었다. 토착방인 상해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 오래 전부터 상해에서 활동했던 객방은 광동방이었다. 이들은 원래 광동지역에서 활동했으나 외국기업의 상해이동에 따라 그들과 함께 상해에 진출했던 집단이다. 외국어에 비교적 능통했고 외국무역상과의 거래 경험을 풍부히 가졌던 그들은 매판으로서 상해 상권을 장악했던 것이다. 복건방도 오랜 해외 무역의 종사경험을 바탕으로 상해의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영파방은 상해와 함께 개항되었으나 상해의 발전으로 그 역할이 오히려 축소된 영파 지역 출신자들이 집단적으로 상해에 이주하여 매판업에 진출하고 광동방이 소홀히 여겼던 전

1) 회관(會館)과 함께 상해인의 생활과 연계된 중요한 조직은 공소(公所)였다. 회관과 공소의 관계는 공소가 대체로 동향인(同鄉人)을 기반으로 성립된다는 점에서 회관 조직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조직과 동향조직의 결합의 결과 거시적 사회관계에서 직업과 부의 수준에 따른 조직간의 서열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根岸信, 1951: 17). 영파방의 성장과 강북인(江北人)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그러한 지방성의 영향력을 반영한다.

통 금융업을 소흥방과 연대하여 장악함으로써 마침내 상해 객방의 1인자로 부상하였다.<sup>2)</sup>

상해에 진출한 외지인들은 이러한 지역 방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상해에서의 정착기반을 닦아갔다. 인간 상호간의 사이를 조율하는 다른 기준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향은 혈연 다음으로 인간적 신뢰를 보장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상해에 경제적 기반을 이미 조성하고 있던 객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이미 출발에서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상해에 진출한 강북인(蘇北人: 강소성의 양자강 이북 지역 사람들)들의 경우, 조직이 있기는 했으나 경제력이 미미했으므로 그들은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의 영역에서부터 이미 제한을 받고 있었다. 즉 그들은 먼저 상해에 진출하여 조직을 형성했던 부유한 객방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영역에서 생계수단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그들은 인력거부나 항만 노동자의 길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그러한 경향은 본적지에 따른 직업의 고정화라는 현상으로 발현되었다.

<표 1> 출신지역별 직업분포

본적지별	직업의 내용
광둥	사무직원, 통역, 식당의 경영자나 지배인 등
영파	매판, 선원, 고용인, 재봉사, 점원, 세탁업
소주	가정부, 자수업 등
남경	귀금속류 상점경영주
양주(강북)	인력거부, 공장 노동자

\*.出典 : 徐雪筠, 1985: 21

2) 根岸佶, 1951: 15-16. 상해의 객방 가운데 산서방은 표호(票號)라 불리는 금융업으로 유명했으나 외국은행의 본격적 진출과 전장업(錢莊業)의 발전 이후 쇠퇴를 거듭하다 신해혁명 이후 사실상 완전히 몰락했다.

이처럼 상해의 지역방은 사회적 계급관계와 결합하여 상당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사회의 가장 낮은 영역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중의 상당부분이 양주 등 강북지역의 출신자들이었던 것이다. 주요 경제 부문만이 아니라 직업 선택에서조차 지역조직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역성은 곧 계급성으로 치환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요컨대 하나의 상해라고 해도 그곳에는 영파·광둥·복건·강북 등의 지역관계가 내면의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하나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해의 사회적 관계는 상해의 언어구조 속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상해 언어는 대략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한다. 광둥어, 영파어, 소북어(강북어), 복방어, 상해본지토어가 그것이다. 순수 상해토어는 상해의 발전과 함께 사실상 소멸되고 변형된 형태의 토착어만이 존재했다. 변형된 형태의 토착어는 영파·소주어의 혼합 형태였다. 이외에 상해 특유의 양경빈(洋涇濱)어라는 것이 존재했다. 양경빈은 현성 북부지역으로 서양인과 중국인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었는데 양경빈어는 양자의 교류 과정에서 형성된 언어체계이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것은 영파어와 소주계 언어였고 가장 세력있는 언어는 광둥어였다.<sup>3)</sup>

언어상의 차이와 지역방에 의한 상해 경제권의 분할은 상해 사회를 단결시키기보다는 분열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상해라는 하나의 도시공간에서 협력하여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공간적 분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경제적 활동이 상해라는 하나의 시장을 무대로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다(根岸信, 1951: 23). 지역성에 따른 거주지 설정과 생업의 연계 그리고 외국인과의 경쟁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단결의 필요성이 그러한 분할에도 불구하고 상해 사회를 하나

3) 徐珂, 1984: 2240~2242. 또 다른 자료에는 일본인의 조사를 근거하여 소주계(蘇州系)가 상해어(上海語)의 75%를, 영파계(寧波系)가 10%를, 그리고 광둥계(廣東系)가 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徐國楨, 1930: 15).

의 질서 하에 통합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와 함께 각 지역방 내부에서도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어 그것의 경제적 역할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sup>4)</sup>

## 2) 주변적 대중의 형성

지역방의 변화로 표출되는 지배권력의 속성과 지배집단의 성격 변화와 함께 상해 사회변화의 주변부에 위치하면서 사실상 그러한 변화에서 소외된 계층이 상해에는 광범위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전술한 사회관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이민으로서 상해에 진출했다고 한다면 이제 언급할 사람들은 유민으로서 상해에 진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이 형성된 학교체제라는 성공의 사다리에 오를 능력도 그에 대한 정보도 없이 상해의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적응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계층이었다. 시장체제의 특징은 자신의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제도를 향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애초부터 없던 집단이었다. 이들을 상해에서는 유맹(流氓)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유맹의 존재는 상해 인구증가 과정의 특이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상해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태평천국, 소도회(小刀會) 봉기, 신해혁명, 강절전쟁 등 내란의 발발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상해에는 근대적 공업이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 이미 상당규모의 무산대중이 축적되어 있었다. 이들의 상해 이주는 피난의 성격이 강했으나 상해의 도시환경과 전거주지의 황폐화로 인한 복귀 곤란이 상해에 정착을 유도했던 것이므로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도시의 주변부에서 잠역층이나 빈민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유민집단의 형성계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면 다음의 다섯가

4) 根岸佳, 1951: 25~26. 방회의 운영에서 신비주의적 요소가 약화되고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화됨.

지 요인이 있었다. 전란과 사회변동에 따른 ① 파산농민 ② 파산수공업자 ③ 실업운수노동자 ④ 파산지주·부농·상인 ⑤ 유랑아동 등의 상해유입이 그것이다(蘇智良·陳麗菲, 1991: 18~19). 국내정치의 문란과 자본주의 세계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진행된 산업구조의 개편과정에서 타의로 탈락한 수많은 농민, 상공업자들이 상해사회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강북 출신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었다(蘇智良·陳麗菲, 1991: 125).

이러한 유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지근(地棍: 무뢰배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다. 한 동시대인은 그 수가 적어도 8,000여인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걸인의 경우도 출신지역별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조직들은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예컨대 공공조계의 북사천로 일대에서는 광동출신 걸인들이 많았다고 한다(徐珂, 1984: 5485).

이렇게 형성된 수많은 유맹층을 중심으로 상해에는 비밀결사조직이 형성되었다. 흥방과 청방이 그것이다. 청말 시기에는 삼합회·가로회 등 반만(反滿)을 내어 건 방회조직이 번성하였으나 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청방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매음·도박·아편굴 등을 경영하여 거액의 부를 축적하고 상해 지하세계의 지도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에 오면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청·흥방의 조직도 변모하였다. 흥방의 경우는 그 지도자들이 교육과 공공업활동을 통해 상해사회의 공식부문에 참여하였고 청방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들은 상해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의 공개화를 통하여 이익집단화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sup>5)</sup> 이들은 전근대적 가족의 논리를 조직의 논리로 활용하여 대도시에 진출하여 생존을 모색하던 기층민중을 조직 속에 이끌어 들였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공개화를 통해 공식사회의 성원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상해의 중국인 사회는 지역의식에 기초를 둔 사회조직이 주변적 대중을 장악하고 경제력을 기초로 독자적 이익집단으로서 사회권

5) 蘇智良, 1991: 71 이후를 참조.

력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들이 상해에서 것처럼 민중을 파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전지역을 통괄하여 장악할 수 있는 정치적 권위가 상해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해전역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조계 당국은 언어의 문제, 문화적 차이의 문제, 비용의 절감 등을 이유로 지역성을 이용하는 지하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치안과 관련된 공식 직책을 부여하여 그들의 활동을 묵인하였다.<sup>6)</sup> 일차적으로 자본주의 시장논리가 상해 사회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논리로 작용했으나 그러한 논리의 핵심은 ‘정글의 법칙’이 됨으로써 상해의 기층민중들은 어떤 합법적 기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sup>7)</sup> 따라서 기층 민중들은 향우회 등의 조직에 더욱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내용에 더욱 잘 반영되어 있었다.

### 3. 상해의 노동자 고용체제

#### 1) 고용방식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까지 상해의 노동자들은 보통 학도제(徒弟制)와 포공제(包工制)에 의해 고용되었다. 산업활동의 주요 영역이 수공업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통적 노동관행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공업의 건설이 확산되고 외국 상품의 수입으로 인한 전통 수공업부문의 파산한 장인, 직인들이 그러한 공장체제에 흡수되고 또 대량의 미숙련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면서 고용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방식

6)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청·홍방의 지도자들은 흔히 경찰과 연계되어 있었다. 두월생(杜月笙)의 딸의 증언에 의하면 프랑스 조계당국이 두월생의 생일에는 반드시 선물을 보내 축하했다고 한다(Betty Peh-t'i Wei, 1991: 143에 수록).  
7) 따라서 동시대인들도 상해를 ‘착취계급의 압착기, 모순의 화약고’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다(新中華雜誌社, 1934: 4).



이 도입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전통과의 단절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고 전통적 체제를 새로운 요구에 따라 변용하는 형태로 고용체제가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한 변용의 수준은 따라서 작업장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하에서는 근대공업부문과 수공업부문을 나누어 1920년대에 그러한 변용이 어떤 형식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가. 근대공업부문의 노동자

근대공업부문의 경우 비교적 대량의 인원이 필요했으므로 그 충원 형식에서도 전통적 중국의 고용관행과는 다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고용체제가 성립하였다. 우선 방적 공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방적공장의 충원형식에는 크게 간접모집과 직접모집의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 간접모집은 특정의 인물에게 노동자 모집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여 노동자를 모집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관리도 사실상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였다(西川喜一, 1924: 102~103). 노동자와 회사의 관계가 공두(工頭: 노동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노동력 판매 중개자)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체제를 흔히 공두제 또는 포공제라고 부른다. 이 방식은 전통적 포공체제의 응용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방적공업 전반에 걸쳐 가장 널리 사용되던 방법이었다. 방적공업의 경우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과 아동이어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직접 회사를 찾아다니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러한 충원체제는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직접모집 방법은 공장입구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거나 모집 광고지를 공장 주변의 거주지구에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회사의 직원을 주변의 향촌에 파견하여 직접 모집하는 방법이 있었다(西川喜一, 1924: 20). 이 세 방법 가운데 앞의 두 방법은 자유로운 노동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가장 자본주의적 노동자 모집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모집에 응모한 노동자의 신원에 대해 고용주가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었으므로, 또 그런 자유로운 상황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이 별로 없었으므로 그다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세번째 방법은 주로 여공 양성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겉보기는 포공제와 비슷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노동자 충원 전반에 걸쳐 기업주가 직접 개입하고 있었으므로 그와는 구별되는 것이다.<sup>8)</sup>

영미연공사(英美煙公司)의 경우도 포공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방적업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어떤 노동자의 증언에 의하면 한 공장의 책임자인 공두(拿摩溫=No.1)와의 안면으로 영미연공사에서 유년공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와 동향인이었기 때문이었다.<sup>9)</sup> 이 때 공두는 노동자의 충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향인이며 직장제공자인 공두에 대해 노동자가 예속적이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회사에 대한 충성보다는 공두에 대한 충성이 노동자에게는 더 중요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의 노동이 대체로 임시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형태의 포공제는 제분공업의 경우에도 발견된다.<sup>10)</sup> 1920년 전후 시기 상해 민족공업의 대표기업이었던 영가(榮家)기업의 복신 8공장 노동자의 증언<sup>11)</sup>에 의하면 공두는 생산공정을 장악하고 노동자 충원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의 일부를 중간에서 수탈하는 존재였다. 게다가 공두들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방회를 조직하여 노동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통제의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해 폭력이 행사되기도 하였다.<sup>12)</sup> 결국 이러한 체제는 노동

8) 일본인들은 이 제도를 본문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종의 인신매매적 노동자 충원방식인 포신제(包身制)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회사의 개입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가 의문이다.

9)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1983: 1027~1028 참조. 이러한 증언은 宇高寧이 영인공장(英人工場)에서의 노동자 충원이 매판제(買辦制)로 이루어졌다고 한 지적과는 배치된다(宇高寧, 1925: 102~103).

10)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1987: 314 참조. 제분공장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경이 있는 사람의 소개와 보증인의 보증이 필요했다.

11)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1962: 135.

과정에 대한 통제를 공동이 장악하는 것이었으므로 주도권을 둘러싸고 그에 대한 기업주의 개혁 작업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둘 사이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강남조선공장의 경우도 노동자 충원 방식으로는 포공제가 일반적이었는데 각 공정에 따라 그 형식에 차이가 있었다. 조선업의 경우 여러 개의 각기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하나의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업종이었으므로 공정마다의 독립성이 특히 강하였던 것이다. 목공의 경우는 5개 광동방 작업책임자(包工老板)와 1개 영과방 작업책임자가 영역을 분점하여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들 책임자들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대형 작업공구를 공급하고 조선공장에서부터 일정량의 작업을 청부받아 일괄하여 업무를 처리한 다음 대가를 받아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 이 경우 노동자와 작업책임자의 관계는 사실상 도제의 관계였고 조선공장 측은 이 관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회사는 재료의 사용과 구입까지를 작업책임자에게 맡겼으므로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체제를 포공제와 구분하여 매판제(買辦制)라고 부르는 견해도 있다(宇高寧, 1925: 102).

#### 나. 수공업·기타노동자

수공업은 전통적 형식을 온존시키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학도제 또는 도제제로 불리는 고용관행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었던 기기(機器)공업의 경우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기기공업은 형성 자체가 전통적 장인체제의 변형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그 충원 형식에서도 전통적 학도제가 유지되었던 것이다.<sup>14)</sup> 특히 과잉노동시장의 존재는 연고제를 통한 학도제적 충원방식이 존속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근대기업으로 변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충원은 해당 공정의 책임자(匠人이나 工頭)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관리도

12)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1962: 134.

13)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1983: 147~151

14) 上海市工商行政管理局, 1979: 52.

위임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 학도(學徒)체제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학도제에서는 노동자가 사부(師傅)·과계(夥計)·학도의 질서 하에 3년 내지 5년의 연한을 마치면 비로소 과계의 단계로 승급할 수 있었다(彭澤益, 1957: 252). 그러나 기기공업에서는 그러한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 수공업이 근대적 회사체제를 갖추게 되면 사부가 경영책임자의 위치로 전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학도들을 데리고 공장체제에 편입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彭澤益, 1957: 253). 수공업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었으므로 충원 방식에서 전통적 방식이 원래의 형태로 고수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형으로서의 학도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비스업도 상황은 동일하였다. 일반 소매업이나 도매업 상점의 점원은 연고자의 소개와 보증을 통해 취업을 하고 학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저임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적 학도제에 따라 노동자로 충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형 백화점의 경우는 모집공고를 내고 시험을 통해 직원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경우도 직종에 따라 노동자 충원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sup>15)</sup> 운수업의 부두 노동자들은 업무가 힘들고 작업량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작업량에 따라 이미 조직된 작업조직의 지도자가 하청을 받아 노동자를 관리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포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字高寧, 1925: 162~163).

## 2) 고용관계의 성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해 노동자의 충원 방식에는 학도제·포공제·공개모집 등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었다.<sup>16)</sup> 그리고 그러한 노동

15)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1988: 257~260 참조.

16) Chesneaux의 연구에서는 매판제, 포공제, 공개모집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가 매판제라는 포공제의 변형을 별도의 충원체제로 보고 학도제를 제외한 것은 근대공업부문 노동자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Chesneaux,

자의 충원은 대부분의 경우 동향조직을 매개로 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학도제는 수공업 분야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다. 상해의 근대공업 분야에서 1920년대 전후시기에 가장 일반화된 노동자 모집방식은 변형된 학도제인 포공제였고 공개모집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었다.

변형된 학도제로서의 포공제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째 유형은 구식 수공업 조직을 그대로 신식공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수공업의 장인은 휘하의 직인과 도제를 인솔하여 신식공장에 고용됨으로써 중층적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때 장인은 공두라고 불리워졌다. 이 유형에는 어머니와 함께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유년공도 포함된다.<sup>17)</sup> 유년공이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형태인데 이는 가내수공업이 공장으로 이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형은 기업가의 모집에 응하여 공장에 취업한 직공 가운데서 견습공에 대해 학도제의 외형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전자에 비해 고용관리 경영의 측면이 강한 제도이다. 특히 외국자본의 공장인 경우 언어·관습상의 장벽으로 인하여 자본가가 직접 인력관리에 나설 수가 없었으므로 전술한 공두(상해 방직업의 경우 那摩渾 즉 No.1으로 불리워졌다)에 작업 통제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충원 까지도 맡기게 되었다.

위의 유형 중 첫 번째에 속하는 사례는 기기공업 등에서 흔히 발견되었다. 앞에서 살펴본것처럼 강남 조선창의 경우 근대 공업의 역사가 일천했던 상해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장인기술자들을 흡수하여 공장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수공업의 장인체제를 공장안으로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숙련공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일본인들이 일본식 노동관리제라고 부르는 제도이다. 기술력이 뛰어난 인물을 노동자 중에서 선발하여 노동관리의 책임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결국

---

1968).

17) デ・エッチ カルプ, 1917: 26.

은 공두로 임명된 자의 기술적 능력이 유지되는 한, 그리고 그에게 노동자관리의 특권이 주어지는 한, 상해에 일반적이었던 포공제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힘든 일이었다.

전술한 노동자 충원 방식이 구시대적인 것이라면 노동자의 공개모집은 상당히 근대적인 방식이었다. 예컨대 상해의 한 방적공장은 1920년 12시간 노동, 3년간 고용, 월 8원의 급여라는 조건을 공개하여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다.<sup>18)</sup> 또 1923년 상해의 한 제사공장에서조차 여공을 공개로 모집하였는데 300명 모집에 2,000명이 모여들어 질서유지를 위해 경관이 동원되기까지 했었다(長野朗, 1925: 114). 이는 당시에 단순 노동자의 확보가 매우 용이했었다는 지적과 함께 생각해 보면 상해에는 상당수의 노동자 예비군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공개적 모집은 공장의 지리적 여건(통근 거리 등) 등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sup>19)</sup> 또 경영자 쪽에서도 관습과 언어가 다른 노동자들이 한 작업장에서 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포공제에 따른 연고 모집을 선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0)</sup>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 충원 방식과 고용관계는 상해근대공업에서 일반적이었던 포공제를 기준으로 보면 노동시장을 개방시키는 방향으로 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순수 경제적 관계로 변모되고 있었으나 과잉의 노동력이 존재했으므로 노동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기생적 중간층이 개입하게 되고 이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방적 노동시장의 형성을 저지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특히 과잉노동력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는 직업을 얻는

18) 이 사례는 『新青年』 7권 6호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해의 노동자들보다는 호남의 노동자들을 다루기가 쉬워서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同號 1면). 그러나 모집의 형태로는 공개화된 형태가 분명하다.

19) 앞에 소개한 厚生紗廠의 경우에도 외지에서 온 여성 노동자의 숙식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장시간의 노동과 2교대제의 노동관행으로 보건대 공장 주변의 거주민이 아니고서는 공장에 취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20) 일본인들은 노동자 관리에서 책임자는 꼭 중국인을 임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고 그에 따라 취업희망자들을 관리하는 중개업의 등장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sup>21)</sup> 자본가 쪽에서도 관리의 효율성·비용의 절감·저임 노동력 확보를 위해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1920년대 후반 한쪽에서의 개방적 노동시장의 맹아 출현과는 반대로 포신제(包身制)·포반처제(包飯處制)와 같은 가혹한 고용체제가 확산되어 나갔던 것이다.<sup>22)</sup>

기업가나 공두들은 자본과 기술, 거기에 방회 등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수공업에서 보이듯이 하급노동자의 수공방회 가입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또 동향회 등의 조직에 가입한다 해도 그것의 지배권은 부르주아지들에게 있었다. 따라서 상해 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던 존재는 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러한 조직체계에도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자들의 발언권이 그러한 조직 내에서 강화되는 경우도 있기는 했으나 그것은 아직 제한적이었다. 상해 노동시장 전체를 통해서 객관적 권위가 노동시장을 통한 노동력의 가격결정 체제를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오직 정글의 법칙만이 관철되는 형태로 상해의 노동시장은 체계화되어 갔던 것이고 노동자들은 지역의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21) 『中國勞動年鑑(1次)』(第三編), 177면에 따르면, 상해에서는 ‘천두점(薦頭店)이라 불리우는 직업소개소가 있었다. 그 밖에 각 동향회관(同鄉會館)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였다.

22) 駱傳華은 『今日中國勞動問題』(上海, 1933), 219~220면에서 포공제를 중국내 외국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 그러한 형태의 노동자 모집에 외국인들이 유맹(流氓)을 동원했음을 비판하고 있다. 포신제(包身制)는 일종의 인신매매조직에 의한 노동자 충원방식이다. Emily Honig의 연구(Honig, 1989)는 그에 대한 전문적 연구이다. 그녀에 의하면 이러한 고용관행은 1930년대에 출현한다.

#### 4. 상해 노동자의 지역별 분열의 구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해의 직업은 출신지역에 따라 분점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분점은 이들의 상해 진출과정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상해에서의 노동자 대중의 형성에는 전란이 가장 큰 작용을 하였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거기에는 서구열강의 침략에 의한 중국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 진행되었던 농촌사회의 변용에 의해 농촌을 떠나 상해로 진출한 사람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해 인구증가에서 특히 1910년에서 1915년 사이의 증가가 주목되는 점은 신해혁명과 같은 전란이 있기도 했으나 그와 함께 상해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후술되겠지만 이러한 인구증가에서 큰 몫을 차지했던 것이 강북인의 상해 진출이었다.

강소성에서 강북지역은 가장 경제적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이었다. 1930년의 단계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은 완전한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봉건적 지주’의 지배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sup>23)</sup> 따라서 상업경제의 발달 정도도 강소성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강북경제의 발전수준의 후진성은 본질적으로 농업경제의 부진에서 비롯되는데 그 원인으로 조사자들은 토지집중, 부세의 과중, 지대의 상승, 고리대, 수리설비의 황폐화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馮和法, 1978: 339). 특히 이 지역 토지 집중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토지 집중이 진행된 결과 다수의 유민이 발생하였고 그들은 상당수가 안청방(安淸幫) 또는 청방이라 불리우는 무뢰조직을 통하여 생존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무뢰조직은 청대에 기원을 둔 것에서 1920년대 후반에 출현한 것까지 다양한데, 조직에 따라

23) 馮和法, 1978: 330~338. 이 자료는 1930년의 것이다. 그러나 조사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다른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활용하는데 주력하였다.



서는 10,000명 이상의 성원을 거느린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전술한 상황으로 인해 유민이 된 강북인들은 운하를 이용하여 점차 강남지역의 대도시로 진출하여 노동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도시진출은 빈곤탈출이었으므로 투자를 위하여 또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상해에 진출한, 그리하여 이미 상해에 동향조직을 형성한 광둥, 복건 등지의 사람들과는 직업의 선택에서 다른 차원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청방과 같은 조직을 그대로 도시에 이식시키는 역할도 하였다.<sup>24)</sup>

그런데 이러한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는 상해의 경우 18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852년 50여만의 인구가 1890년 이후에는 거의 100만을 육박하는 규모로 증대하였다는 점은 그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상해의 공업발전이 1915년 전후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그렇게 상해에 진출한 농촌인구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잡업층이나 도시빈민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진행되었으므로 1920년대가 되었을 때 상해 노동자들은 새로이 상해에 진출하여 노동자가 된 사람들과 이미 도시화에 상당 정도 적응한 뒤 산업노동자로 전환한 두 유형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강북인들이 그러했듯이 향촌사회의 연고관계를 이용하여 도시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그에 따라 직업과 출신지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상해 노동자의 출신지역별 구성과 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4) 馮和法, 1978: 359 참조. 胡訓民 등의 연구에 따르면 민국(民國) 이후 상해 청방의 주요 지도자들은 모두 강북 출신들이었다고 한다(胡訓民 1991: 29). 청방의 형성과 그들이 강북에 근거지를 형성하게 된 1차적 계기는 소도회봉기(小刀會蜂起)의 실패와 그에 따른 ‘동천(東遷)’ 때문이었다고 한다.

&lt;표 2&gt; &lt;상해 근대공업 노동자의 출신지역&gt;

직업	출신지역
유리제조공	상해·영파·절강
연초제조공	상해·영파·포동·강북·절강
방직공	상해·강북·포동·영파·안휘
계분공	상해·포동·강북
인쇄공	상해·포동·영파
강남조선소	영파·광둥·무석·복건·상해
상해병공창	광둥·영파·호북·안휘·천진

위 표에 의해서도 직업과 출신지역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해 본지인의 경우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외지인들이 연고를 통해 상해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해 상해인들은 그곳이 바로 자신들의 생활 터전이었으므로 활동에 장애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sup>25)</sup>

그런데 한 공장에서도 출신지역에 따라 담당분야에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강남조선소의 경우 기기장은 영파·소주인이, 목공은 광둥인이, 철공은 무석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상해 본지인은 단순노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sup>26)</sup> 특히 수공업 분야나 수공업이 근대식 공장체제에 편입된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따른 지역성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었다.<sup>27)</sup>

그러면 가장 근대적 공장체제를 갖추었다고 하는 방적공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국인 자본의 방적공업은 영가기업에서처럼 기업가의 본향출신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고 더욱이 외자기업인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조사자료가 존재하는 일본인 자본의 7개 공장 노동자의 출신 지역별

25) 상해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상해 정착인구의 확대도 그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들 중에는 부업으로 노동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馮和法에 따르면, 농업과 공장(工匠)·교사·공직자의 겸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도시화의 진행을 알 수 있다. 상해의 농촌부에서는 무엇이 부업인지 불분명하게 되었던 것이다(馮和法, 1978: 243). 물론 이것도 1930년의 자료이다.

26) 上海市工商行政管理局, 1979: 50~51. 숙련공은 광둥(廣東)에서, 비숙련공은 영파(寧波)와 상해 주변의 농촌에서 충원되었다고 한다.

27) 상해 병공창(兵工廠) 등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견된다. 李次山등 조사 참조.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8)</sup>

<표 3> 上海紡績工場 勞動者の 出身地域別 分布

구분	강 소 성								타성		계
	호해도	소상도	금릉도	회양도	서해도	강북인	강남인	소계	절강	기타	
인수	5,419	3,450	1,130	5,960	23	3,157	42	19,181	1,486	1,522	22,189
%	24.42	15.54	5.09	26.63	0.10	14.23	0.18	86.44	6.69	6.85	100

\*출전: 長永義正, 1929: 290~297.

\*강북인 또는 강남인은 구체적 출신지가 불명인 경우임.

위의 표는 조사자가 직접 해당공장의 협조로 조사한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이 표를 통해서도 위의 견해가 입증되고 있다. 방적공장 노동자들 가운데는 상해 본지인과 강북 출신들이 가장 다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북출신이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의 주요 공급지역은 도시보다는 농촌이었다. 그밖에 특정 공장의 노동자들 가운데는 군대해산으로 실업자가 된 전직 군인들도 많았다고 한다.<sup>29)</sup>

그러한 사실은 우고령(宇高寧)의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宇高寧, 1925: 329). 그의 조사에서 출신지역이 비교적 분명한 강소성 출신자의 경우 주요 도시 지역 이외의 출신자가 전체의 약 60%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의 공급지가 대도시 이외의 지역 즉 농촌임을 반영하고 있다. 강소성 지역의 강남북 비율을 보아도 그 점은 분명하다. 강남지역은 강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화·공업화가 진전된 곳이었으므로 강북출신의 노동자가 상해에 많이 진출했던 것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도시진출과 노동자화에는 3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한다. 그 첫째 유형은 당지 향민이다. 이 유형의 노동자들은 토지와 거주할 주택이 있으며 오랫동안 상해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로 공장에

28) 長永義正, 1929에 의하면 저자가 설문을 보내어 조사를 했다고 한다. 조사대상 공장에는 内外綿, 裕豊, 公大, 上海製造絹絲, 豊田, 日華, 大康 등 7개사였다. 조사시점은 1926년 1월이다.

29) 「滬西勞動狀況」, 『覺悟』(勞動紀念號), 1922년 5월 1일자.

출퇴근하는 일종의 겸업 노동자들이다. 주요 거주지는 포동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가내수공업으로 방사직포업을 운영하다 근대공장의 신축으로 일거리를 잃은 사람들이 근대공업의 노동자로 전화한 경우가 많았다.<sup>30)</sup> 둘째는 타현 향민이다. 이들은 상해에 있는 친척을 연고로 하여 상해 노동자가 된 사람들이다. 셋째는 남통, 송명, 통해의 객민(타향에서 온 이주민)이다. 이들은 당시 빈 농지가 많았던 통승해 지역에서 빈 땅을 얻어 소작인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약간의 여유를 비축한 일부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소년 소녀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상해지역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농사를 짓다가 뒤에 상해사람들을 사귀어 그들의 도움으로 노동자가 되었다.<sup>31)</sup>

이것은 1920년 상해 노동상황 조사원의 설명인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번째 유형의 설명이다. 그것은 농민의 도시 이주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서 객민은 토지경작을 통해 어느 정도 잉여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도시 진출과 공장노동자화는 상황에 쫓긴 것이라기보다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즉 농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공장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이러한 노동자의 출신지는 노동의 행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즉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근면하게 일하는 부류는 상해 근교 등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노동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상해 출신은 직장 이동이 잦고 자신의 이익 추구에 열심이어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고 한다. 강북 지역 출신자들의 경우는 언어상

30) 『民國日報』, 1920년 2월 25일자 「本埠新聞」란에 실린 浦東華商實業調查. 이들 대부분은 부녀자들이었다.

31) 李次山, 1920: 8~9면. 이 설명은 주로 방적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

32) 이런 사례는 Anderson, Adelaide, *Humanity and Labour in China*, London, 1928; 日譯本 高山洋吉譯, 『支那勞動視察記』(東京: 生活社, 1939), 288면에도 소개되고 있다.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의 문제, 공장체제에의 적응능력 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있다(西川喜一, 1924: 11~12). 이러한 지적은 계절적 노동자와 상시 노동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질적 차이를, 그리고 도시에 적응한 노동자와 처음 도시에 진출한 노동자 사이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생활과 공장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시민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게 된, 즉 농촌과 사실상 단절된 상해 출신 노동자들과 농업으로 회귀할 생각을 지닌 노동자 사이에는 의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수공업 분야의 경우, 출신지별 분포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표 4> 수공업노동자의 출신배경

수공업분야	출신배경
재봉	영파 · 상주 · 상해 · 호북
이발	양주 · 진강 · 구용 · 상해 · 호북
장업	절강 · 해염 · 영파
철업	무석 · 상해 · 소주 · 영파 · 호북
목업	영파 · 소주 · 상해
돈모가공업	호북 · 광둥 · 상주 · 상해

수공업분야는 상해의 도시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이식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노동자의 충원도 대략 이식된 지역출신자로 이루지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수공업분야는 노동자 충원 방식이 독특했으므로 그에 따른 조직이 성립되어 있어서 그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sup>34)</sup> 그밖에 인력거 노동자에는 강북출신이 많았고 부두 노동자에는 진강, 안휘, 양주 등의 3개 동향조직에 소속된 노동자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sup>35)</sup>

33) 李次山, 1920: 668~669. 宇高寧, 西川喜一의 연구서 및 『勞動年鑑』第1編, 358면 참조.

34) 上海市工商行政管理局, 1979 참조.

35) 宇高寧, 1925: 162. 안휘(安徽) 지역은 1922년 자료에 의하면 중국 전체에서 전농(佃農)의 비율이 복건(福建), 사천성(四川省) 다음으로 높았다. 안휘 출신이 상해의 부두노동자에 많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馮和法,

운수교통 노동자들의 경우도 노동자 총원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성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상해 노동자의 출신 지역별 구성 상황을 살펴보았다. 결국 상해 노동자의 상당수는 개방된 노동시장을 통해서보다는 폐쇄적 동향조직을 통하여 총원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상해 노동자를 통합시키기보다는 분열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부문에서의 집단적 의사 결정에서는 자연에 기초한 비합리적 정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방적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각 공정의 책임자를 포함하는 관리직과 노동자 사이에 출신 지역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양자 사이에 대립이 발생했을 경우 계급대립의 측면보다는 지역적 정서대립의 외형을 갖기가 쉬웠다. 예컨대 강북인은 인력거 노동자라든가 부두 노동자 등 단순 노동에 주로 종사했고 방적 공장에서도 상층노동자보다는 하층노동자에 많았고 광동인 등은 숙련공이나 상층노동자로서 책임있는 자리에 많았으므로 작업장 내에서의 대립은 지역적 대립의 양상을 지닐 수도 있었던 것이다.<sup>36)</sup> 요컨대 지역적 배경과 작업장에서의 지위가 결합된 형태의 지역의 서열화는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까지도 결정하였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도시의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의 문제가 있었다. 농촌을 떠나 도시에 진출하여 노동자가 되었던 이들은 우선 낮선 사람들과, 낮선 분위기 속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아야 했다. 그것은 온정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던 촌락공동체의 향촌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sup>37)</sup> 게다가 그들은 생존을 위해 취업한 공장에서 냉혹한 경제 위주

1978: 136~137).

36) 지역간의 갈등은 1922년 진행된 갑북(閘北) 제사여공(製絲女工)들의 파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上海商務官事務所, 1925: 13~15).

37) 橋樑, 1956의 제4장 1절 참조. 그는 이러한 경향에서 파생된 여러 특징을 중국 노동자의 중세기성(中世期性)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그것은 지나친 표현으로 생각된다. 도시에 진출한 농촌출신 노동자라면 그것은 항용 있을 수 있는 현상이지 중국만의 특성은 아니다. 또 이주한지 오래된 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의 가치관에 직면해야 했다. 시간 자체가 금전으로 환산되고 일한 단위 생산물만큼의 댓가가 정확하게 치루어지고 관리되는 공장체제는 그들에게 정신적 평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아니었다.

생활의 속도나 길이도 농촌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공장 노동자의 경우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은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하는 형태의 것이 아니었다. 노동의 전과정도 짜임새 있는 공장체제의 관리 속에서 일정 시간 내에서 일정 분량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매시간 매분 단위로 점검되었으므로 농촌에서와 같은 유장한 노동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노동을 그들은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고용자와의 관계에서도 인간적 유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냉혹함이 깃들어 있었다. 작업의 형태에서도 각자 맡은 영역에서 타인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형태였고 노동의 결과물은 대부분 단순한 반복작업을 통해 생산되었다. 노동자들이 도박 등의 즉물적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녔던 것은 이러한 정신적 상황과 관계가 있었다. 상해는 승리자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출구가 막힌 패배자의 마지막 정착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했으므로 노동자들이 방회와 같은 결사체를 통해서 낯선 세계 속에서의 도피처를 찾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도시의 무뢰배들은 공장에서나 거주지에서나 노동자들을 갈취하였으므로 오히려 그 조직의 일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도 있었다. 호서의 노동상황을 조사했던 인물은 공인조직으로서 가장 지배적인 것이 ‘안청방(安淸幫)’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술한 상황의 반영이었다.<sup>38)</sup> 안청방은 청방의 다른 이름<sup>39)</sup>으로 결국 호서 노동자의 대부분은 그러한 무뢰적 비밀결사 속에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당수의 여성 노동자들도 그러한 낯설고 혼란한 세계 속에서 자신

---

도 여전히 그들은 1세대 노동자들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

38) 「滬西勞動狀況」참조.

39) 淸과 靑은 함께 씌였으며 安淸은 扶淸과 같은 의미였다고 한다(李世瑜, 1986: 35 참조).

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동료 여성 노동자들과 의자매를 맺어 정서적·경제적 보호막을 스스로 형성하였다. 이 세계는 가족제의 외형을 가진 온정의 세계로서 차가운 도시생활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정 이외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남성들의 경우도 의형제를 맺고 형제회를 조직함으로써 사회적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이기는 했으나 상당 정도 상해의 도시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새로운 적응의 방식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러나 자본가·기업주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신들 내부의 한계상황을 타파하려는 지향성을 갖게 되었다. 절망적 현실에의 대응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여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폐쇄된 노동시장의 형성과 노동력 배치의 지역성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수평적으로 결합되기보다는 수직적으로 결합되게 되었고, 자신들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타파하려는 의식을 갖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 5. 맺음말-상해 노동자와 사회운동

1920년대 상해 사회에는 지역성에 기반을 둔 지배체제가 관철되고 있었다. 대체로 노동자들을 지배하였던 조직에는 일종의 향우회 조직인 지역방과 무뢰적 비밀결사 조직인 청·홍방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본과 폭력을 매개로 노동자 세계를 분할 지배하였다. 지역방은 보통 자본가들의 출자에 의해 운영되고, 그것은 일종의 복지 기관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노동자들을 쉽게 자신들의 통제하에 장악할 수 있었다. 일반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충원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나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러한 동향조직을 활용한 노동자 충원을 선호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출신지역이 다르면 언어소통 등에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고용정책에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상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개된 노동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향관계를 기초로 한 전통적 고용체계를 통하여 임노동자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포공제, 학도제 등 전통적 노동자 관리체제는 공장체제 내에서조차 작업장 내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의 유일한 원리로 존속될 수 있었다. 노자(勞資)간, 노노(勞勞)간의 질서를 규제하는 다른 원리는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으며 노동자들은 전통적 질서 안에서 새로운 상해 시장사회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상황이 이러하였으므로 상해의 노동자들이 상해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동자들이 역사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어쨌든 5·4시기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삼파투쟁(파업, 파시, 수업거부)의 중심세력 가운데 하나로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사회운동세력으로서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 운동의 주도권은 부르주아지들의 장악 하에 있던 동향조직과 학생들에게 있었고 노동자들은 위로부터의 인도에 의해서 애국운동에 주변적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상해 노동자의 주변적 성격은 5·4관계의 문제제기나 운동의 조직화 과정에 노동자들이 거의 발언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 삼파투쟁에서 가장 큰 사회적 힘을 발휘한 것은 상인들의 파시였으며, 노동자들의 파업은 교통운수노동자들의 파업동원을 통해서야 비로소 사회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빈곤선 주변의 노동자들로서는 파업의 실현 자체가 생활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었으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삼파투쟁의 한 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동향회나 그것에 기초를 둔 동업조합 조직으로 외부세계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지역성이라는 한계를 상해 노동자들은 1920년대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중국 공산당의 노력이 부분적 성공을 거두기는 했으나, 지역주의의 한계의 돌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타협을 통해서였던 것은 지역의식의 두터운 벽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

리고 그것은 노동운동의 일시적 고조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의 노동자들이 중국의 주요 사회변혁운동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Anderson, Adelaide(1928), *Humanity and Labour in China*, London.(日譯本: 高山洋吉譯, 『支那勞動視察記』, 東京:生活社, 1939)
- Betty Peh-t'i Wei(1991), *Shanghai: Crucible of Modern China*,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Chesneaux, J. Wright(1968), *The Chinese Labour Movement 1919~192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nig, Emily(1989), "The Politics of Prejudice : Subei People in Republican-Era Shanghai," *Modern China*, Vol. 15, No. 3.
- Honig, Emily(1986), *Sisters and Strangers (WOMEN IN THE SHANGHAI COTTEN MILLS, 1919-194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 Olga(小川修譯 1954), 『中國の家族と社會』, 東京: 巖波書店.デ・エッチ カルプ(1917), 「上海紡績工場の職工事情」, 『支那』8권, 11호. 「滬西勞動狀況」, 『覺悟』(勞動紀念號), 1922년 5월 1일자. 『民國日報』(1920), 2, 25일자. 『星期評論』(1919), 第5號(7.6.)
- 古廐忠夫(1977), 「五・四運動直後の上海勞動運動」, 『新潟史學』 10호.
- 橋樸(1946), 『支那社會研究』, 東京: 日本評論社.
- 根岸佶(1951), 『上海のキルド』, 東京: 日本評論社.
-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1983), 『江南造船廠歷史』, 鹽城: 江蘇人民出版社.

-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1958), 『南洋兄弟煙草公司史料』, 上海: 人民出版社.
-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1988), 『上海近代百貨商業史』,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1962), 『榮家企業史料 1896-1937』(上), 上海: 人民出版社.
-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1983), 『英美煙公司在華企業資料匯編』(第3冊), 北京: 中華書局.
-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1987), 『中國近代面粉工業史』, 北京: 中華書局.
-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城市經濟組(1965), 『上海棚戶區的變遷』, 上海: 人民出版社.
- 上海商務官事務所(1925), 『最近中國罷工事情』, 上海: 同社務所.
- 上海市工商行政管理局 外編(1979), 『上海民族機器工業』(上·下), 北京: 中華書局.
- 徐珂 編撰(1984), 『清稗類鈔』(第5冊), 北京: 中華書局.
- 徐國楨 編(1930), 『上海生活』, 上海: 世界書局.
- 徐雪筠等 譯編(1985), 『上海近代社會經濟發展概況』(海關10年報告: 1882~1931), 上海: 社會科學院出版社.
- 西川喜一(1924), 『中部支那勞動者の現象と全國勞動爭議』, 上海: 日本堂書店.
- 蘇智良·陳麗菲(1991), 『近代上海黑社會研究』(中國社會史叢書), 浙江人民出版社.
- 新中華雜誌 社編(1934), 『上海的將來』, 上海: 中華書局.
- 宇高寧(1925), 『支那勞動問題』, 上海: 日本堂書店.
- 李世瑜(1986), 「青幫早期組織考略」, 『舊上海的幫會』(上海文史資料選輯第54輯), 上海: 人民出版社.
- 李次山外(1920), 『上海勞動狀況』·內務省社會局第一部.
- 長野朗(1925), 『世界の脅威--支那勞動者及勞動運動』, 北京: 燕塵社.
- 長永義正(1929), 『支那經濟物語』, 東京: 大板屋.

彭澤益 編(1957), 『中國近代手工業史資料』(第3冊), 北京: 中華書局.

馮和法 編(1978), 『中國農村經濟資料』(上), 臺北: 華世出版社.

胡訓民 外(1991), 『上海幫會簡史』, 上海: 人民出版社.

#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 국민 정체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이영석

## 1. 두 사건이 말해주는 것

영국은 작은 섬나라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네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잉글랜드는 게르만 이주민, 즉 앵글로-색슨 계통의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지역의 주민은 켈트(Celt)계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영국의 공식 국호는 ‘대(大)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다. 영국 국호의 변화를 살펴 보면, 이 나라의 역사는 잉글랜드가 다른 지역을 병합하여 팽창해왔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우리는 이들 지역 모두를 가리켜 흔히 ‘영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관행은 기실 잉글랜드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 제국(帝國)의 해체 및 경제 쇠퇴에 뒤이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세력을 얻기 시작했고,

---

**이영석** 광주대 교수(서양사). 최근 논문으로 「언어, 공장, 산업화」(1999), 「디지털 시대의 역사학-긴장과 적응의 이중주」(2000), 최근 저서로는 『다시 돌아본 자본의 시대』(1999)가 있음.

- 1) 잉글랜드는 1536년 웨일즈를, 그리고 1707년에는 스코틀랜드 합병한다. 이 때 국호는 ‘대브리튼 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이었다. 그후 1800년에 아일랜드를 합병하면서 국호도 ‘대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으로 바뀌었고 아일랜드가 독립함에 따라 국호 가운데 ‘아일랜드’도 ‘북아일랜드’로 변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분리 움직임은 좀더 분명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운동은 별로 없었다. 역사적으로 18세기 초까지 잉글랜드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19세기 영 제국의 번영기에는 ‘대브리튼’(Great Britain) 국민이라는 의식을 뚜렷이 나타냈으며, 제국의 침병 역할을 기꺼이 맡았다. 19세기의 이러한 분위기에 비하면 오늘날의 분리 움직임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우리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이같은 대조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두 사건을 지켜본 적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1997년 6월 30일 홍콩 반환 직전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이루어진 영 육군 42 보병연대의 기념행진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해 9월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구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이다.

블랙워치(Black Watch)라고 불린 이 부대는 역사적인 기념행진을 위하여 영국 본토에서 특별히 파견되었다. 이 행사에서 병사들이 스코틀랜드 특유의 전통복장인 ‘킬트’(Kilt) 의상<sup>2)</sup>을 두르고 백파이프와 드럼 소리에 맞추어 연병장을 행진하는 모습이 전 세계의 텔레비전 방송망으로 중계되기도 했다. 1725년에 처음 창설된 이 부대는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 고지대(High Land) 출신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졌다. 블랙워치는 창설 이래 200여 년간 나폴레옹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등에서 용맹을 떨쳤다. 이들이 홍콩 반환 기념식에서 특별 행진을 맡았던 것도 영 육군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부대였기 때문이다. 42 보병연대의 애국적인 활동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갈등의 분위기를 넘어서 18,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사회 분위기가 잉글랜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보다는 오히려 영 제국의 국민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자긍심으로 충만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1997년 9월 11일에 실시된 스코틀랜드 주민투표는 분리주

---

2) 격자무늬(tartan)가 있는 남성용 스커트. 스코틀랜드의 전통의상이다. 이런 복장 때문에 1차 대전 당시 이 부대는 독일군으로부터 ‘지옥에서 온 숙녀’라는 별명을 얻었다. 다양한 격자무늬는 각기 스코틀랜드 유력 집안이나 씨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 운동에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한 것처럼 보인다. 투표는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와 창설과 독자적인 재정권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주민의 75%가 이에 찬성했다. 사실 스코틀랜드 의회는 1707년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합병된 이후 사라졌다. 2000년에 새롭게 구성될 의회는 외교·국방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문제에 대한 자치권과 징세 및 재정권을 갖는다. 물론 영국 노동당 정부가 주민투표를 서둘러 강행한 것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분리주의 운동을 오히려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정책이 장기적으로 분리주의 운동을 약화시킬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위의 두 가지 에피소드는 오늘날 대브리튼에 대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귀속의식 또는 국민 정체성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1707년 통합 이후 200여 년간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와의 전통적인 갈등이 있었음에도 대브리튼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분위기는 분명히 약해졌으며 스코틀랜드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의식을 새롭게 형성해가고 있다. 국민 정체성의 형성과 위기, 브리튼의 통합과 분리라고 하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 2.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갈등의 역사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지리적 경계는 어쩌면 역사적·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원 후 1세기에 로마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켈트인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성을 쌓았는데, 이것이 그 후 두 지역의 경계로 굳어졌다. 스코틀랜드는 원래 칼레도니아라고 불렸으며<sup>3)</sup>, 일찍부터 세 부류의 종족들이 섞여 살았다. 그 기원이 확실하지 않은 픽트인(Picts), 아일랜드에서 이주한 스

코트인(Scotts), 그리고 앵글로-색슨인에게 쫓겨 남부에서 이동한 브리튼인(Britons)이 그들이다. 오랜 세월이 걸쳐 이들의 인종적 구분은 희미해졌으며, 그들의 언어도 점차로 스코트어(語)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박지향, 1997: 27~29).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자주 충돌한 것은 특히 11세기 이후의 일이다. 잉글랜드가 7왕국 시대를 거쳐 통합왕국으로 발전하던 9세기에 스코틀랜드도 스코트인과 픽트인을 통합한 왕국으로 발전했으며, 당시 케네스 1세는 왕국의 수도를 스콘으로 옮겼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른바 ‘스콘의 돌’(The Stone of Scone)은 케네스 1세가 수도를 옮기면서 즉위식에 사용했던 돌이라고 전해진다. 이 돌은 후에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가 탈취하여 최근까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관되어 있었다.<sup>4)</sup>

중세 초기에 잉글랜드와는 독자적인 왕실 전통을 유지하던 스코틀랜드는 점차로 잉글랜드의 직접적인 간섭과 위협 아래 놓였다. 우선 11세기 후반에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정복왕 윌리엄의 군대에 패배를 맛보았다. 그 이후 두 나라 사이에 독립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1296년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를 직접 통치하기 위하여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수 십 년간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2세, 에드워드 3세의 침입에 대항하여 싸웠다.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전쟁은 승리와 패배가 교차할 만큼 치열한 것이었다(마틴, 1993: 37~48).

사실 민족 정체성은 특히 타자(他者)에 대한 인식에서 먼저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민족주의는 14세기 전반 잉글

3) 스코틀랜드라는 명칭은 스코트인의 정착지라는 뜻을 가진 스코티아(scotia)에서 비롯한다.

4) 이 돌은 리아 페일(Lia-fail)이라고 불린다. 전설에 따르면,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 천사와 싸움을 하던 날 밤에 베고 누웠던 돌이다. 이 돌은 이집트를 거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중세에 스코틀랜드 역대 왕들의 즉위식에 이용하였다(마틴, 1993: 4~6).



랜드의 침입에 대한 치열한 저항에서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승리와 패배의 무용담은 여러 전설과 영웅 설화를 낳으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웠다. 이 시기의 영웅 설화는 대부분 윌리엄 윌리스(William Wallace)와 로버트 브루스(Robert Bruce)에 관련된 것들이다.

윌리스는 에드워드 1세의 침입에 맞서 잉글랜드 군에 끈질기게 대항하였으며, 마지막 전투에서 사로잡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윌리스는 사랑하는 아내가 잉글랜드 병사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자, 분연히 일어나 에드워드 1세의 군대와 싸웠다. 그는 뛰어난 전술과 용력으로 잉글랜드군을 괴롭혔다. 윌리스는 마지막 전투에서 포로로 사로잡혔으며 런던으로 압송되어 처형당했다. 침입자의 전제와 압제에 대항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윌리스의 삶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전설과 무용담으로 되살아났다. 중세 잉글랜드에서 지배층의 압정에 맞서서 민중을 위해 투쟁한 영웅의 전형으로 로빈 훗의 발라드와 설화가 형성되었듯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윌리스에 관한 민요와 설화가 민중의 기억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몇 년 전에 멜 깁슨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영화 「브레이브 하트」는 영웅 윌리스의 생애와 사랑을 다룬 역사물이다.

윌리스가 처형당한 후에 스코틀랜드의 지도자로 떠오른 사람은 브루스였다. 그는 왕실 출신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유력 가문의 후예였지만, 윌리스의 죽음 이후 침체에 빠진 스코틀랜드 군대를 결속하여 잉글랜드 에드워드 2세의 군대에 저항하였다. 1314년의 이른바 백너번(Bannockburn) 전투는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널리 알려진 전쟁이다. 이 전투에서 브루스는 2만 명 이상의 잉글랜드 군을 격파하고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 1328년 마침내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브루스는 로버트 1세로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올랐다(마틴, 1993: 48~49).

15세기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군사적 충돌은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두 나라의 관계는 개선되지 못했다. 스코틀랜드의 국왕들은 잉글랜드와 경쟁하는 프랑스 왕실과 가깝게 지냈다. 잉글랜드 왕실에 대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적대감은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에 뒤이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제임스 스튜어트)가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하면서 점차 완화되었다. 그 후 100여년간 영국 내란기를 제외하고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스튜어트 왕가 출신을 공동의 국왕으로 옹립하면서도 서로 독자적인 두 나라로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은 기묘한 관계는 1707년 두 나라가 통합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통합된 뒤에도 영국 왕실에 대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1714년 스튜어트 왕통이 끊어지고 그에 따라 하노버 가(家)에서 영국 왕위를 계승하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상당수는 스튜어트 왕실을 복원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1715년과 1745년 두 차례에 걸쳐 스튜어트 왕실 복원운동(이 운동의 가담세력을 Jacobbites라 부른다)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특히 1745년 재커바이트들은 스튜어트 가문의 왕위 계승 후보자인 찰스 에드워드를 통합왕국의 국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컬로든(Culloden)에서 잉글랜드 군과 싸웠지만, 처참하게 패배하였다. 그 후 잉글랜드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저항운동은 더이상 힘을 얻지 못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두 나라의 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잉글랜드와의 일련의 투쟁 속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타자(잉글랜드)와 다른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그들은 잉글랜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종족적 기원을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찾았다. 그러나 모든 브리튼인이 트로이의 장군 부르투스 후손이라는 잉글랜드의 설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 스코티아의 후예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잉글랜드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느낀 저지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잉글랜드라는 타자를 더 의식하였다.<sup>5)</sup>

### 3. 정치에서 문화로-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의 대응

17세기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공동의 왕위를 가졌지만, 국왕은 주로 런던에 머물렀으며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중심 권위의 실종이라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 시기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새롭게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이었다. 종교개혁기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순수한 칼뱅주의를 받아들여 잉글랜드 교회와 다른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선도한 인물은 존 녹스(John Knox), 조지 뷰캐넌(George Buchanan),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 등이다.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이른바 커크(the Kirk)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교회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잉글랜드로부터의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로 받아들였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영향은 단순히 신앙문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존 녹스 이래 교회는 스코틀랜드의 실질적인 상징이 되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교회 자체의 개혁에서 더 나아가 젊은이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통하여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적 갱신과 함께 새로운 지식과 도덕을 고양하기를 소망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녹스, 뷰캐넌, 멜빌 등으로 굳건하게 이어져 내려왔다. 녹스는 주교제도를 장로체제로 바꾸었고 스코틀랜드 대학교육을 혁신하였다. 멜빌 또한 글래스고우 대학과 에든버러의 세인트 메리 칼리지의 학장을 역임하면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학문을 열망하는 젊은이들이 스코틀랜드 국내에서 또는 유럽 대륙에서 지식을 쌓는 데 전념하였다. 18세기에 에든버러나 글래스고우의 대학의 명성은 전 유럽에까지 널리 퍼졌으며, 대륙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곳에서 교육

5) 19세기에도 저지대 아이들은 금을 그어놓고 상대편의 모자와 옷을 빼앗는 놀이를 할 때 잉글랜드 대 스코틀랜드로 편을 갈라 놀았다(박지향, 1997: 29).

받기를 원했다.

18, 19세기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은 영국이 전통적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우리는 이 시기에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을 찾을 수 있다. 역사가 윌리엄 로버트슨(William Robertson), 사회과학자 애덤 퍼거슨(Adam Ferguson),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 문학분야의 월터 스코트(Walter Stott), 로버트 번즈(Robert Burns), 조지 톰슨(George Thompson), 공학 분야의 토머스 텔퍼드(Thomas Telford) 등은 그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Harvie, 1994: 86~87). 여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18세기 후반 이래 19세기에 걸쳐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시기 영국 문화의 주류를 이루면서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 일반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영국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의 활동은 흔히 ‘스코틀랜드 계몽운동’(Scottish Enlightenment)으로 불린다. 이 말은 물론 19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이 지적 흐름은 에든버러에 런던, 파리, 비엔나에 못지 않은 학문적 명성을 안겨 주었다. 동시대의 지적 분위기에 밝았던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계의 어느 곳도 에든버러와 경쟁할 수 없다.”(Harvie, 1994: 87)

이 계몽운동은 합병 이후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새로운 대응방식을 반영한다. 이제 스코틀랜드는 더 이상 잉글랜드와 정치적인 면에서 대결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당대의 지식인들 사이에 타자로서의 잉글랜드의 이미지가 순화된 것만은 아니었다. 정치적으로 브리튼에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잉글랜드와 다른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이중적인 성향이 계몽운동에 깃들여 있다. 1767년 이후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에든버러 시민들은 신도심지에 수도 런던의 쾌적한 분위기를 되살려냈지만 그러면서도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런던의 대안으로서 독자

적인 성격을 나타내려고 했다.

에든버러 식자층의 주류는 전문 직업인이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직업을 지녔으면서도 남부로 진출할 만한 재력을 갖추지 못한 소지주, 변호사, 상인, 문필가, 제조업자, 교사, 목사들이었다. 18세기 후반이래 이들 지식인들의 담론세계와 문화는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계몽운동은 한편으로는 전산업적 요소가 깃들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쇠락한 잉글랜드를 대신해서 브리튼의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는 강한 자의식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당대 에든버러 지식인들의 토론모임이나 이들의 저널과 출판활동 등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1764년 첫모임을 가진 에든버러 사색협회(Speculative Society)는 지식인들의 자발적인 담론공동체였다. 이 모임의 고정회원으로는 월터 스코트, 프랜시스 제프리(Francis Jeffrey), 헨리 토머스 콕번(Henry Thomas Cockburn) 등이 있었다. 그들은 수요일 저녁 에든버러 대학 구내에서 만나 술을 곁들이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런 담론의 장에서 그들은 좁게는 스코틀랜드의 전통과 문화를, 그리고 넓게는 브리튼의 문화와 정신에 관해서 토론을 벌였으며 그것이 지적·문화적 활력을 제공했다. 예컨대 자유주의의 산파역을 자임했던 『에든버러 리뷰(Edinburgh Review)』지의 편집인들·비평가 프랜시스 제프리, 문필가 시드니 스미스(Sydney Smith), 헨리 브루엄(Henry Brougam), 법률가 콕번, 경제학자 제임스 밀(James Mill) 등도 사색협회를 출입하던 사람들이었다.

『에든버러 리뷰』가 19세기 영국의 식자층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편집인들은 제각기 뛰어난 비평과 문필활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의 지적·문화적 정신을 고양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면서도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갖가지 사회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를테면 헨리 브루엄은 런던대학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노동자층을 대상으로 지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기술강습소’ 운동도 펼쳤다. 글래스고우, 런던, 리버풀 등지의 기

술강습소 설립은 브루엄의 활동에 크게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었다(이영석, 1999: 308~9). 기술강습소 운동의 내면적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는 ‘자조’(self-help)는 사실 빅토리아 시대 사회 일반의 슬로건이기도 했는데, 당대의 베스트셀러 『자조론(Self-Help)』을 쓴 새뮤얼 스마일즈가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따지고 보면 우연한 일이 아니다(이영석, 1999: 292).

역설적으로 18, 19세기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의 문화적 성취는 타자로서의 잉글랜드를 의식한 결과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대브리튼의 문화 창달자임을 자부하는 이중적인 의식구조를 보여준다. 이 이중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그들은 현실 정치에서 잉글랜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스코틀랜드의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초극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현실정치를 넘어 좀더 추상적인 것, 전통과 학문과 문예 속에서 그들의 자의식을 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런 노력이 대브리튼의 새로운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였다. 정치적 열등감은 어찌면 문화적 우월의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터였다. 에든버러의 지식인들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The Encyclopedia Britannica)』의 편찬과 개정에 열정을 기울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백과사전의 편찬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몽운동과 문화중심주의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인들은 궁극적으로 대브리튼 국민이라는 귀속의식 또는 대브리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19세기 스코틀랜드 지식인의 의식이 ‘잉글랜드적인 것’(Englishness)을 넘어서 ‘브리튼적인 것’(Britishness)에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잉글랜드 사람들의 의식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외관만을 단순히 비교하면, 두 지역의 통합 이후 국민적 정체성이란 사실 잉글랜드로의 흡수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1800년 당시 잉글랜드의 인구는 850만 명,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150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정치력, 경제력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잉글랜드인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멸시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861년 한 부인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에 대해서 험잡꾼, “졸렬하고 저속하고 음침한 금욕주의자”, 맹목적인 애국주의자로 바라보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음을 꼬집었다(Robbins, 1988: 10~11). 그러나 다른 한편, 잉글랜드인과 스코틀랜드인의 기질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커다란 전체(즉 브리튼적인 것) 속에 나타나는 다양성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데이비드 흄에 따르면, 영국의 특징은 단일성이 아니라 점차로 복합적인 문화로 확산하는 경향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었다(Robbins, 1988: 11).

빅토리아 시대에 잉글랜드인들이 이전의 편견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데에는 스코틀랜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18세기 후반에 화가들은 브리튼의 아름다움, 특히 스코틀랜드 자연과 풍경에 매료되었고 그것을 화폭에 옮기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당대의 유명한 화가 조지프 터너(Joseph Turner)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자연경관을 다룬 뛰어난 풍경화를 남겼는데, 그의 그림은 브리튼 섬의 풍광에 대한 잉글랜드인의 이해를 높여주었다. 에드윈 랜드시어(Edwin H. Landseer)는 장기간 스코틀랜드에 체류하면서 <하이랜드 골짜기>를 비롯한 스코틀랜드 풍경화를 그렸다. 그가 소재로 다룬 하이랜드의 산과 바위와 골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인상으로 다가왔다(Robbins, 1988: 12~13).

18세기 말에는 브리튼의 풍경을 직접 보고 관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나폴레옹 전쟁기에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한 자산가며 중간계급 출신 지식인들은 그 대신에 브리튼의 여러 지역을 탐사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하이랜드의 산악지대며 웨일즈의 이국적

인 풍경들에 깊이 빠져들었다. 여름이면 스케치북을 들고 스코틀랜드 고지대나 북웨일즈로 떠나는 여행객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Robbins, 1988: 19). 1830년대이래 식자층 사이에 지도가 널리 보급되었고, 출판업자들은 그들의 지도가 “나라의 실제 상태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스스로 나라의 곳곳을 답사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은 19세기 중엽의 영국인에게 더이상 낯선 일이 아니었다(Smith, 1985). 더욱이 19세기 중엽에 철도가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의 풍경을 그림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철도의 시대에 이르러 잉글랜드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스코틀랜드의 풍물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sup>6)</sup>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스코틀랜드 자연에 대한 잉글랜드인의 열광은 브리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인들은 잉글랜드 중심주의나 스코틀랜드적 자의식을 나타내곤 했지만, 그럼에도 그 한계를 넘어서 브리튼적인 것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것은 물론 당시 영국이 광대한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으로 팽창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8세기이래 스코틀랜드 지식인의 문화중심주의가 브리튼의 정체성에 기여한 정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 4. 대브리튼과 국민 정체성

오늘날 역사학에서는 민족을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로 이해한다. 그것은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이야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미체계라

6) 1846년 토머스 쿡(Thomas Cooke)은 철도를 이용한 관광여행을 처음 시도하였다. 관광의 잠재성을 처음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1859년에는 브리스톨에서 출발하는 특별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였다. 이 당시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기차 여행은 11시간대였고, 1880년대에는 7~8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는 것이다(Kramer, 1997: 536). 국민의식 또는 국민적 정체성은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영국사에서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브리튼적인 것’(Britishness)은 대체로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에 분명하게 형성된 것처럼 보인다(Robbins, 1988: 6). 이러한 정체성이 통합에서 비롯했다면, 그것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에 각기 독자적인 민족의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들 민족의식을 넘어서 통합된 전체로서의 국민의식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을까?

사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브리튼의 정체성을 거론하는 역사가들은 드물었다. 잉글랜드 중심주의의 영향을 받은 보수적인 역사가들은 ‘영국적인 것’이 바로 ‘브리튼적인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의 국민 정체성은 역사가들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가 역사적으로 통합된 이래 과연 대브리튼 국민의식이 형성되었는지, 정말 그렇다면 언제 형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성찰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영국에서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의 구분을 넘어선 대브리튼 국민의식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자리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프랑스와의 전쟁을 생각할 수 있다. 린다 콜리(Linda Colley)는 프랑스라는 타자와의 끊임없는 전쟁이 영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Colley, 1991). 17세기 말 이래 영국과 프랑스는 9년 전쟁,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쟁,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 7년전쟁, 미국 독립전쟁, 나폴레옹 전쟁 등 여러 전쟁에서 싸웠으며, 그 대부분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물론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두 나라의 싸움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중심부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비롯되었으나, 그것은 정치적인 것 못지 않게 종교적인 것이기도 했다. 가톨릭 프랑스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영국의 항전은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싸움이였다. 전쟁의 종교적 성격은 18세기 전반의 전쟁에 비해 후반에 이르러 점차 약해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코틀랜드인이 이들 전쟁에 적극 참여한 데에는 종교적 성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콜리에 따르면, 영국인의 정체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 및 경제의 자유에 대한 관념이다. ‘자유롭게 태어난 영국인’이라는 관념은 물론 17세기 내란기에 나타났으나,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렇다면 프랑스와의 전쟁이 어떻게 자유의 관념과 연결된 것일까? 영국인들이 가톨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종교적 관용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티즘이야말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누리는 자유의 원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유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잉글랜드 교회나 스코틀랜드 교회는 마찬가지로였다.

다음으로, 앞 절에서 지적한 대로 스코틀랜드의 문화중심주의가 오히려 국민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의 문화중심주의는 처음에는 정치적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겠지만, 그들의 성취가 영국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주류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좀더 다른 의미를 띠게 되었다. 문화중심주의는 스코틀랜드의 독자적 자의식을 고양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브리튼의 정체성과 곧바로 연결되게 마련이었다. 오늘날 에든버러 시내 곳곳에는 월터 스코트의 좌상을 비롯하여 문화적으로 뛰어난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조상(彫像)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물론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문화적 긍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근대 영국 문화를 대변하는 인물들이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자부심 속에는 이미 브리튼의 정체성이 깊숙이 녹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 제국 또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제국의 광대한 식민지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인 셈이었다. 제국은 교양 있는 스코틀랜드인에게 법조계·군대·식민지 관료 등의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스코틀랜드인들이 제국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

적인 대학 교육으로 제국 경영에 필요한 젊은이를 많이 배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잉글랜드 젊은이들의 처지와는 달리 국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전망이 밝지 않았다. 해외 진출이야말로 이들의 상승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였다. 고지대의 용감한 젊은이들은 육군과 해군에 입대하여 군 경력을 쌓는 데 열심이었고, 저지대의 교육받은 사람들은 식민지 또는 동인도회사의 관리로 대거 진출하였다. 실제로 해외 식민지와 관련된 일자리에 진출한 사람들 가운데 스코틀랜드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예컨대 1775년 벵골에 파견된 관리 249명중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은 47%였다. 또 나폴레옹 전쟁 당시 지원병의 20%가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스코틀랜드 인구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다(박지향, 1997).

19세기 영국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왕실의 전통이다. 사실 새로운 의식과 정체성은 그에 걸맞은 상징을 필요로 하는 법이다. 전통이 때로는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전통이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복고적인 문화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시대 사람들의 이해와 열망에 따라 나타난 것이며 역사적 과거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의례와 상징을 포함한다. 전통은 과거보다 현재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Hobbawm and Ranger, 1983: 2~3).

역사적으로 보면 왕실은 영국인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 스튜어트, 하노버 왕조의 국왕들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풍자의 대상이 되거나 농담의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영국인들의 전통적인 자유의 관념 때문에 국왕의 인위적인 권위는 곧바로 전제(專制)를 연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대륙의 다른 나라와 같은 왕실의 거대한 조형물이나 호화로운 왕실의식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19세기 후반에 변모한다. 왕실의 이미지가 달라졌고 왕실의식도 궁중 앞에서 재현되기 시작하였다. 왕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존경심은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여황제를 겸하면서 높아졌으며, 특히 보수당의

디즈레일리 정부는 여왕의 이미지를 적극 이용하였다. 1887년 빅토리아 여왕 즉위 50주년 기념행사는 왕실에 대한 국민의 열광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왕실에 대한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변했다. 특히 발모랄 성(Balmoral Castle)을 왕실의 사저로 이용하여 빅토리아 여왕의 스코틀랜드 여행이 잦아졌고, 이것이 스코틀랜드인들의 열광을 자아냈다. 원래 이 성은 여왕의 남편 앨버트 공이 구입하여 개축한 것으로, 남편이 죽은 후에 여왕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 성을 찾았다. 여왕의 여행은 스코틀랜드와 왕실의 거리를 그만큼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 매체의 등장과 함께 여왕의 여행을 많은 사람들이 전해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캐너딘(D. Cannadine)에 따르면, 오늘날 영국 왕실의 전통과 의례는 대부분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것이다.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황제에 즉위한 1877년 전후에 오래된 의식들을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각색하고 새로운 의례를 창출하였다.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영국 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감정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영국인의 개인주의 기질과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를 더 조장하였다. 왕실 의식의 확산은 국왕의 정치적 권한의 축소와 반비례하여 이루어졌다. 영 제국의 쇠퇴기에 왕실 전통이 오히려 발전한 것은 역설적이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기술혁신과 왕실의식의 조화가 세련되게 이루어졌다. 오늘날 영국 왕실은 ‘혼돈의 시대의 안정을 위한 결정점’으로 작용한다. 1930년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국왕의 방송담화는 ‘아버지’ 상으로서의 군주의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대규모 국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라디오를 통하여 생방송되었고, 특별한 마이크를 통하여 청취자가 벨, 말소리, 마차소리, 환호를 들을 수 있었다. 왕실의 가장행렬이 국민적이고 가족적인 행사임을 상징하는 데 성공한 것은 이러한 기술발전 덕택이다(Cannadine, 1983: 101~64).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9세기 영국의 국민 정체성은 너무나 뚜렷

한 것이었다.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어느 지역에서나 대브리튼 국민이라는 의식은 확고하였다. 이런 분위기 아래서 자기 지역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명맥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운동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였다. 적어도 19세기에 관한 한, 스코틀랜드에서 분리주의 운동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 세기에 다시 드러난 것처럼 정치적 통합과 브리튼의 귀속의식이 강력했음에도 스코틀랜드 독자적인 정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집단적 분위기의 이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 5. 영국의 현주소-분열과 정체성의 위기

1950년대에 일단의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관되어 있던 ‘스콘의 돌’을 훔쳐낸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들은 몇 달 후에 밝혀졌고, ‘스콘의 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은 스코틀랜드 분리주의 운동을 사람들의 머리 속에 다시금 각인시켜 주었다.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후,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이 돌은 다시 스코틀랜드로 정식 반환되었다. 이 돌의 운명이야말로 대브리튼의 국민 정체성이 약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유력한 상징이라 할 것이다. 그 명맥조차도 끊어진 듯이 보였던 분리주의 운동이 불과 한 세대 사이에 많은 호응을 얻은 까닭은 무엇인가. 과연 영국은 사실상의 해체단계에 들어선 것인가.

1960년대에 독일의 칼 도이취(Karl Deutsch)는 잉글랜드인, 스코틀랜드인, 웨일즈인이 각기 그들 나름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몇 세기에 걸쳐 정치적으로 통합되었음에도 그들의 의식구조에는 서로 다른 정체성이 병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별개의 지역들 사이의 정치적 연합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견해

를 밝혔다(Robbins, 1988: 3). 사실 분리주의 운동이 단기간에 되살아났다는 것은 오랜 정치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단기간에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세력을 얻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좀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19세기 영 제국의 번영기와 오늘날의 영국을 비교하면 부분적인 설명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분리주의 운동이 제국의 해체, 영국 경제의 쇠퇴, 유럽 통합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왜 제국의 해체가 분리주의 운동의 성장과 관련되는가. 2차 대전 이후 식민지 해방운동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영국의 해외 식민지도 대부분 독립국가로 바뀌었다. 사실 식민지 문제로 곤란에 빠졌던 프랑스와 비교할 때 영국은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작 적응했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은 능동적으로 식민지를 독립시킴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그만큼 국력의 소모도 적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국의 해체는 그 경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앴다. 군대 축소 또한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제국 경영에 적극 뛰어든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줄어든 것을 뜻하였다.

다음으로 2차 대전 이후 경제 쇠퇴 문제를 살펴보자. 1950~7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장기호황을 누렸던 시기이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시기에 영국 경제는 완전고용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다. 그러나 그 성장은 다른 경쟁국들에 뒤쳐진 것이었다. 영국인들은 번영의 시기에 이전보다 높아진 생활수준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 나라의 경제력이 인접한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장기호황의 분위기에 취해 있었다.

영국 경제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은 1970년대 석유위기 때였

다. 1973년이래 영국 경제는 장기불황에 빠졌으며, 특히 1978년 이후 10여 년간 영국인들은 제조업의 위축에 따른 실업 증가, 인플레이션, 생활수준 하락 등의 고통을 겪었다. 제조업의 위축은 전통적인 수출산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에서 심각했는데, 잉글랜드 북부,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1984~88년 사이에 영국의 전체 산업분야의 고용규모는 2.9% 증가한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고용규모가 11.9%나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었다. 1996년 통계에서도 스코틀랜드의 실업률은 잉글랜드 북부와 함께 전국 평균을 훨씬 넘었다. 분리주의 운동은 이와 같이 경제적 박탈감이 높은 곳에서 더 거세게 타오르기 마련이다.

유럽 통합의 움직임 또한 분리주의 운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다.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유럽 통합운동은 더 한층 활력을 얻었다. 그 동안 영국은 유럽 통합에 거리를 두었고 그에 따라 통합운동은 항상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였다. 영국이 유럽 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는 흔히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 즉 독일과 프랑스의 헤게모니에 반대하는 영국이 통합 속도의 재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소극적인 태도에는 국제정치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그것이 국내 분리주의 운동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데서 오는 요인도 있다.

역사가들은 영국의 지리적 환경에서 섬나라라는 특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륙과 떨어진 섬나라라는 조건이 일찍부터 영국이 대양 너머로 눈길을 돌리는 데 이바지하였다. 오랫동안 영국인들은 대륙의 문제에 초연한 태도를 지녀왔고 그 대신에 해외 식민지와 그들의 식민 국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제국의 해체와 더불어 영국은 이제 유럽 대륙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에 영국의 고뇌가 있다. 대륙이라는 타지를 설정하고 해외 제국을 경영하는 상황 아래서 영국은 지역적 다양성을 넘어 브리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 연합의 일원이

되는 순간 이러한 상황은 중요성을 상실한다. 그럴 경우 스코틀랜드와 웨일즈가 잉글랜드와 함께 대브리튼을 형성해야 하며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사라진다. 유럽 연합의 테두리 안에서 잉글랜드나 웨일즈나 다같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단위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영국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유럽 연합 가입에 주저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 통합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독일이나 프랑스를 경쟁국으로 바라보던 대중의 정서도 점차로 바뀌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가입을 반대하는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흥미롭다. 잉글랜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고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현상은 브리튼의 정체성의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지역간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기존의 보수당 정부에 비해서 유럽 연합에 전향적인 정책을 공언한 바 있는 노동당 정부는 집권 초기와는 달리 유럽통합 정책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 단일화폐인 유로화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보기이다. 이것은 유럽통합 문제가 영국의 정체성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통합에 대처하는 일이야말로 현재 영국의 정치인들이 당면한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오랜 분열과 통합을 되풀이해온 영국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대응책을 강구할 수 없다. 특히 19세기 브리튼적 정체성의 형성과 오늘날 그 약화라고 하는 대조적인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유럽연합은 '대브리튼'이라는 관념에 상당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원심력에 대해서 영국인들은 어떠한 상징과 이미지 속에서 구심력을 찾을 것인가. 그 대답은 아직도 미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9세기 이래 영국은 국민 정체성의 형성과 약



화라고 하는 서로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는 데에도 약간은 도움을 준다. 물론 민족적 동질성이 없이 18세기에 국민 통합을 이룩한 영국의 사례와 아직도 민족적 동질성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남북한의 경우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그렇더라도 지난 50여 년간 남북한 사회는 이질적인 정치 및 경제체제 아래서 각기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비록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는 하지만,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라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감안하면, 그 정서 또한 일정한 한계를 지녔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50여 년간 형성된 서로 다른 정체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단시일에 통일을 이루는 꿈을 꾸기에 앞서서, 남북한에 형성된 정체성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다루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넘어서 새로운 통합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 ■ 참고문헌 ■

- 김대륜(1999), 「18세기 영국에서 국민, 민족주의, 제국」, 『영국연구』, 3호, 185~206면.
- 마틴, 로디(1993), 『왕실 스코틀랜드 영국사』, 김현수 옮김, 대한고과서.
- 모건, 케네스 편(1997), 『옥스퍼드 영국사』, 영국사학회 옮김, 한울.
- 박지향(1997),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까치.
- 이영석(1999), 「자조-19세기 영국 중간계급의 가치와 노동귀족」, 이영석 『다시 돌아본 자본의 시대』, 까치.
- 조승래(1997), 「18세기 애국주의 담론과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 『영국연구』, 1호, 1~25면.

- Cannadine, D.(1984), "The Context, Performance and Meaning of Ritual: The British Monarchy and the Invention of Tradition," in E. Hobsbawm and T.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01~164.
- Christopher, Harvie(1994), *Scotland and Nationalism: Scottish Society and Politics 1707-1994*, London: Routledge, 2nd ed.
- Colley, Linda(1990), *Britons: Forging the Nation 1707-183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ramer, Lloyd(1997), "Historical Narrative and the Meaning of Nationalism," *Journal of History of Ideas*, Vol. 58, No. 3.
- Hall, Stuart and Gay, Paul, eds.(1996),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 Harvie, Christopher(1994), *Scotland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 Hobsbawm, E. and Terrence Ranger, eds.(1984),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kenzie, W.J.M.(1978), *Political Identit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Rajchman, John, ed.(1995), *The Identity in Question*, New York: Routledge.
- Robbins, Keith(1988), "The Identity of Britain," in idem, *Nineteenth Century Britain: Intergration and Diver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8.
- Smith, D.(1985), *Victorian Maps of the British Isles*, London: Macmillan.

#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운동론적 접근과 비교연구

정철희

## 1. 서론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학·정치학·국제관계론 등 여러 분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사회학의 영역 내에서 사회운동론적 시각으로 접근해 본다. 이 글에서는 한국현대사에서 광주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총체적 물음 대신 광주항쟁을 발생시킨 주요한 사회적 변인에 대해 추적하려 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운동론의 시각들을 검토하면서 이 연구에 적합한 분석틀을 탐색해 본다. 그리고 나서 국내외의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진단한다.

광주항쟁에 관해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항들은 i) 왜 다른 곳 아닌 광주에서 일어났을까, ii) 왜 실패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을까, iii) 한국의 민주화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한 것일까 하는 점 등일 것이다. 특전사 장병을 시위진압에 투입함으로써 발생한 긴장 혹은 구조적 유인(Smelser, 1962)은 전국의 어느 주요도시나 팽배해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떠한 기회의 조건이 더 갖추어져 광주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사실 광주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과도한 진압에 따른 폭력시위는

---

정철희 전북대 교수(사회학). 최근 논문으로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민주주의의 공고화」(1999), 「한국 대중정치와 사회적 조건」(1999) 등이 있음.

전국의 주요 도시 모두에서 그 불씨를 안고 있었다(정상용 외, 1990). 문제는 이러한 부가적 조건을 우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볼 것인가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운동론을 검토하면서 광주항쟁발발의 사회적 요인들을 찾아보려 한다. 그리고 국내외의 유사한 경우와 광주를 비교하여 왜 광주항쟁이 민주화로 연결되지 못했는가를 검토한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이 글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광주항쟁의 자리매김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렇지만 광주항쟁이 민주화 운동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를 검토해 본다.

본론에 앞서 우선 용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광주 사태, 광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이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시위와 진압과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왔는데, 이 중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공식적인 용어로서 쓰이고 있다. 그런데 학술적인 의미에서 볼 때 위의 용어들 모두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각각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우리가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를 때는 과잉진압에 의한 대규모의 자발적 집합행동이라는 측면보다는 학생운동조직 등을 포함한 보다 지속적이고 조직에 기반을 둔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보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사회운동은 조직을 근간으로 하고 특정한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벌여가는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주항쟁이라고 부를 때는 집합행동이라는 면을 부각시킬 경우 적합한 용어로 생각된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자발적인 면이 강했고 처음부터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과도한 시위진압에 대한 대응이라는 면이 있었으므로 항쟁 혹은 라이오트(riot)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광주사태라는 용어도 적합하게 사용될 경우가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혹은 항쟁이 저항하는 세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사실 광주사태라고 하면 집합적 항쟁과 아울러 계엄군의 개입과정 및 두 세력간의 갈등 등을 폭넓게 지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사회운동론과 광주민주화운동

이 절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개발된 사회운동론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적용되는지 그 적합성에 대해서 탐색해 본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i) 거시적 조건에 관한 연구와 ii) 미시적 이론, 그리고 iii) 집합의식의 형성과 관계되는 역사적 기억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거시적 접근은 다시 거시 정치적 조건과 거시 조직적 조건으로 나누어진다 (McAdam et al, 1988; Shin, 1994).

### 1) 거시적 접근

#### 가. 거시 정치적 조건

거시 정치적 조건의 하나로 체제의 위기를 들 수 있다. 체제가 위기에 처하거나 일반화된 정치적 불안정시기에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연구들이 있다. 쇼터와 킬리(1974)는 프랑스에서 국가 권력의 쟁취를 위해 경쟁하는 시기에 파업 활동도 절정을 이룬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쇼츠(1976)도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의 정국의 불안이 남부의 민중운동의 활성화의 정치 구조적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광주항쟁도 이와 같이 어느 세력도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 과도기적 정국의 불안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거시 정치적 조건에는 정치적 기회구조 같은 변인들이 있는데 광주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나. 거시 조직적 조건

거시 조직적 조건에는 생태학적 집중, 기존 사회조직의 수준, 교차 결속성(Cross-cutting solidarities) 등의 조건이 있다. 이 세 가지 중 광주항쟁과 가장 관련성이 많은 조건은 기존 사회조직의 수준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광주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집합행동이 활발하게 있어왔고 따라서 역사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조직밀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여성운동, 민권운동을 연구한 결과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광주에서도 교회 조직, 대학교 등의 기존조직이 동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표 1>1980년 광주의 교육기관 현황

	학교 수	학생 수
중학교	26	48,863
고등학교	38	73,414
전문대학	9	(37,000)
단과대학 및 대학교	5	
전체인구	(730,000)	

자료: 정상용외(1990). ( )안은 추정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는 지역 교육의 중심지로서 교육인구에 대한 구심력이 큰 도시이다.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의 수가 52개에 이르고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수도 전체도시 인구의 7분의 1이 넘는 11만 여명에 이르고 있어 조직적 밀도가 높아 동원의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밀도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동원된 저항집단들의 교차 결속성의 수준에 대한 연구도 의미 있리라 여겨진다. 즉, 한 집단이 사회로부터 고립될수록 결속성이 높아지므로 집합행동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고립될수록 조직에 대한 성원들의 충성심이 높아지며 정치적·경제적 보복에 의한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생태학적 집중은 동질적인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밀집함(예: 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노동자들의 집중)으로써 집합행동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의 적합성은 보다 많은 자료를 검토한 후에 판단될 문제로 보인다.

## 2) 미시이론

위에서 사회운동의 거시적 조건들을 검토했다. 사회운동에 대한 거시적 접근은 주로 구조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므로 구체적 운동과정의

분석에는 미시이론이 필요하다. 미시이론에는 개인주의적 이론과 미시 구조적 이론이 있다.

#### 가. 개인주의적 이론

개인주의적 이론에는 심리적 설명과 급작스럽게 부과된 공분을 변인으로 보는 설명체계 등이 있다. i) 심리적 설명은 집합행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으로 집합행동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그것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 스트레스를 받은 심적 상태, 소외감에 의해 집합행동의 발생을 설명한다. 광주의 경우 이러한 심리적 환원론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반증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심리적 설명은 개인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이성적 저항이라는 면을 부인하고 있어 광주항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i) 한편, 급작스럽게 부과된 공분(grievances)은 인재, 중요한 법원결정, 정부의 폭력과 같은 극적이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때 대규모의 집합행동이 발생한다. 그 예로서 미국의 1960년대의 켄트(Kent) 주립대학 총격사건, 드리마일 아일랜드 핵발전소 사고, 그리고 1992년의 로스앤젤레스의 경찰채판 같은 사건들의 뒤에 발생하는 큰 시위사건을 들 수 있다. 광주항쟁도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는 면에서 볼 때 급작스럽게 부과된 공분이라는 면에서의 접근이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 나. 미시구조적 설명

미시구조적 설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i) 우선, 운동 참여자와의 사전 접촉여부도 집합행동 참여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 스노우(1976)는 미국의 소승불교 운동의 참여자의 82%가 다른 참여자와 사전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ii) 그리고 운동조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할 개연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조직적으로 활발한 사람이 결국 조직활동이 효과성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iii) 또한 이전에 운동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조사가 있다. 광주의 경우에도 항쟁의 참여에 위와 같은 미시구조적 변인

이 작용했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McAdam, McCarthy and Zald, 1998, 1996).

### 3) 역사적 기억

광주지역의 근대사를 돌이켜 볼 때 역사적인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한 사회집단 혹은 지역에서 저항적 집합의식이 형성되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집합행동이 활발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연구들이 있다(Shin 1994). 월튼(1992: 326)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웬 밸리 지역의 연구를 통해 이전의 투쟁의 경험이 전설과 역사적 기억으로 남아 그 자체로서 “참여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19세기말부터 동학농민 전쟁을 비롯한 여러 농민운동 및 1929년의 광주학생의거 등의 풍부한 집합행동의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광주에서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사실은 단지 우연이라기보다 역사적 기억에 의한 불의에 저항하는 집합의식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점에 착안한 연구가 가치 있을 것이다(Wells, 1995).

지금까지 검토한 거시적·미시적 요인들 중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 급작스럽게 부과된 공분, 구조적인 면에서 조직밀도와 사회적 연결망의 동원, 집합의식이라는 면에서 역사적 기억에 관한 연구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연구하는 데 특히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sup>1)</sup> 결국 이러한

---

1) 이러한 연구 이외에도 스멜서(1962)의 가치부가모델이 집합행동으로서의 광주항쟁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리라 여겨진다. 스멜서가 집합행동을 아노미에 의한 심리적 갈등의 분출로 보는 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가 제시한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스멜서의 모델은 집합행동이 구조적 요인, 구조적 긴장, 일반화된 신념, 촉진요인, 동원의 발생 등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광주에서도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인다. 특전사 등 계엄군의 광주주둔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있었으며, 민주화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와 군사정권출현 예상과의 괴리라는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의 조합이 일종의 일반화된 신념으로 발전하였으며 무차별적 과잉진압이라는 촉진요인에 의해 학생과 시민이 시내 요소에 모이는 것과 같은 대규모의 동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인들이 ‘왜 광주에서’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비교연구

이제까지 광주항쟁자체에 대한 적합한 분석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절에서는 국내외의 여타 사건들과 비교하여 광주항쟁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밝혀 본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연구는 ‘왜 광주에서’, ‘왜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 국내비교-6월항쟁과의 비교

광주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1980년도의 전반적인 사회운동의 상황과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서 또 다른 기념비적인 사건인 6월항쟁과를 비교하는 것도 광주항쟁 자체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사건을 비교하는데 있어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는 왜 1980년의 저항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1987년의 항쟁은 정치체도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길을 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은 정철희(1995, 1996)의 연구를 참고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항쟁의 결정적 차이는 1980년에 미약했던 운동조직의 밀도와 전국적 연결망의 부재로 인해 저항을 민주화로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비해 7년 뒤에는 여러 운동단체의 증가와 전국 규모의 운동조직간의 연결망의 형성과 운동의 목표에 대한 합의로 인해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80년의 경험을 거치면서 공개적·비공개적 운동집단이 형성되었으며 민청련, 민통련,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연합단체에 의해 재야, 학생, 종교계의 운동집단들이 연대를 달성하여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1987; 박우섭 1987; 조대엽 1999).

## 2) 국제적 비교

### 가. 천안문 사태

광주항쟁과 천안문 사태 모두 권위주의 체제의 해체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며, 대학생들의 시위가 발단이 되었다는 점, 무력진압에 의한 대량의 사상자를 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많으므로 비교연구가 의미 있을 것이다. 천안문 사태에 관해서는 칼훈(Calhoun, 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칼훈의 분석을 보면 문화적 전통과 억압적 상황까지 유사한 두 항쟁의 비교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칼훈은 유동적이고 무정형한 조직이 북경의 학생운동을 모양 지우고 힘을 가지게 했다고 분석한다. 광주의 경우도 공식성을 갖춘 잘 조직된 조직이 아닌 느슨한 학생조직이 운동의 기반이었다는 면에서 두 항쟁은 유사한 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된다. 한편 칼훈은 운동이 이러한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 무질서, 사소한 권력의 남용까지 발생한 것을 천안문 사태의 실패 요인으로 꼽고 있다. 광주의 경우도 항쟁의 규모가 급속히 확장되었지만 이를 담당하는 지도부와 하위 연결망간의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행동통일의 여러 가지 장애와 명확한 항쟁의 목표와 초점 잡힌 이슈를 제기하지 못한 점이 하나의 실패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면에서 중국과의 비교는 광주항쟁을 진단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Calhoun 1995). 결국 북경과 광주의 항쟁은 운동조직의 성숙과 그 연대의 성립에 의한 대규모의 동원의 창출로 운동의 효과성을 극대화한 한국의 1987년 6월과 같은 상황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6월항쟁과 천안문 사태의 비교를 통해 앞에서 제기되었던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대답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본다.

### 나. 파리 코뮌

파리 코뮌과 광주 두 사건 다 하나의 도시에서 발생한 무력 투쟁이었으며 많은 희생을 치르고 무력으로 진압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Could 1993, 1995).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파리 코뮌에 대한 선행연구가 광주를 연구하는데 기초적인 길잡이가 된다는 면에서 긴요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파리 코뮌 연구는 이 사건에 프롤레타리아가 주축이 된 전형적인 사회주의 운동인 것으로 보거나 수공업 조합이 동원의 조직적 기반인 것으로 주장해 왔다. 최근의 연구는 도시반란(insurrection)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시반란의 경우는 수공업 조합이 동원되는 산업투쟁과는 달리 이웃 연결망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광주의 경우에도 큰 시사성이 있을 것이다. 광주에서 급속도로 시위의 규모가 커졌던 이유는 개인적이 아닌 일종의 블록충원(block recruitment)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며 그러한 집단적 충원의 근간이 이웃 연결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폭동이 난 뒤, 진상규명 조사단이 구성되어 집합행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밀한 기록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들의 검토도 광주를 연구하는 데 큰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믿는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광주항쟁 발발의 주요한 사회적 요인에 관해 사회운동적 시각에 입각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지나치게 분석적이어서 뜨거웠던 1980년 5월을 조망하는 연구로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의 전체적 흐름에서 광주항쟁이 가지는 의미를 묻는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적 시각 분석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운동론의 시각에서 광주의 의미를 전혀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국가와 이에 굴하지 않고 활발히 저항하는

사회와의 갈등은 한국현대사의 한 주요 국면이다(Koo, 1993).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가 민주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마다 저항해 왔고 결국 6월항쟁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의 시민사회가 자율적인 집합행동을 통해 민주적 규범의 침해에 도전하고 국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다(Cohen and Arato, 1992 참고). 광주항쟁은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가 국가의 월권을 제어해 가는 능력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의의를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일반적 주장으로서 앞에서 제기되었던 마지막 질문에 대신하러 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운동론의 시각에서만 광주를 조망해 보았지만, 앞으로 여러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광주항쟁 전후의 군부와 권력 엘리트들의 동향, 당시의 국제관계가 광주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척된다면 광주항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운동으로서의 광주항쟁의 배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1987), 『6월 민주화 대투쟁』, 민중사.  
 박우섭(1987), <민주변혁과 연합전선에의 모색>, 박현채 외, 『전환』, 사계절. 315-38면.  
 정상용 외(1990), 『광주민중항쟁』. 돌베개.  
 정철희(1995), <한국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기원>, 『한국사회학』 29집, 501-32면.  
 -----(1996), <중위동원과 6월항쟁>, 『한국사회학』 30집, 63-85면.  
 조대엽(1999), 『한국의 시민운동』, 나남.  
 Calhoun, Craig(1995), *Neither Gods Nor Empero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hen and Arato(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IT Press.
- Gould, Roger(1993), "Trade Cohesion, Class Unity, and Urban Insurr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8, pp. 721~54.
- (1995), *Insurgent Identities : Class, Community, and Protest in Paris from 1848 to the Commun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o, Hagen(1993), "Strong State and Contentious Society,"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edited by Hagen Koo.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cAdam, Doug, John McCarthy, and Mayer Zald(1988), "Social Movements," *Handbook of Sociology*, edited by Neil Smelser. Beverly Hills: Sage.
- McAdam, Doug, John McCarthy, and Mayer Zald, eds. (1996),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wartz, Michael. (1976), *Radical Protest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Academic Press.
- Shin, Gi-Wook. (1994), "The Historical Making of Collective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1596~1624.
- Shorter, Edward and Charles Tilly. (1974), *Strikes in France, 1830~1968*,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elser, Neil. (1962),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New York: Free Press.
- Snow, David. (1976), *The Nichiren Soshu Buddhist Movement in America*,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 Walton, John. (1992), *Western Times and Water Wa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lls, Kenneth, eds. (1995), *South Korea's Minjung Movement*,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한국적 ‘가족 로망스’와 영화 「거짓말」

- 한국 사회의 무의식을 역사화 하는 신문화사를 기다리며

김기봉

### 1. ‘가족 로망스’는 프랑스 혁명에서만 있었는가?

최근 신문화사자들은 고전적 해석과 수정주의적 해석 사이의 대립을 넘어서 프랑스 혁명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조명하는 작품들을 썼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그 비판자들은 무엇보다도 역사를 조각 내어 여러 방식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통사가 쓰여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린 헌트의 『프랑스의 가족 로망스』를 읽으면서 이러한 비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헌트, 1999). 헌트는 프로이드의 ‘가족 로망스’ 개념을 이용해서 사회적 무의식의 차원에 내재해 있었던 두꺼운 의미의 층위들을 드러냄으로써, 프랑스 혁명 전후시기 역사의 핵심주제인 권력, 권위, 정통성 그리고 성별간의 갈등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분석을 이끌어 냈다. 그녀는 신문화사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소설, 신문, 포르노그래피, 회화 등의 비정통적인 사료들을 동원하여 정통적인 역사의 주제들을 정교하게 해명하였다. 이 책에서 역사학, 심리학 그리고 정치학과 문학 사이의 장르의 구별은 흐

---

김기봉 성균관대 강사(서양사). 최근 논문으로 「단단한 근대와 부드러운 근대」(2000), 저서로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2000)가 있음.

려져 있다. 하지만 그 각각의 장르는 프랑스 혁명 전개과정의 이면에서 무의식적인 구조를 형성하여 혁명의 역사를 실제로 이끌었던 요인들의 분석을 위해서 결집되어 있다.

헌트의 이 책 덕택에 우리는 왜 프랑스인들이 절대주의 시대까지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던 국왕을 처형했으며, 그 이후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이드의 개념인 ‘가족 로망스’의 원래 의미는 “이제 자신이 낮게 평가하는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대체로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부모로 대체하고자 하는” 신경증이다. 헌트는 이러한 심리학적 개념을 신문화사적으로 응용하여 “혁명기 정치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족적 질서에 대한 집단적이고 무의식적인 상”을 지칭하는 의미로 전화시켰다. 그녀에 의하면, 당시의 프랑스인들이 가부장적인 권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정체를 만들려는 정치적 상상력을 가졌기 때문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와네트를 희생물로 삼아 공화국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나쁜 부모로서의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와네트 대신에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화국을 꿈꾸었다. 그러나 공포정치의 와중에서 공화국은 결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아버지를 갈구하였다. 아버지를 죽였던 형제들이 그들의 ‘가족 로망스’를 채워줄 새로운 카리스마를 공화국에서 요청하는 모순은 결국 혁명의 정통성을 위협하였다. 혁명 전에는 신성했던 국왕의 신체 자체가 카리스마였지만, 그 국왕을 죽이고 그 몸을 상징적으로 나누어 먹었던 형제들은 공화국을 건설함으로써 카리스마를 분산시켰다. 분산된 카리스마는 오직 사회계약을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었는데,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그러한 사회계약을 약화시킴으로써 혁명의 공화국을 피로 물들게 했다.

프랑스 혁명사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권위를 독점했던 사람들은 형제들 곧 남성들이었다. 여성은 정치권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를



위해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나쁜 어머니로 희생양이 되었다. 헌트가 캐롤 페이트먼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했듯이, “남성으로서의 인간(men), 형제로서의 인간에 여성이 복종하게 된 것이 근대 시민사회의 결정적인 특징”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남성 지배의 역사는 헌트에 따르면 필연적 과정이었던 것은 아니며 이제는 과거시제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인 한에서 최소한 앞으로 교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후 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났다. 이 같은 ‘가족 로망스’는 이른바 ‘프랑스적 예외주의’(french exceptionalism)의 소산인가, 곧 혁명을 통해 아버지인 왕을 단두대에서 처형한 프랑스에서만 특수하게 일어난 현상인가? 아니면 헌트가 에펠로그에서 암시했듯이 막스 베버가 근대 합리화 과정의 역설로 문제삼았던 지금 우리 사회도 경험하는 이른바 근대사회 일반의 병리적 현상인가? 필자는 후자의 입장에서 이 책이 우리 사회 무의식의 역사화를 위해서 어떤 시사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부드러운’ 근대화와 영화 「거짓말」의 출현

헌트의 저작 『가족 로망스』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사회사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역사학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비정통적인’ 사료를 치밀하게 읽음으로써 열었다는 점이다. 헌트의 『가족 로망스』는 역사서술 장르상 분명 역사의 거대담론을 부정하는 신문화사에 속한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에는 로버트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처럼 근대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감수성과 같은 사회적 무의식의 변화를 일정하게 방향 지우는 하나의 거대담론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무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근대화 과정을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단단한’(hard) 근대화와 대비해서 ‘부드러운’(soft) 근대화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헌트는 ‘가족 로망스’라

는 개념을 빌어 프랑스의 ‘부드러운’ 근대화 과정을 해명하고자 했다. 헌트에 따르면, 18세기 프랑스인들이 가졌던 ‘가족 로망스’가 가부장적 아버지의 권위를 해체시켰고, 그 후 전개되는 가족 정치학의 구조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가족 정치학을 가장 적나라하게 구현했던 것이 사드 후작의 『규방의 철학』이다. 포르노그래피의 전성기는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한 시기이다. 포르노그래피의 발명은 무엇보다도 반체제 운동의 차원에서 생겨났다(헌트, 1996: 373~429).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함께 정치비판으로서의 포르노그래피는 전성기를 맞이했고, 또한 역설적으로 혁명의 진행과정 속에서 포르노그래피는 탈정치화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포르노와 정치는 상관관계를 가진다. 독재정권은 이른바 3S 정책의 일환으로 Sex 문화와 산업을 조장했다. 하지만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른바 ‘xxx 시리즈’는 대중이 일상적 차원에서 전개했던 하나의 반체제 운동이었다. 그런데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사회 전반에서 어느 정도의 민주화가 일어남에 따라 포르노의 탈정치화는 일어났다. 1990년대 초반 마광수의 파격적인 소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서갑숙 파동은 성 해방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사회의 포르노화를 부추기는 성담론을 난무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세기말에 이르러 영화 「거짓말」이라는 유령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이 유령을 몰아내려고 우리 사회의 엄숙주의자들과 도덕군자들은 단결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우리 사회를 미치게 하는 이 유령을 몰아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것도 우리 사회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비판하는 하나의 표현물로 용인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 글에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단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영화 「거짓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방식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거짓말」이 그리는 변태적 성행위의 사회적 파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것을 보는 방식이다. 왜 우리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은 윤리 도덕이라는 한 가지 코드

로 이 영화를 평가함으로써 상영 금지를 주장하는가? 하나의 텍스트를 여러 방식으로 읽을 수 있듯이 우리는 영화 「거짓말」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는 영화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의미의 층위를 분석해 별만한 안목과 관용이 없는 것일까? 물론 상영 금지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 우리 사회의 무의식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한 과잉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자기는 은밀하게 하면서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이 현실의 사회에서 보여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닐까?

인간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을 단서로 삼아 숨긴 진실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인간은 거짓말을 거의 언제나 의식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 의식은 영화 「거짓말」을 비난한다. 그런데 사회의 무의식은 어떠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빨간 마후라」라는 비디오의 주인공이었던 10대 소녀가 자기를 비난하는 어른들에게 했던 위선적 행동을 폭로하는 말은 우리 사회 어른의 의식과 무의식의 괴리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발언이었다. 이같은 사회병리에 직면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위험한 무의식을 의식적인 거짓말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괴리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일이다. 종래의 역사학이 사상사나 지성사처럼 의식의 역사만을 추구했다면, 오늘의 역사학은 무의식의 역사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이와 같은 약간 정도에서 벗어나는 글쓰기를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헌트가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에서 했듯이, ‘가족 로망스’의 개념을 빌어서 우리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의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으로서 영화 「거짓말」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 3. 한국식 ‘가족 로망스’와 성해방

프랑스 혁명주의자들처럼 우리는 아버지 왕을 단두대에서 처형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도 ‘가족 로망스’는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른바 386세대는 그들이 대학생이었던 시절 운동을 통해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온 몸을 내던졌던 세대이다. 그들은 바로 공지영이 『고등어』에서 썼듯이 책꽂이 전체를 한 가지 이데올로기를 내용으로 하는 책들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다.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그들은 기성세대의 권위적 아버지를 타파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들은 기성 세대의 진리를 부정하고 그들의 허위의식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주의자들처럼 아버지를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새로운 정체를 세우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상징적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당시 유행했던 블랙 유머는 이러한 한국식 ‘가족 로망스’를 잘 보여 준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다. 아버지가 먼저 열탕에 들어가,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정말 뜨겁지 않고 시원해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럼 시원하지. 애야, 너도 들어와 보렴”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믿고 아들이 탕 속으로 들어갔다. 첫 발을 들여놓은 순간 그는 너무 뜨거워서 “앗! 뜨거워” 하고 뛰어 나왔다. 그리고 말했다. “씨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나 이렇게 가부장적 질서를 파괴하고 그들의 이념에 따라 새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가졌던 386세대들은 1989-90년 이래 소련과 동유럽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좌절하였다. 1990년대 이르러 그들 가운데의 상당수는 거창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고 역사적 패배주의자가 되었다. 그들은 한 때 투쟁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연인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오직 프랑스 혁명주의자들이 형제애를 강조했듯이 동지애를 이상적인 인간관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동지애를 통해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한다는 역사의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젊음을 불태웠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이 처절한 실패로 끝난 후 그들의 대다수는 허무주의에 빠졌다.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경멸했던 가치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박한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가정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가정에는 이제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아버지는 더이상 없었다. 또한 그들 자신도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군림하는 아버지가 아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자식들을 상전처럼 떠받들어야 할 신세가 되었다.

사회의 차원에서도 이런 일은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이른바 'X세대'라는 또 다른 신세대의 등장과 함께 386세대는 어느새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투쟁 대신에 문화적 갈등이 날로 심각해졌다. 아버지 세대에 대항해서 세상을 바꾸는 혁명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1980년대 죽었던 그들 아버지의 입장이 되었다. 이 때 어느 TV 방송국 드라마가 불붙였듯이 '애인' 신드롬이 일어났다. 그들은 강한 아버지이기를 거부하고, 아니 더 정확하게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성과의 연애를 통해 공허한 가슴을 채우고자 했다. 프랑스 혁명에서 아버지를 죽인 자들은 아버지 없는 콩가루 집안을 형제애를 통해 통합하고자 했다면, 가정 내에서의 자기 역할보다는 사회적 출세를 우선시 했던 한국의 아저씨들과 그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아줌마들은 밖에서의 연애를 통해 '가족 로망스'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혁명 후 형제애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계약을 통해 공화국을 건설함으로써 여성을 정치와 사회에서 배제시켰던 것이 프랑스식의 '가족 로망스'이다. 이에 비해 1990년 후반의 한국인들은 이른바 하나의 '연애 공

화국'을 추구했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 로망스'는 페미니즘을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IMF 위기와 함께 이러한 '연애 공화국'도 파산을 맞이하였다. 직장에서 쫓겨난 실직 가정이 설자리는 가정에서조차 없었다.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1996년에 출간된 『아버지』라는 소설은 출판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될 수 있었다. 아버지를 죽였던 세대가 IMF 위기를 맞이해서 직장,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버림받는 존재로 전락했던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그들은 다시 아버지라는 부재하는 중심을 동경하는 한국판 '가족 로망스'의 비극이 나타났다.<sup>1)</sup>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서 사회 병리적 현상은 극에 달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고아가 되어버린 세대 가운데에서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막가파', '지존파'와 같은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대체적인 가족을 이루었다. 또한 청소년들조차 이것을 본 받아서 '일지매'와 같은 불량 씨클을 조직하여 그 집단적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한 대체적인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형성했다. 그들은 사회전복을 꿈꾸지는 않지만 끔찍한 범죄행위와 일탈적 행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항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을 연대로 해서 그들은 하나의 가부장적 질서를 만들어 냈다.

프랑스의 '가족 로망스'는 혁명을 일으켰고 공화국을 건설했지만, 혁명의 좌절을 통해서 역사의 나침반을 상실하고 오직 살아 남기 위해서 대체적 아버지와 가족을 동경했던 한국의 '가족 로망스'는 사회를 병들게 했다. 함께 나아갈 지향점이란 더이상 없고 극단적으로 속물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허무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막가파식'이라는 멘탈리티가 나오고 '내 배 찌라'라는 담론이 유행하였다.

---

1) 필자가 보기에, 영화 「E. T.」에도 이혼을 통해 가족이 점점 해체되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미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가족 로망스'가 있다. 그 영화 주인공 가족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어머니이고, 그래서 그들 모두는 현실에 없는 아버지를 매우 그리워한다. 이런 상황에서 「E. T.」가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운다.

정신적 허무처럼 큰 공간은 없다. 그것은 결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허무와 쾌락은 동전의 양면으로 나타났다. 이 시대의 허무주의자는 영웅적인 니체주의자가 아니라 속물적인 향락주의자가 된다. 속물적인 향락주의자는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허무의 밑 빠진 독을 쾌락으로 채우고자 한다.

헌트는 사드의 소설을 혁명이 분출시켰던 감정과 욕망의 정치학의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인 형제의 무리가 이제는 아버지 없는 사회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부터 해방되어 어떻게 성적 상상력의 한계를 극단에까지 발현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샤르티에의 주장처럼 전통의 굴레로부터 인간 의식을 해방시키는 계몽사상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윤리 도덕에 의해 억압당했던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부모와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로 형성되며, 이러한 가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법률은 근친상간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를 살해했던 형제들은 아버지의 법률을 무너뜨림으로써 근친상간의 타부를 깼다. 아버지의 법률이 억압했던 그들의 성적 상상력이 해방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동성간의 성관계는 성별의 경계를 소멸시킨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법률을 근간으로 해서 유지되었던 가족은 더 이상 사회의 최소단위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가족의 해체는 곧 사회의 위기를 초래한다. 가족의 해체 이후 사회적인 것의 최소 단위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관계없이 갖는 성 관계를 근간으로 해서만이 성립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 단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자연적인 성(sex)은 아니며 오직 권력이 성별(gender)을 구분한다. 따라서 이것을 통찰했던 사드가 소설을 통해서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성적 계약이 사회계약의 기초이며 성적 계약은 권력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프랑스 혁명에서 자코뱅주의는 의식의 차원에서 사회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면, 사드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성 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의식과 무의식의 혁명의 구조는 서구에서 1968년에 되풀이해서 일어났다. 1968년 5월 혁명의 슬로건 중의 하나가 “나는 혁명을 생각할 때면 섹스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였다. 이른바 ‘68 혁명’은 프랑스 혁명의 뒤를 이어 사회혁명과 성 혁명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혁명이었다. 사회혁명으로서의 ‘68 혁명’의 이상은 결국 1989-90년에서의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완전히 깨졌다. 계급적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혁명의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을 때, 사드식의 성관계에 의거한 혁명만이 희망으로 남았다. 따라서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혁명을 꿈꾸는 최고의 급진주의자들은 동성애주의자가 되어 “우리는 씹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피켓을 들고 그들 나름의 혁명운동을 감행한다.

이러한 성 혁명은 우리 나름의 ‘가족 로망스’를 경험한 우리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거대담론의 종말을 경험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이 시대의 한국인들은 허무를 쾌락으로 채우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이전의 사회적 해방구 대신에 윤리적 해방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마광수는 성이야말로 쾌락과 윤리 이전에 행복을 추구하는 인권에 해당한다고 선언하였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서갑숙은 대책없이 성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여성과 더 나아가 대중의 억압된 성욕 자체의 해방을 주장했다. 성을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마지막 통과의례를 졸업할 수 있다고 역설했던 이들과 같은 프리섹스주의자들은 성 욕망의 충족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포르노그래피의 일상화를 부추겼다. 그리고 결국 우리 사회는 영화 「거짓말」을 공공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마침내 한국 사회에서 ‘부드러운’ 근대성이 그 자신의 속살을 공론의 장에 완전히 드러내는 순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와 함께 성 해방론자는 드디어 혁명에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엄숙주



의자들로부터 반격을 당할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는가? 또한 우리는 지금 성 해방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를 억압하는 마지막 압제의 보루를 무너뜨리는 혁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는 첨단무기를 가진 세기말의 자본주의와 함께 범람하는 성문화와 성담론을 통해 인간의 마지막 신비스러운 영역까지 오염되고 있는 것인가? 필자에게는 이 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 필자는 단지 이 문제에 대한 성급한 결론 대신에, 영화 「거짓말」을 둘러싼 논쟁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타부 없이 논의됨으로써 근대화 과정 속에서 변화해온 우리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의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만을 바란다.

#### 4. 영화 「거짓말」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무의식

이 시대의 도덕주의자들의 평가대로 영화 「거짓말」은 쓰레기일 수 있다.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쓰레기장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어쩌면 쓰레기더미 속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 자체가 불온해서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나왔는지를 지금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앞으로 백년쯤 후의 우리 후손 가운데 어느 역사가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하는 세기말의 우리 역사를 쓰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료 가운데 하나가 아마 영화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세기말적 현상을 연구하는 후대의 역사가에게 중요한 것은 영화 「거짓말」이 포르노인가 아니면 예술인가의 판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영화가 우리 사회 현실을 그리는 방식이다. 영화 「거짓말」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밝은 현실이 아니라 어두운 집단적 무의식의 세계이다. 영화 「거짓말」이 사회윤리의 측면에서 일으킬 수 있

는 과장이 지금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조망하는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표면 위에서 일고 있는 파란에 불과하다. 어디까지나 문제는 물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 심층구조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20세기 말 한국 사회의 집단무의식의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후대의 역사가에게 「거짓말」이라는 영화 자체는 물론 그에 대한 논쟁도 우리의 사회적 이드와 초자아의 대립 방식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료가 될 수 있다. 사실 영화 「거짓말」은 성묘사의 측면에서 보면 린 헛트가 사료로 분석한 사드의 소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소프트하다.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작을 만들었던 장선우 감독을 일각에서는 '90년대 한국 사회의 성감대'를 대변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거짓말」은 20세기말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의 표상을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냐 혹은 부정적인 것이냐의 가치판단과 관계없이 잘 표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과 비정상 곧 이성과 광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중적 판단기준이다. 최근 영화의 가장 흔한 소재는 성과 폭력이다. 그런데 둘 중 어떤 것이 더 문제인가? 모든 폭력의 끝은 죽음이다. 인간에게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인간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폭력은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든다. 따라서 폭력이 외설보다도 청소년에게 더 유해하다. 그런데 왜 누구의 눈으로 보면 방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변태적일 수 있는 성행위를 묘사한 영화는 상영금지 시키면서, 동물적 공격본능을 가감 없이 보여주거나 더 나아가 그 정도를 넘어서 모든 표현기법을 동원해서 극악무도하게 폭력과 살인을 그리는 영화는 극장가에서의 상연을 허용하는가? 사회의식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중잣대를 효과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무의식의 차원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폭력의 고통은 대체적으로 육체적이지만, 성적 쾌락은 잠재된 무

의식을 발현시킴으로써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정신적이다. 전자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하드(hard)한 것이지만, 후자는 판타지로 그려지는 소프트(soft)한 것이다. 전자는 보통 집단적으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후자는 대체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본능보다도 성적본능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더 수치심을 느낀다. 뉴스 시간에 폭력의 장면은 보여지지만, 몰래 카메라로 찍힌 성관계의 장면들은 사람들이 더 보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해 그 사회가 위선적이면 위선적일수록 성감대를 숨기고 억압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것들을 은폐하고 억압하려는 권력의 메커니즘은 더욱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메커니즘이 사회의 무의식까지를 통제할 수는 없다. 사회의 식의 억압적 힘이 크면 클수록 위선의 두께는 두꺼워지고 사회적 무의식은 병들어간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무의식의 병리적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의 권력이 금했던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찌기 금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프랑스 혁명 전 앙시앵 레짐의 정치 문화를 해명하는 작업을 했던 한 연구자의 말대로, 한 시대를 책을 매개로 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역사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주로 읽었던 책들보다는 읽지 못한 책들 곧 금서를 연구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드러내 줄 수 있다(주명철, 1990). 그 시대의 지배권력이 금했던 지식은 알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과 알면 안 되는 지식의 경계선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규정했던 이성 뿐 아니라 광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20세기말의 우리 사회를 연구하고자 하는 후대의 역사가에게 「거짓말」은 매우 좋은 사료가 될 것이며, 특히 공공의 영화관에서 상영된 것보다도 자체검열로 자른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무의식, 표현의 자유와 부자유의 경계를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금지된 단면을 통해서 양쪽 면을 파악하고자 하는 역사가가

치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영화 그 자체가 아니다. 그에게 「거짓말」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그에게 그 사건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생시켰던 구조와 대중이 그러한 사건을 전유하는(appropriate) 방식이다. 다시 말해 대중의 '표상'(representation)이 신문화사자들의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그런데 대중의 이러한 표상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적인 엘리트 집단의 의식과 판단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대중과 다름없이 공유하는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과 감수성이다. 따라서 「거짓말」이 포르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관객이다. 외설적 장면들만을 주시해서 보는 관객에게는 이 영화는 분명 포르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를 포르노로 규정해서 상영 금지시키는 일은 다른 식으로 보는 관객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선부른 판단인지 모르지만, 이 영화를 포르노로 보는 관객에게는 일차적으로 감정교육이 필요하다. 포르노인가 아닌가를 신체의 특정부위를 보여주느냐 혹은 적나라한 성행위의 장면을 묘사했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정의 방식이다.

문제는 보이는 기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야 하는 기의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객이 여러 방식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감독은 철저하게 이 영화를 비정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사와 장면을 절제했다. 하지만 어느 신문 기자의 논평대로 영화 「거짓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바로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되었다. 따라서 「거짓말」이라는 영화는 우리의 집단적 무의식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표이며, 그 기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거짓말」이라는 하나의 영화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거짓말」이라는 영화의 제목은 중층적인 의미의 층위를 가진다. 필자가 보기에, 이 제목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의 층위가 있다. 첫째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우리 현실을 지칭하는 제목이다. 둘째는 그런 현실을 표현하는 방식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셋째로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 영화는 지적한다.

첫째로, 영화 「거짓말」은 아무리 감독이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고자 했더라도 우리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던 국회 청문회에서 난무했던 것은 거짓말이었다. 따라서 관객은 현실정치와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다. 국회 청문회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었다. 청문회에서 연출되었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배층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다. 그 배우들은 그 곳에서 비극적 코메디를 연출했다. 그 곳에 불려나온 사람들 각자는 그들의 주장을 보증해 줄 최고의 존재자의 이름을 동원해서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말을 하였다. 결국 이 시대 자체가 청문회장의 담론이 잘 보여 주었듯이 거짓말로 얼룩진 사회라면, 감독 자신이 어느 일간지와와의 대담에서 밝혔듯이 「거짓말」이라는 영화의 형식을 빌어 그는 이렇게 절망적인 사회에 대해 절규하고자 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절망적인 사회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주인공은 일하지 않고 사는 세상을 유토피야로 말한다. 인간의 노동은 더 이상 존엄하지도 인간적이지도 않다. 그 이유는 우리가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회의 생존경쟁 방식이 두 주인공과 같은 사회적 이탈자를 만들어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회의 역사에서 인간들 사이의 경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폐어 플레이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강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자로 승인되는 것이 이 사회의 규칙이다. 따라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승리의 결과는 모든 거짓의 과정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런 사회에서 거짓말은 바로 사회적 담론의 문법을 이룬다.

둘째로, 거짓말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가 이 시대 인간들을 병들게

했다면, 이런 사회의 실상을 드러내고 문제삼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는 코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시대 리얼리스트의 운명이다. 따라서 자기 시대와는 다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역사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거짓말이라는 코드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대의 집단적 무의식과 같은 비공식적인 문화를 연구하는 후대의 신문화사가는 영화 「거짓말」을 하나의 사료로 읽을 때, 그 영화가 그리는 사회의 현실 뿐 아니라 그 현실을 관찰하고 재현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내야 한다. 단턴이 말했듯이, “모든 문장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 우리에게는 생소한 정신을 표현” 하며, 그래서 “그 정신에 침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술된 대상보다는 서술의 방식에 집중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단턴, 1996: 157).

감독은 성이라는 타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을 전도된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감독은 영화에서 가부장과 남성의 권위에 대한 가치의 전도를 보여주는 성행위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밝은 현실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어두운 무의식의 영역을 충격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처음의 성관계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매질하지만 나중에 점점 그것이 역전된다. 그런데 이러한 역전을 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적 ‘가족 로맨스’이다. 영화에서 여자인 와이에게 매를 맞는 남자 제이는 “고향집에 온 것 같다”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제이의 플래시백으로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흑백의 과거회상이 잠깐 보여진다. 과거 자신을 매질했던 그런 아버지는 현재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그는 한편에서는 과거 자신을 때렸던 그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와이에게 매를 맞으면서 지금은 무기력하게 고향집을 지키고 있을 그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점이다. 가부장적 권위의 화신인 아버지는 현재에는 부재하다. 그럼에도 가부장적 문화는 현재의 우리 무의식 속에 여전히 잠재해 있어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은밀하게 발현하는 것이 한국적 ‘가족 로맨스’의 한 형

태이다. 이러한 '고향 집'으로 상징되는 한국인 특유의 '가족 로망스'를 외국인이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짓말」의 해외판에 서는 이 장면이 삭제되었다고 한다.<sup>2)</sup> 이에 반해 제이를 때리는 와이가 “엄마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하는 장면은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맞는 제이는 아버지를 연상하는 데 비해, 때리는 와이는 엄마의 정서를 느낀다. 결국 이들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현실에는 없는 가족에 대한 로망스를 그들 나름대로 향유했다.

영화에서 감독은 우리 사회의 금기와 허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관용의 범위를 넓힐 목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실험적 장면들을 연출했다. 우리 사회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표현기법을 사용해서는 우리의 변태적 현실을 드러내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감독은 「거짓말」을 통해서 현실을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했다. 루카치는 자본주의에 사는 소설가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뇌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뒤집기 수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감독은 자기를 흙탕물 속으로 던져서 사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회 스스로가 자기 반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자 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변태적 성행위를 통해서 관객이 지루함을 느끼고 더 이상 호기심과 쾌락을 충족시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면, 관객은 영화에 몰입하지 못하고 불쾌감까지 느끼게 된다.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지루하게 반복하는 장면의 연속은 관객들에게 관음증의 쾌락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거짓의 세계이며 그 행위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각성함으로써 마침내 그로부터 낫설어지는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 관객은 배우에게 감정이입할 수 없고,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브레히트가 말하는 '소격효과'(Verfremdungseffekt)가 나타난다. 결국 이 때에

2) 이 같이 영화도 문화에 따라 번역되고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문화가 인식체계(episteme)의 토대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또 한번 오늘의 역사학은 '문화적 전환'이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르러 관객은 비판의 능력을 갖고, 그 영화가 설정하는 스토리 구성을 해체해서 스스로가 영화라는 기표의 기의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관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화를 하나의 감정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앞으로의 만화는 만드는 자와 소비하는 자의 구분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producer’라는 말과 ‘consumer’라는 말의 합성어로 ‘prosumer’라는 새로운 조어가 생겨났다. 디지털화 되는 미래에서 영화에서도 제작자와 관객의 구분은 점점 사라져서 관객은 스스로가 영화를 만들면서 보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관객의 감정을 교육시키는 일이다. 반복적인 변태적 성행위가 쾌락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시대의 허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존재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관객이 깨닫는 순간 그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계몽’의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요컨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영역과 관계하는 ‘부드러운’ 근대화를 위한 계몽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칸트의 정의대로 “그 자신이 책임이 있는 (감정의)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계몽의 감정교육이 정보의 침투를 막는 담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정보화 사회에서 심각하게 요청된다.

셋째로,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역설적이게도 거짓말이 생존전략이 된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말한다. 학교와 사회에서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요 불가결하다. 그럼에도 이 사회의 어른들은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순수와 정직을 강요한다. 청소년들은 살면서 순수가 위선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며,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에 대한 열정은 냉소로 바뀐다. 인생 자체가 변태이고 부조리인 환경에서 그들은 허무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에서 제이를 망가뜨렸던 것은 사회이다. 사회적 패배자인 그에게 가정조차도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그 앞에 어느 날 여



고생 와이는 운명처럼 나타났다. 와이는 그에게 무의미한 삶의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구원의 여인이었다. 영화에서 와이는 백만인 서명운동에 대해 “백만인은 싫어”라고 말한다. 그녀는 백만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나라를 꿈꾼다. 백만인 가운데 하나라는 숫자로 환원되는 것이 싫어서 백만인 서명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와이는 그래서 제이에게 그와 성관계를 맺었던 다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백만인으로 존재하는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여인인 것이다. 제이와 와이는 섹스를 하기 위해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과리의 마지막 탕고」에 나오는 남녀처럼 사회와 격리된 그 둘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갈구하였다. 그들의 세계는 유사한 부류의 어느 일본영화의 제목처럼 ‘감각의 제국’이었다. 그 둘은 이른바 변태적인 성행위를 매개로 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 이전의 원초적인 관계를 되찾아 옴으로써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이러한 존재의 몸부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보여 준다. 성행위마저도 권태롭고 허망할 뿐이다.

## 5. 거짓말과 진실의 피비우스 띠

「거짓말」은 섹스라는 코드를 통해 병든 우리 사회의 무의식을 드러내 줄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규범과 가치, 그리고 심지어 사랑까지도 허무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화두는 이 존재의 허무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가 인간을 망가뜨렸다고 보는 감독은 역설적이게도 그 사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으로 거짓말을 상정한다. 쾌락마저도 슬픔으로 결말나는 실존적 상황에서 거짓말은 그에게 공격적인 허무이다. 곧 그는 이 시대의 허무와 싸우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제안한다. 따라서 감독은 우리에게 허무로부터 도피하는 ‘소극적’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시지푸스와 같은 ‘적극적’ 허무주의자가 될 것을 권한다. ‘적극적’ 허무주의자는 거짓말을 전략으

로 해서 현실을 전도시킴으로써 그로부터의 초월을 꿈꾼다. 이런 ‘적극적’ 허무주의자에게 거짓말과 진실은 마치 뫼비우스 띠에서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사기꾼이 사기 친다는 것을 까발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기가 필요하듯이 거짓말로 감추고 있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이 요청되는 현실에서, 거짓말과 진실은 하나의 뫼비우스 띠를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거짓말로 이루어진 체제에서 사회적 약자가 도태 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잘 해야 하며, 또한 그가 반체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이라는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거짓말은 로버트 단턴이 「마더 구스 이야기」를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두터운 의미의 층위를 드러내 주었던 듯이, 사회적 약자가 적으로 둘러싸인 냉혹하고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생존하고 또 큰 적들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하는 ‘작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것은 단턴이 연구했던 전근대의 프랑스 뿐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유효하다(단턴, 1996: 96). 이러한 거짓말의 생존전략은 “더 많이 변할수록 더 똑같은 것”이라는 속담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통용된다. 영화 「거짓말」의 마지막 장면은 제이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이다. 그가 제이와의 이상한 사랑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병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었던 연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족과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 인생은 이미 프로그래밍 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다. 게임을 하는 자는 그 게임의 규칙을 벗어나서는 게임을 할 수 없다. 거짓말로 프로그래밍 된 사회에서 거짓말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사회로부터 도태된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감독은 영화를 통해 거짓말이란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막대기’와 같은 것이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허무한 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약간의 쾌락과 거짓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잠시나마 이탈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섹스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에 탐닉하면서 달콤함을 느낀다. 만약 이런 달콤함마저도 없다면 인생은 지옥이다. 이런 생각은 결코 허무주의나 현실도피로 귀결되지 않는다. 다음의 신문답을 화두로 잡고 있는 자는 삶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는 않지만 이런 허무의 미학을 깨달을 수는 있다.

일제시대 때 용성 대선사 어느 하안거처에 선원에서 유명한 안수정등화(岸樹井簾話)의 화두를 대중에게 주었다. 어떤 나그네가 황야를 지나던 중 미친 코끼리를 만났다. 코끼리는 나그네를 밟아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 나그네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곧 코끼리에게 짓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침 눈앞에 마른 늪은 우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마침 등나무가 그 우물 속으로 가지를 드리우고 있었다. 나그네는 전후좌우를 살필 겨를도 없이 등나무를 타고 우물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성난 코끼리는 분에 못 이겨 우물 주위를 돌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면서 나그네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으로 위험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물이 마른 우물 바닥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나그네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게다가 흰쥐와 검은쥐 두 마리가 교대로 나타나 번갈아 가며 나그네가 잡고 있는 등나무 가지를 갉아먹고 있었다. 이런 위험 천만한 순간에 흰쥐와 검은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등나무 줄기에 붙어있던 꿀통을 건드리는 바람에 가지에 매달려 있던 나그네의 입 속으로 간간이 꿀이 떨어졌다. 용성 대선사는 대중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나그네가 살 수 있는가?” 제자 중의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하안거가 끝나고 어느 스님이 용성 대선사의 수제자인 전강 스님은 그 화두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옛 장수를 하면서 팔도를 만행하고 있다는 그를 찾아 헤맸다. 그러

던 중 마침내 경상도 어디에서 전강 스님을 만났다. 그는 전강 스님에게 이 화두를 이야기하면서 답을 물었다. 그러자 전강 스님은 가위를 든 오른손을 쳐들며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달다.”

■ 참고문헌 ■

- 헌트, 린(1999),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조한욱 옮김, 새물결.  
김기봉(2000), 「단단한 근대화와 부드러운 근대화: 한국 근대화의 역사를 보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비판」, 『사회와 문화』, 창간호, 문화사학회.  
헌트, 린(1996), 「포르노그래피와 프랑스 혁명」, 린 헌트 편, 『포르노그래피의 외설성과 현대성의 기원』, 조한욱 옮김, 책세상.  
주명철(1990), 『바스티유의 금서』, 문학과지성사.  
단턴, 로버트(1996), 『고양이 대학살』, 조한욱 옮김, 문학과지성사.

## 도올 김용옥의 『老子와 21세기』를 말한다

김영주

우리 나라는 전공분야를 별라도 따진다. 우리 학계의 이런 모습이 여간 비위 상한다. 그게 스페셜리스트를 높이 받들어 주려는 배려라기 보다는, 실은 협소하고 경직된 지적 풍토에서 비롯된 비겁한 줄렬함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뼈딱함 때문인지 아니면 천방지축 여기저기 끼어드는 경솔함 때문인지, 전공을 따지지 않고, 내 생각을 주저 없이 이야기해 버릇한다. 이런 주제 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당할 것인가를 넉넉히 알고 있음에도, 우리 나라 상류 지식인이 비겁한 줄렬함에 깊이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짜가지 없다. 잘난 체 한다. 또 하나의 독선이다. 下찌리 지방대 박사의 열등감 만회를 위한 계산된 작전…”이라는 개인적인 인품 손상을 무릅쓰고 달라든다.

그런데 이런 나의 모습이 영낙 김용옥을 닮았다. 말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활화산처럼 내뿜는 독설도 그렇고, 툴툰이 멍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다. 그래 그래 그러고 보니 참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이미 김용옥을 향한 ‘원초적 호감’을 배태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김용옥을 빌어 내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는 게 아닐까? 지난 3월 초에 광주지역의 인터넷 신문 ‘DK21’에 ‘도올 김용옥을 말한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www.dk21.co.kr의 첫 화면 맨끝자리, A4 15장 쯤). 이 글을 이런저런 사람들이 읽은 모양이었다. 또 그 인연으로 이

---

김영주 초당대 교수(경제학). 최근 저서로 『시장주의, 그 신화와 환상』(1999)이 있음

서평을 쓰게 되었다.

[1] 김용옥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나는 김용옥을 제법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90년대 이후의 책은 미처 못 읽은 게 있기는 하지만, 80년대 초반에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으로 히트를 쳤던 시절부터 신동아 잡지 칼럼이나 한국일보 칼럼, 심지어는 일본 岩波문고의 「思想」에 나온 짧은 논문에 이르기까지 내 눈에 걸려든 그의 저작 끝에도 관심 가지고 보아왔다. 지난 겨울 교육방송의 특강도 하나도 빠짐없이 보았다.

그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여기저기서 김용옥에 대한 이야기를 주섬주섬 들어보면, 그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들 말한다.

· 장점 : 공부를 무지 많이 했다. 천재이다. 치열한 학문적 탐구심이 있다. 풍부한 상상력과 번뜩이는 창의력이 넘친다. 천진난만하고 귀엽기까지 하다. 공부하고 싶다는 충동을 준다. 딱딱하지 않고 재미 있다. …

· 단점 : 건방지다.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하다. 독선적이다. 열등감으로 비틀어진 성격. 학문적 깊이보다는 현학적 쏘맨십. 이야기가 짜임새 없이 산만하여 어지럽다. 차분한 설득보다는 선동적 흘림. 감정적 흥분이 지나치다. 쓸데없이 쌍스런 말을 남발한다. 목소리가 너무 거슬린다. …

칭찬과 비난이 거의 반반이다. 양적으로만 반반인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반반인 것 같다.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 두 부류로 딱 갈라져 있다기보다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의 장점과 단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나기에, 설왕설래하지 않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편이다. 그러니 크게 논란 하질 것도 없는 셈이 된다. 그러나 무게를 어느 쪽으로 실어서 볼 것인가를 따지자면, 우리는 그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방송 특강은 분명코 대단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노자

와 21세기』라는 책은 그 내용만 보면, 대중적인 인기를 끌 책이 못 된다. 물론 틈틈이 그의 아기자기한 잡설이 끼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대중이 읽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책은 그 이전의 다른 책보다 훨씬 대중적이지 못하다. 이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된 것은 순전히 방송특강 덕택일 것이다(물론 이 책이 방송특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책은 책이고 방송특강은 방송특강이다).

그 이전의 수많은 책들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슨 이슈를 잡아 쓰기는 하지만, 자기 머리 속에 맴도는 수많은 상념들을 ‘배설’해 놓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상념의 배설이 일반 독자에게 잡스런 지적 충족감을 주고, 뭔가 모를 막연한 불만을 일회용이나마 씻어주는 카타르시스를 주었다. 그 카타르시스의 도가니에서 김용옥이 추는 춤에 따라 일반 대중도 덩달아 춤추는 재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는 그 재미가 별로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老子』라는 책을 굳이 번역한다는 구체적인 명에서 비롯된 것 같다.

번역은 참 잘 한 것 같다. 어떤 대목 대목에서 이런저런 논박을 하고픈 바가 없지 않지만, 쉬운 우리말을 잘 살려내어 번역하였다는 걸 높이 평가해야 한다. 쉬운 우리말을 잘 살려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는 분명코, 쉬운 생활언어에만 밝은 게 아니라, 쉬운 우리말에도 밝다. 우리 나라 상류 지식인들은 쉬운 생활언어와 우리말을 살려냄에 너무 인색하다. 실은 살려내고 싶어도, 한문병, 일어병, 영어병에 찌든 우리말에 찢어 있고, 생활 속에 살아있는 사색에 서툴고 낮설어서, 능력도 없는 것 같다. 그가 이런 저런 구설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장점 하나만으로도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그래서 내 비록 그를 비판하는 점이 없지 않지만, 이 사회가 그를 잘 가꾸어 좋은 보물로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허물은 개인적인 것이요, 때로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당연한 것이기에, 그의 허물을 헐뜯기보다는 그의 특기가 더욱 살아나도록 다듬고 살피주어야 할 것이다.

그건 그렇다. 그러나 깊고 깊은 사색과 지혜가 담긴 『老子』라는 책을 쉬운 우리말을 살려서 번역하는 작업이 범상치 않아서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학문적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의도적 작전일까, 그도 아니면 누구 말마따나 현란한 잡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자아도취하는 학자연을 벗지 못해서일까? ‘알기 쉬운 동양고전’이라는 테마로 일반 대중을 잔뜩 의식해야 할 이 책에, 웬 문헌적 고증과 문자 고증을 그리도 늘어놓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는 老子철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다. 그건 전공자만이 이는 학문적 양심이다. 문헌적 고증과 문자 고증은 학자들끼리 논문이나 세미나에서 할 일이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책을 이런 식으로 쓰면, 그가 쓸데없이 현학적이라는 구설수를 확신시켜 줄 따름이다.

그래서 이 책은 1·2·3권 모두 ‘실패작’이다. 차라리 번역문만 쪽 빼어 책을 만들었으면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으리라!(넘치는 열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가 책을 그렇게 만들리 없겠지만…) 그 이전의 책과 이번 방송특강은 이런저런 구설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때론 비위도 상하고 때론 알밋기도 해서 한 번 붙어 보고 싶으면서도,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2] 그는 열광하는 팬도 많고 미워하는 적도 많다. 학자들은 그를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다. 세 가지 부류가 있겠다. 하나는 우리 나라 학자를 도매금으로 싸잡아 매도하는 그의 독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일테고, 또 하나는 분방하게 내뿜는 논리적 비약으로 학문적 치밀함에 크고 작은 구멍이 보여서 일 게다. 게다가 ‘인간 김용옥’에 대한 실망이 ‘학자 김용옥’까지 미워져서 아예 거들떠 보기도 싫어서 일 수도 있겠다.



### 지나친 자기 자랑과 독선

웬 자기 자랑이 그리도 많은지, 아예 자기 자랑이 주제인 듯 하다. 자기 자랑이 단순히 자기 자랑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꼭 씹는다. 때론 글 읽는 독자까지 멀리 당한 느낌이 오기도 한다. 그를 잘난 놈이라고 인정해 주다가도 비웃대기가 상한다. 자기 자랑이 지나쳐서 과대망상증 환자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것은 그대로 독선으로 이어진다.

실사 그가 자기 자랑이 지나치고 독선이 드세다고 하더라도 이 점은 알아야 한다. 그는 이 땅의 학자가 보이는 **협소하고 경직된 전문지식과 세속의 허영으로 가득 찬 위선**에 분노하고 있다. 그의 자기 자랑은 단순한 열등감의 반작용이라기보다는 잘못된 학자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의 독선은 이 잘못된 학자와 잘못된 종교인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도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온 오버액션이다. 그러니 그의 오버액션을 좀 타하더라도, 학계·종교계를 비롯한 지식인, 그리고 그같은 통속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상류계층에 대한 그의 분노가 매우 옳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가 우리 나라의 학자와 성직자를 비롯한 상류 지식인을 싸잡아 매도하는 독설에 나는 일단 박수를 보낸다. 물론 그 독설에서 빼줄 만한 예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예외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기에, 그 예외 때문에 그의 싸잡아 매도하는 독설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이것저것 재다가 진짜 할 일을 놓치는 수가 많다. 그가 상류 지식인을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진짜 할 말’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말했다. **“빼와 말은 씹어야 맛이다”**

### 순박함을 가장한 교활한 쇼맨쉽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美感은 簡潔美!”라는 말이 있다. 그 간결미의 절묘한 미감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인품의 경지가 ‘大巧若拙’이라는 ‘고결한 순박함’임을 안다. 그 고결한 순박함을 알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처세인 ‘순박함을 가장한 쇼맨십’도 알아본다. 만약 그가 그의 탁한 목소리를 일부러 다듬지 않고, 어린 시절의 열등감을 일부러 드러내고, 감정적인 흥분과 쌍스런 말 그리고 지나친 자기 자랑과 독선이 이미 계산된 행동이라면, 순박한 無爲를 가장한 ‘쇼맨십의 高手’임에 분명하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를 요모조모 살펴보았다. Let it be me 노래시 간에서 시작하여 피날레로 그 극치를 보여준 어머니 모심과 선언문 시 낭송으로 이어지는 그의 연출력. 팬시리 강조하는 영어·중국어·일어 실력. 현란한 제스추어와 말솜씨에 가끔씩 섞여드는 맹한 표정과 어눌한 말더듬. 여간 헛갈렸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 내렸다. 그의 엔터테이너 모습은 방송 피디와 손잡고 별인 의도적 연출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나머지는 교활하게 계산된 쇼맨십이 아니라고….

그의 雉氣 어린 거친 모습이 타고난 성질머리를 고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노장사상에 빠져서 無爲의 추구가 긴 세월에 젖어들어서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이 가까이 접한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글과 책 그리고 화면으로 그를 만난 나는, 그의 거친 모습이 좀 심하다 싶어 거부감이 들면서도, 오히려 거꾸로 **순진무구**하고 귀엽게까지 보이는 걸 어쩔 수 없었다.

### 그의 원대한 꿈 그리고 그 열정과 노력

그는 孔孟 Epoch와 朱子 Epoch에 이어 ‘제3의 Epoch’라는 **새로운 사상의 큰 開闢**을 꿈꾸고 있다고 말하였다. 참으로 원대한 꿈이다. 그는 이 원대한 꿈을 위하여, 동양과 서양의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을 모두 먹어버리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그래서 그는 피 터지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살아간다. 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에 절로 감탄한다. 누가 이 열정과 노력을 따르랴!

사람들은 뛰어난 기억력으로 누에고치 실처럼 줄줄줄 뽑아내는 지적 현란함에 놀라서 그를 “천재이다. 무지무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

는 것 같다. 그의 뛰어난 기억력에 의한 지적 현란함이 사람들 기를 눌러서 호소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현란함이 바로 학문적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기에, 학문적으로 그리 높이 평가할 건 아니다. 오히려 잡스럽고 경박해 보일 수 있다. 게다가 뛰어난 기억력은 오히려 참다운 학문에 장애스럽기도 하다. 그의 큰 장점은 뛰어난 기억력에 의한 현란한 지식이 아니다. 그의 장점은 다양한 지적 편력으로 봉어뿔 지식인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자유분방한 사고력**이요, 웅고집 지식인이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번뜩이는 통찰력**이다.

학문적으로 잡스럽고 경박해 보인다.

그는 매우 박학다식하다. 그러나 그것은 학문적 품격에서 보아 잡스럽고 경박해 보이기 십상이다. 어느 부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노자철학 전공이니까 노장사상에는 구멍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주자학 나아가서 한문학까지는 구멍이 별로 없을지는 몰라도, 의학자·한의 학자·무예인·기독교신학자·불교학자·역사학자·사회과학자·문학가·음악가·여성운동가·환경운동가..., 그들의 눈에 따로따로 크고 작은 구멍이 여기저기 보일 것이다. 그래서 禪불교학자 누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도올선생님, 그건 그게 아니올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첫째, 그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서 그들을 모으는 마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그들이 부분적으로는 전문가일지언정 김용옥의 현란한 지식에 눌러 맞상대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셋째, 부분적인 전문지식마저도 많은 대중의 눈에 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질 못하고 혼자 우물쭈물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감당할 학자가 없는 셈이다. 사람들은 **술안주감으로 오징어 씹듯이**, 감정 어린 몇 마디로 질끈 씹고 마는 거다.

학문적으로 짜임새가 없어 산만하다.

이번 특강은 물론이고 그의 글과 책에서도, 체계적인 짜임새 있는 글을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는 자기의 세계관을 ‘氣철학’이라는 낱말로 말하는 경우는 자주 보았으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건지 아직 보지 못했다. 그가 워낙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도 만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의 글과 책에서 **한 번도 짜임새 있는 글을 보여주지 못함은 그의 치명적 약점**이다.(내가 말하는 짜임새 있는 글이란 기존의 학계에서 요구하는 경직된 논문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학계의 경직된 논문양식이 참다운 창의력을 죽이고 **도식적인 도그마를 강요하는 억압**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에게서는 엄격하고 깊은 사색의 자취가 별로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그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氣철학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말만 앞세우는지, 그리고 끝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꽤 의심스럽다. 제발 그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를 향한 나의 의심이 기다림에 지친 **조급함에서 나온 어리석음**이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내용에 불만

◦내가 사회과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사회과학적 빈틈이 매우 커 보였다**. 小國寡民과 아나키즘·페미니즘·종교와 국가간의 관계·가족제도와 결혼·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간략한 강의라는 점을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너무 개략적이기도 하고 또는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 많이 알고 적게 알고라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과학적 마인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허망해 보인다.(이것은 김용옥의 잘못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갖는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철학 전공자에게서 자주 느껴진다. 김용옥의 박학다식함이 잡스럽고 허망해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 **자기의 학문적 실책이나 방향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원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면서도, 자기 자랑에 곁들여서 자기의 학문적 실책과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자기 자랑이 훨씬 생생하게 드러날텐데….

◦ 노장사상에도 밝음과 어두움이 있다. 그는 개신교의 독선과 타락을 맹공하고, 禪불교와 스님의 위선과 무지를 비판하면서도, **노장사상을 찬양하기만 하고 그 어두움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 老莊사상은 게으른 무능력자의 자기 위로나 도피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방자함을 속세의 때를 벗은 脫俗으로 합리화하기도 한다. 지금 이 세상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요구하고, 짝짜인 인간관계에서 절묘한 처세를 요구하기에, 노장사상의 **게으름과 방자함**이 우리에게 **삶의 여유와 속세의 탈출로** 보이는 것이다. 삶의 여유와 게으름 그리고 탈속의 해방과 독선적 방자함은 백지 한 장 차이가 이면서도 너무도 다른 것이다.

◦ **도가와 도교의 관계를 너무 간단하게** 말하고 말았다. 그는 그의 氣절학이 氣의 신비주의로 사이비 종교를 만들거나 돈벌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그게 어떻게 다른지 일반 사람들은 매우 궁금하다. 도가와 도교의 관계를 다룬 강좌하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하지 않은 것은 왜 일까? 도가의 개인주의적 무위사상과 도교의 개인 쾌락적 보신주의나 허무맹랑한 도술과의 연결이 창피해서가 아닐까? 다른 별스런 이야기는 다하면서도, 자기가 노장사상 전문가라면 제대로 밝혀주어야 할 도가와 도교의 관계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거나 무책임한 일이다.

◦ **도가와 유교·불교와의 상호관계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노장사상과 유교·불교를 수없이 되뇌이면서도, 이들의 상호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역시나 그의 짜임새 없는 산만함을 보여준다.(이 또한 어려운 작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의 걸보기 능력과

박학다식함 그리고 그 긴 세월의 치열한 공부량을 보아 가능할 법도 한데, 참 이상하다.)

◦ 無와 有에 관한 설명이 매우 답답하였다. 노장사상에서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설명이 너무 답답하기에, 혹시 그가 이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실은 김용옥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철학자나 종교가들을 비롯한 사상가들의 이야기에서 이 개념을 속 시원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모두 흐린 영화를 보듯이 답답하다.(나는 이것을 ‘私的소유와 共同소유’ 또는 ‘개별성과 공공성’으로 이야기 하면 매우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道可道 非常道에서 常이라는 글자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常이라는 글자 뜻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글자 뜻을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 좀더 쉬운 예를 들어 차분히 전달했으면….

◦ 太一生水에서 ‘水’에 대한 해석이 나와 다르다. 太一生水에서 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노장사상의 궁극인 ‘道’를 상징한다고 본다. 太一生水는 太一生道인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은 太一生水라는 첫 글귀에서 쪽 몇 줄 뒤쪽에 나오는 濕燥함에서 濕潤한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한다.

[3] 김용옥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자유분방한 사고력과 번뜩이는 통찰력을 높이 사면서도, 그의 박학다식함이 짜임새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잡스럽고 산만해 보이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더구나 짜임새 있는 체계의 싹마저 잘 보이지 않으니, 그의 원대한 꿈이 허풍으로 보이기까지 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인데, 이번 강의에서 카타르시스적 대중의 열광이나 도올서원 비란내 나는 젊은 학도들의 찬양에 취하여, 자기의 인격적·학문적 크고 작은 구멍을 눈감아 버

리는 건 아닐까 염려스럽다.

그가 아직 **학문의 고결함에 많은 구멍과 혈령함**이 있고, **언행의 소박함에 치기 어린 거침**을 벗겨내지 못하고 있기에, 나는 그를 존경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이 땅의 학자가 협소하고 경직된 전문지식과 세속의 허영으로 가득 찬 위선에 분노하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타는 목마름에 샘물 같은 신선함**을 맛본다. 그의 원대한 꿈이 달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시민운동, 과연 흔들리고 있는가?

이민원

## 1. 시민운동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요즘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 가면 시민운동 단체의 도덕성, 시민운동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듣기 거북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듣고 넘길 일이 아니기에 이 문제의 핵심을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쓴다.

이 글을 쓰기 위한 준비차, 각 시민단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네티즌들의 의견이라는 형식을 빌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었다. 내용을 보니, 최근의 유명 시민운동가들의 스캔들 때문인지 잘 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거냐는, 점잖은 그러나 결코 점잖지 않은 헐박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사정이 그러하니 도덕성에 대한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터이다.

정말이지, 도덕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만일 시민운동을 비판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민운동가들이 정치개혁을 주장하여도 사리사욕 때문이고 경제개혁을 주장하여도 사리사욕 때문이라면, 정말 시민운동가들이 그렇게 더러운 놈들이라면 참 어디 낮 부끄러워 다닐 수가

---

이민원 광주대 교수(경제학). 최근 논문으로 「한국의 예비적 저축에 관한 패널 분석」(1999), 「도시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광주 경제의 바람직한 모습」(1999) 등이 있음.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각종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시민운동 비판의 핵심은 ‘도덕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운동이 도덕을 몽개고 있으니, 참 꼴 좋다’는 것이었다. 물론 시민운동이 그간 이 도덕성에 근간을 둔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대다수 국민들이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도덕에 둔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을 해야하는 시민운동으로서야 도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아니겠는가?

시민운동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판의 글들을 계속해서 읽어본다. 읽어가면서 나는 참으로 쓰디 쓴 슬픔, 어찌면 시민운동을 더이상 하기 싫다는 그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주의 한 티끌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는 법인데, 자신이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곤 없는 법인데, 왜 우리는 세상더러 자기만을 위해 있으라 하는가? 왜 우리는 내가 남을 위해 있다는 그 진리는 보지 못하는 것인가! 이 세상 모두 더러 자기만을 위하여 있어달라고 협박할 때 과연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우주만물은 다 결국 다른 존재에 무언가를 주고 가게 되어있다. 그래 조물주가 할 일이 없어 이 세상에서 실컷 뜯어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겠는가? 우리는 모두 남을 위해 어떤 가치가 있을 때에만 세상에 태어나는 것임을...

시민운동단체 너희들이 뭔데 우리의 이익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느냐는 내용으로 그 많은 글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건 악이요 자신을 옹호하면 그건 선이다. 이런 만행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에 대해 분노했는가를 알 것 같다. 우리들이 선악의 판단을 시작하면 세상이 이렇게 참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 것은 아니었을까?

또한 거기에는 어김없이 시민단체의 도덕성 문제가 끼어 들고 있었다. ‘너희들이 시민운동 해보아야 공명심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설문조사 해보니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더라.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비난하느냐’ 하는 톤이 강하게 깔려있는 그

런 글들이다. 그러나 나는 또 한번 생각한다. 과연 도덕이 무엇인가? 아니, 도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정말로 도덕이 무너지기는 한 것인가?

## 2. 도덕이 정말 무너지기는 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한없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 하나가 있다. 사람들의 확률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려운 확률이론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확률적으로 가벼운 사람 몇 퍼센트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간다고 그 사람을 욱할 수 있는가? 또 누가 너무 크다고 욱할 수 있는가? 이때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는데 누구나 쉽게 동의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고 두들겨 맞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게 우리들이다. 확률적으로 1등과 꼴찌는 100% 존재하는 것 아닌가? 100% 존재할 수밖에 없는 꼴찌를 두들긴다면 어찌자는 것인가? 앞의 몸무게나 키의 예와 똑같은 경우인데 우리들의 판단이 이렇게 달라진다.

시민단체나 교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확률적’으로 비도덕적인 일을 한다. 시민단체나 교수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런 범주의 일을 확률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일은 확률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며 그에 따라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률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에 세상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신이 아닌 인간이 도덕을 모두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에게 신의 영역인 완전함을 갖추도록 요구해 왔다. 이것은 애당초 그릇된 요구이다. 인간은 인간 아닌가. 누구누구는 특별해야 한다는 주문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어느 누구라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겠는가?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주문을 해왔고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수많은 위선자들이 생겨났다. 도덕군자인 체하는 사람, 자기를 실제보다 과대 포장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다. 허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존재가 되라는 폭력을 휘둘러왔으나 그런 일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 신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니 누구라도 발가벗기고 나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참담해한다.

### 3. 도덕은 과연 무엇일까?

도덕이란 왜 있을까? 우리가 도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이 유지되고 사회가 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도덕 자체를 위해 도덕을 지키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도덕적이지 아니라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폭격을 하는 것이다. 마치 교회를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이비 신도들일수록 일요일에 교회 나오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도덕적인 행동인지 알 수는 있는 것일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부도덕하다고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거나, 보는 시각을 바꾸면 그 사건은 얼마든지 미화될 수 있다. 친척의 취직 부탁을 한 행위가 보기에 따라서 과렴치한 행위가 되기도 하고 매우 당연한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닌가! 어느 유명인사가 여대생을 추행했다고 비난하는 신문의 또 다른 한편에 어느 물리학자가 말년에 어느 여대생을 죽어라 따라다닌 이야기를 아주 귀엽다는 듯이 그리고 있는 것이 도덕기준의 현실이다. 왜 이렇게 도덕의 기준이 다를까? 이 점이 핵심이다. 어디서부터 도덕적이고 어

디서부터 도덕적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 사항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으로 애로우리는 학자는 노벨상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 4. 시민운동의 핵심은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 감정에 치우치며 사는데, 그 감정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변수가 바로 도덕이다. 그런 연유로 도덕은 사람들의 가치판단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 아주 도덕적인 사람은 어떤 일에 실수를 하여도 양해가 되고 부도덕한 사람은 그가 무슨 일을 하여도 인정받지 못하며 심지어 과거의 행위까지도 모두 정치된다. 그러다 보니 도덕은 우리 나라의 유교문화와 결부되어 아예 그에 대한 논의조차도 터부시되었고 그러다 보니 원래 도덕의 덕목, 혹은 도덕이 추구하는 바의 바람직한 기능은 뒷전에 밀리고 사사건건 인간의 발목을 잡는 굴레가 되어 버렸다. 그래 요즘 터져 나온 한 시민운동가의 부도덕에 이르자 온통 시민운동이 먹물을 뒤집어쓰는 비극을 당한 것이다.

시민운동은 모름지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야 당연히 금융개혁, 경제개혁, 민주주의, 투명한 행정,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다. 이걸 도덕의 문제이거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온통 도덕으로 무장한 운동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그에게 시민운동가로서의 덕목이 있는가? 시민운동이란 기분풀이가 아니다. 사회의 옳지 않은 일로 인해 사람이 억압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특정 세력의 이익만 도모될 때 시민운동은 그를 옳지 않은 일이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위해 나서는 것이다.

## 5. 시민운동가는 왜 시민운동을 하는가?

이쯤에서 내가 왜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 나는 사실, 지금까지 이 글에서 내가 비판한 율법주의자였고 도덕주의자였다. 교수가 된 뒤로는 나의 율법 지향적 사고는 극에 달했다. 마치 율법이나 도덕 하나만 건드려도 살아남지 못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다. 이걸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 되겠다는 오만방자한 생각이었다. 어쩌면 지금도 율법에 쫓겨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나는 절대로 율법은 인간에 의해 완성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선악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일 수도 있다.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회계자료가 거짓일 수도 있다. 기업가와 노동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별 수 없는 책상물림이었다. 어느 날, 나는 온통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현실에 눈을 떴다. 그것은 결코 학교에서, 책에서 논문에서 배울 수 없었던, 그래서 교수들은 현실을 모른다고 질타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나라 기업, 정치, 경제, 행정의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거짓된 현실이었던 것이다. 국민, 시민, 공익을 말하면서도 사익만을 탐하는 그 현장을 보고, 세상의 본질은 도덕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다는 대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시민운동에 나섰다. 사회의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원자료를 직접 보았고 그에 대해서 관료와 기업가들이 거짓말을 해대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사회에 대한 도(道)를 깨달은 것이다.

이제 나는 기업가, 고위관료, 정치가들의 애정행각 같은 데는 추호의 관심도 없다. 오로지 경영이나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정절을 지키라고 며느리를 죽여 놓고 열녀비를 세우고 흐뭇해하는 이 땅 우리 조상의 도덕에 비로소 전율을 느끼는 사람이 된 것이다. 또한 이를테면 의약분업문제에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가 적게 버는가 아니라 의약분업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만 관심이 있다. 동일한 논리로 시민운동도 그 운동을 통하여 사회를 얼마나 개혁시킬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다. 시민운동의 도덕을 위해서 구색만 갖추려는 운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6. 시민운동의 반성: 시민운동은 과연 옳은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럼 도덕은, 행실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것이냐고 대드는 돌팔이가 꼭 있다. 하기가야 도덕, 행실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는가! 다만 그걸로 사람을 잡지는 말라는 것이다.

이 세상은 대중이 법이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법이다. 그러니 대중성을 상실한 시민운동이 어찌 살아남겠는가? 그동안 민중과 사회만을 위해 살겠다고 외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한 시민운동가, 처음부터 아예 정치를 꿈꾸고 시민운동단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물론 시민운동가에게 100% 시민운동가의 모습만 주문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을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였지만, 허나 어찌할 것인가 대중들이 원한다면 따를 밖에.

이런 뉘두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민운동가들, 아니 나의 모습이 진정으로 율법과 도덕에 초연할 만큼 떳떳한가에 생각이 미친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개혁하려고 했을까? 또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을까? 구색 맞추기 운동은 없었는가? 우리의 행동 중에서 시민들에게 고깝게 비치는 곳이 분명 있다는데, 우리는 진정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석해본 바가 있는가? 세상을 정치하기 전에 그 화살을 나에게 돌려본 적이 있는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이 호응하지 않음을 한탄만 하지는 않았는가? 진실로 세상의 의로움만을 생각했는가? 나의 처지가 운동의 방향을 혼든 적은 없었는가? 나에게 편견은 없었고 또 다른 권력을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깊이 묻고, 깊이 답하고, 깊이 행동할 일이다.





# 광주항쟁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김 성

## 1. 행사기획의 배경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자 성년을 맞아 치러진 5·18민중항쟁 20주년 기념행사가 끝났다.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부터 부정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기념행사가 합의해야 할 정신적인 목표와 그 정신을 담아 현실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행사의 성격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활발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20주년 행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준비되고, 그 행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내려 본 뒤 아쉬웠던 점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공식적인 평가는 20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평가는 행사를 기획해 온 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둔다.

이번 20주년 행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행사의 내용이 외형상으로는 내용적으로나 다른 해와 달리 대폭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처음으로 국비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고, 네 번째는 기념행사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히 열렸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20주년이라는 성년 행사로서의 상징성과, 시대적 환경변화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 다른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5월=광주'라는 잘못된 시각과 보이지 않는 벽을 깨고, 기념행사가 박제화되지 않도록 하기까지에는 행사 참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기념행사위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이들의 조언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5·18 민중항쟁 20주년 기념행사의 기획은 1999년 11월 30일, 20주년 기념행사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5·18재단의 구성원들과 광주지역 시민단체, 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 실무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지면서 출발하였다. 이후 초기에는 5·18기념재단 기획위원회의 주관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기념행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기획단이 주관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서 마련된 행사안이 5·18단체와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와 상위 조직인 행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기획과정에 참여한 기획위원들은 대체로 세 가지 것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첫째는 5·18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참여자들이 가장 고심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둘째는 광주 시민과 전 국민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동조성 문제였고, 셋째는 구체적인 행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였다.

첫째, 5·18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기념'이라는 단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는 '나중에 어떤 일을 상기할 근거로 삼음' 또는 '지난 일을 상기하여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 결국 '기억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념을 통해 과거에 가졌던 경험에 대한 가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념행사가 갖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5·18 기념행사'는 오늘날 4·19나 여타 국경일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례적인 기념식을 갖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박제

화된 행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 특히 5·18 민주항쟁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추진 등 5·18 해결 5대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기념일이나 국경일과 차이가 있었다. 비록 20주년을 맞았다고는 하나 아직도 국민들에게 항쟁의 정신이 축소·왜곡된 채 인식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과거의 기념행사와는 달리 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획참여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지난 1981년부터 1999년까지 19년 동안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극도의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게 된 ‘저항형 기념행사’로 1980년대부터 1992년까지의 행사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탄압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당국의 용인 아래 제도의 정착을 요구하면서 치뤄진 ‘공식화 저항형 기념행사’로서 1993년부터의 행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의 민주화가 오늘날만큼이나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19년 동안 이처럼 5대 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면서 기념행사를 치러온 ‘과정’ 때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1997년부터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되었으나 ‘기념행사’ 그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시민참여의식은 ‘탄압의 시대’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따라서 20주년이라는 시간적 분기점을 맞아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기념행사를 갖기 위해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또 그 ‘변화’는 내용 면에서 단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0년 또는 5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과제까지를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에 기획위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바로 5·18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과는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정체성과 기념행사의 장기적 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토론에서 기획위

원들은 5·18 정신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5·18 정신을 정립하는 작업이 시급한 일이며, 광주라는 도시의 조형성에 5·18 정신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여 시민들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축제로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의 다른 비극적인 사건-예를 들어 4·3 사건이나 부마항쟁-과 연결시켜 해석함으로써 역사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두 번째는 동조성의 문제였다. 동조성의 핵심내용은 어떻게 전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로 만들어 내느냐는 문제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광주시민의 실천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5·18은 199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 기념식을 치르게 되었지만, 광주에서의 참여의 열기는 과거 비공식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들어가고, 공식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념식’은 광주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혀 치뤄지지 않았다는 데서 그 한계를 노출시켰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4·19나 다른 국가기념일처럼 자체적으로 국가가 공식화한 5·18 기념식을 가짐으로써 5·18 정신을 기리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상징적 의미를 갖는 기념식의 경우는 1차적으로 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이것이 여의치 못하면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가 나서서 기념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구체적인 행사의 방향에 대한 것이다. 기획위원회는 행사의 주제표어를 “천년의 빛 5·18”로, 부제는 “평화·인권·통일의 세상”으로 설정했다. ‘평화’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여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는 의미이며,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국내외에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광주를 인권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자는 의미이며, ‘통일’은 반인륜적인 폐악과 모순은 결국 분단으로부터 발생했으므로 분단이테올로기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통일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주제표어를 바탕으로 20주년 기념행사의 기조로는 ‘한국 민주화 20년을 중간 결산하는 장’, ‘진실과 화해를 담는 행사를 통해 전국민의 참여’, ‘인권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설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21세기 민주주의식 고양’, ‘민주주의를 수혜받는 자세에서 국제사회에 대해 기여하는 자세로의 전환’ 등을 설정하였다. 20주년 기념행사는 이러한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준비되었고, 이중 상당수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 2. 각 행사의 주요 내용

20주년 때 치러진 58개의 행사는 구체적으로 8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본행사는 전야제 추모제 폐막제로 해마다 기본적으로 치러진 것이다. 둘째, 전국화 사업은 ‘전국동시기념식’(6곳), ‘한국민주주의 20년 사진전’(한국사진기자협회와 공동주최), ‘국토종단대행진’, ‘임진각 통일음악제’, ‘한국분단50년 재조명 심포지엄’ 등이다. 전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점을 둔 것이 ‘동조성’의 문제이다. 광주시민들이야 5·18에 대해서 잘 안다고 가정하더라도 광주·전남이외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신군부 정권에 의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함께 5월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역사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이룩하기까지는 5·18을 시작으로 6·10 항쟁, 평화적 정권교체까지 온 국민의 피와 땀이 배인 2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며, 그것을 사진으로 설득한 것이 ‘한국 민주주의 20년 사진전’이다.

‘국토종단 대행진’은 전국의 대표들이 나서서 직접 행진하며 5·18의 의미를 알리는 이벤트이다. 이 이벤트는 통일음악제로 연결돼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국분단 50년 재조명 심포지엄’은 1948년 제주 4·3 사건,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5·18이 한국 현대 50년사에

서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가를 규명해 보는 최초의 심포지엄이었다. 즉 각각의 사건을 독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대적 배경의 필연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며, 그 배경에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술적 접근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셋째, 국제행사는 다른 해보다 많은 7개의 행사가 치뤄졌다. 1980년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글라이스틴씨가 참석한 ‘LA국제학술심포지엄’이 4월 20일 열린 것을 시작으로 21세기 동아시아의 인권운동 방향을 설정한 ‘제4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회의’가 진지하게 열렸다. ‘아시아 반독재 민주화 운동 단체 및 실종자가족 초청 행사’는 열악한 상태에 있는 아시아 지역 인권상황을 신장시키기 위한, 즉 수혜에서 기여로 방향을 전환하는 행사로서 아시아 인권연대를 싹트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과 연결되어 치뤄진 것이 망월동 묘역에서 있었던 아시아 ‘인권상황전’이다. ‘해외인사초청 행사’는 1980년대 5월 운동이 극도의 탄압 속에서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외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을 초청하는 행사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초청자들은 한국 인권신장에 만족하면서 앞으로도 ‘기여’하는 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해 주었다.

넷째, 5·18 정신 계승을 위한 것으로는 2개의 행사가 치러졌다.

다섯째, 단체 행사에도 눈여겨 볼 만한 행사가 여러 개 나타났다. 5·18을 판소리로 공연한 행사와 신문의 시사만화가들이 발표한 5·18 전, 전국의 컴퓨터 그래픽 교수들의 5·18을 나뉘대로 형상화 한 시각디자인전, 5·18 당시 언론의 왜곡보도를 구체적으로 밝힌 한국기자협회의 기자포럼 등은 5·18을 전국적인 관심사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한 행사였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연극 ‘오월의 신부’는 5·18을 픽션으로 엮은 작품인데 서울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행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광주시가 주관하여 제작된 대형 총체극 ‘봄날’ 역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진한 감동을 주었다. 따라서 5월 정신의 전국적 동조화를 위

해서는 창의성이 뛰어난 예술작품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받아 들여졌다.

여섯째, 5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모두 4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는 해마다 개최해 온 헌혈운동, 명동투쟁사진전, 민주기사의 날 행사였으며, 이색적인 행사로는 ‘인권병원설립을 위한 학술대회’였다. 부상자들이 앞으로 국가유공자들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상의 특수성 때문에 독자적인 인권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유익한 행사였다.

일곱째, 민중문화예술제는 모두 17개의 행사가 열렸다. 한국민족예술총연합(약칭 민예총)이 전체적으로 주관하였으며 20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전야제를 가졌다. 또 전국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전국 14개 도시 순회공연을 가졌고, 고 윤이상 선생이 작곡한 ‘광주여 영원히’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망월동에서 연주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많은 예술인들이 광주를 찾아 광주선언을 한 것도 전국적 동조성의 분위기를 잡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민예총 역시 5·18 20주년 기념행사 중 문화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면서 한국 민중예술의 20년을 정리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며, 민예총이 5·18 문화행사를 주관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 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여덟째, 종교행사는 모두 10개 행사가 각 종교단체의 주관으로 전국에서 찾아온 신도들과 함께 치러져 동조성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이상은 20주년 행사위원회가 분류한 8가지 성격의 행사를 살펴본 것이다. 그 행사가 개최된 지역이나 행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20주년 기념행사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열렸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식은 비록 두 군데(광주 제외)에 불과했지만,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민단체의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렸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부산의 경우는 대동제까지 함께 열어 광주와 행동을 함께 했다. 이밖에 서울에서 7개 행사가 열렸으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으로도 18개의 행사가 열려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형태를 보였다.

### 3. 관심사항과 아쉬웠던 점

5·18 20주년 기념행사는 시대적 상황, 성년으로서의 상징성 등을 내세워 기념행사다운 행사를 치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행사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행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1회성 행사와 연속적인 행사가 병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회성 행사를 놓고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군부 정권에 의해 전 국민에게 고착화(박제화)된 5월에 대한 왜곡을 다시 그들과 같은 정치선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되돌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그 5월의 정신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나도록 하는 것이다. 행사가 많아진 것은 이러한 기회를 한 번 정도 가짐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이 차제에 오해를 풀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은 단지 5·18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5·18에서 시작된 ‘한국민주주의 20년’의 결실이 결국 전 국민들에 의해 맺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 기획의도였으며, 이것을 통해 동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데서 논란이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5월 17일에 있는 전야제가 두 군데에서 치러진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두 개의 전야제’가 극단적인 비판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양측은 이왕이면 전야제를 하나로 합쳐서 치르기를 바라며 여러 차례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나의 전야제를 기대했던 것은 비슷한 장소에서 두 개의 전야제가 열림으로써 행어나 물리적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염려해서였던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다. 그런데 두 개의 전야제가 별 탈 없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크게 비판을 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5월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광주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5·18은 광주시민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온 국민이 그 정신을 함께 해야 할 일이고, 이미 아시아 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술적 접근, 다양한 표현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과 예산배정이 보다 서둘러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20주년 행사도 예산이 3월 초순에야 결정이 되는 바람에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수준 높은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늦어도 행사 전년도 말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무형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5월 정신을 승화시키는데는 유형 무형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유형적인 면에 치중하다보니 시민들의 실천 방향, 5월 단체의 윤리강령, 정신을 계승할 도시계획의 방향 등이 소홀히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계획에서는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무형의 승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두 개의 전야제를 통해서 보았지만 이왕이면 하나의 행사로 통합하여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기념행사가 치루어지게 된다면 각 행사가 개성을 갖고 확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별개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주체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향후 기념행사의 성격을 공론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많은 당사자들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행사로 선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축제'로의 전환도 심각히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행사 주체의 역할에 대한 검토이다. 5·18 기념행사는

5·18 기념재단의 전유물은 아니다. 또 관련단체의 전유물도 아니다.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만들어내는 공동체 행사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힐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18 기념행사는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 '정신'과 '기념'이 박제화 되지 않고 '천년의 빛'으로 영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깊이 있는 평가와 아이디어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20주년 행사는 광주만의 행사에서 광주 밖의 행사로 전환을 시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다시 더 발전된 기념행사의 그림이 그려지기를 기대해 본다.